



# 2024 경제전망 III

## 2024 Economic Outlook III

[소득부문]





# 2024 경제전망 Ⅲ

- 소득 부문 -

## 2024 경제전망 III

### - 소득 부문 -

총괄 | 진 익 경제분석국장

기획·조정 | 예 승 우 경제분석총괄과장  
최 영 일 거시경제분석과장  
허 가 형 인구전략분석과장  
권 일 산업자원분석과장 직무대리  
홍 선 기 경제분석관  
황 종 료 경제분석관

작성 | 허 가 형 인구전략분석과장  
김 민 혁 경제분석관  
천 경 록 경제분석관  
이 소 연 (전)경제분석관

지원 | 이 하 영 행정실무원  
김 새 림 자료분석연구원

「2024 경제전망 시리즈」는 국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분석을 바탕으로 올해 우리 경제의 GDP 성장률 및 주요 부문별 경제전망을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와 의제 설정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 02) 6788-4749 | psad@nabo.go.kr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2024 경제전망 Ⅲ

- 소득 부문 -

2024. 3.

---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24. 3. 21.)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

## 발간사

최근 우리 경제의 생산요소별 소득의 분배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과 취업자수 증가 등으로 인해 노동의 대가로 가계에 분배된 소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장기적인 성장전략을 검토하는 측면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임금, 소비여력 등 소득 분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부문별 전망을 주요국의 동향 및 최근 경제환경과 함께 조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적시성 있는 정책의제 발굴과 국회의 예결산·법률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10월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시리즈」 발간 이후 변화된 국내외 경제여건을 분석하여 총 4권으로 구성된 「2024 경제전망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제Ⅲ권에서는 국민총소득을 비롯하여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순생산 및 수입세 등의 소득변수와 고용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2024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예상보다 양호한 수출 성장세 등을 고려하여 지난 10월 전망보다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법인소득 증대가 예상되어 영업잉여 성장률 전망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반면 피용자보수 성장률은 지난 10월 전망 대비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고용에 영향이 큰 내수 경기의 부진 등이 고용량 증가율과 임금상승률에 하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고정자본소모 증가율은 예상보다 빠른 자본재 가격의 안정화를 고려하여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순생산 및 수입세는 2023년 이례적인 하락의 기저효과로 2024년에는 지난 전망 대비 큰 폭의 반등이 예상됩니다. 반면 국내총소득은 국외순수취소득의 감소로 GDP 성장률에 미치지 못할 전망입니다.

본 보고서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효과적인 경제정책 마련을 위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2024년 3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 [NABO 2024년 소득 부문별 전망]

(단위: %)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명목 국내총소득(GDP=GDI)	3.9	3.4			5.0		
피용자보수	4.8	3.7			3.6		
(GDP 대비 비중)	47.6	47.7			47.1		
영업잉여	-3.2	5.5			7.1		
(GDP 대비 비중)	20.1	20.5			20.9		
고정자본소모	10.2	5.9			4.8		
(GDP 대비 비중)	22.1	22.6			22.6		
순생산 및 수입세	2.4	-7.1			8.4		
(GDP 대비 비중)	10.2	9.1			9.4		
국민처분가능소득(NDI)	2.9	3.1			3.9		
명목 국민총소득(GNI)	4.3	3.9			4.1		
취업자수 증감(만명)	81.6	37.2	28.3	32.7	18.2	23.3	20.7
(증감률)	3.0	1.3	1.0	1.2	0.6	0.8	0.7
경제활동참가율	63.9	64.1	64.5	64.3	64.2	65.3	64.7
고용률	62.1	62.2	62.9	62.6	62.2	63.3	62.8
실업률	2.9	3.0	2.5	2.7	3.2	3.0	3.1
임금상승률	4.9	2.4	2.6	2.5	2.7	3.1	2.9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추정치(2023년) 및 전망치(2024년), 분배국민소득 항목의 2022년 수치는 한국은행 잠정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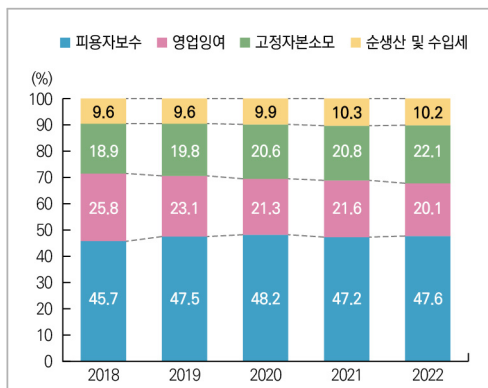
## 1. 동향

### 1. 분배국민소득

#### □ 분배국민소득을 통해 국내총소득이 노동과 자본, 정부에 분배된 현황을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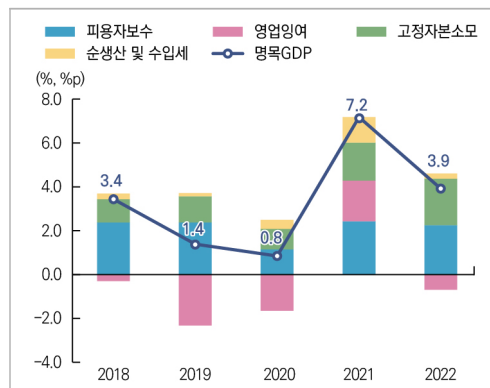
- 2022년 국내총소득(GDI)의 생산요소별 분배는 노동의 대가로 가계에 분배된 노동소득의 증가와 영업잉여의 감소로 나타남
  - 고용시장의 호조와 명목임금 상승으로 피용자보수의 기여도가 2.3%p로 높은 반면, 영업잉여는 2018년 이후의 하락세가 유지되어 -0.7%p의 기여도를 보임

| 국내총소득의 구성 |



자료: 한국은행

| 국내총소득 성장을 기여도 |



자료: 한국은행

#### □ 피용자보수는 지난 5년간(2018~2022년) 명목GDP보다 빠르게 증가

- 피용자보수는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4.5%로 연평균 명목GDP 증가율(3.3%)을 상회
- 피용자보수의 GDP 대비 비중은 추세적으로 상승하여 2018년 45.7%에서 2022년 47.6%로 1.9%p 상승

### □ 영업잉여는 2021년을 제외한 지난 5년간(2018~2022년) 하락세

- 영업잉여는 2018년 이후 명목GDP 성장률을 상회하는 피용자보수 증가율 등의 영향으로 2021년을 제외하면 꾸준히 하락하여, 명목GDP 대비 비중이 2018년 25.8%에서 2022년 20.1%로 하락

### □ 고정자본소모는 지난 5년간(2018~2022년) 큰 폭으로 증가

- 2018년 이후 연평균 7.1% 증가하여 명목GDP 성장률(3.3%)을 크게 상회, GDP 대비 비중은 2018년 18.9%에서 2022년 22.1%로 증가

### □ 순생산 및 수입세 규모는 지난 5년간(2018~2022년) 꾸준히 증가

- 순생산 및 수입세는 2018년(181.8조원)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순생산 및 수입세의 연평균 증가율은 4.4%를 기록
- 정부로 분배되는 몫이 증가해오면서 명목GDP 대비 순생산 및 수입세 비중이 2021년에는 10.3%까지 상승하였으나, 2022년에는 소폭(0.1%p) 하락

### □ 2022년 국민총소득은 전년대비 4.3% 성장했으며 기업소득의 비중 확대

- 경제주체별 분배에 따르면, 가계소득의 비중은 59.8%, 기업은 26.3%, 정부는 13.8%로 구성

## 2. 고용

### □ 2023년 하반기 고용량은 증가세 지속

- 취업자 수가 28만명 이상 증가하고 실업률도 2.5%를 기록하여 양호한 상황
- 다만, 취업자 증가세는 2022년 하반기 대비 크게 둔화하였으며 2023년 12월 부터는 실업률이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하는 추세

### □ 2023년 하반기 명목 임금은 2.6% 상승하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하회

- 상용직 특별급여 하락 등의 영향으로 낮은 상승률 기록, 하반기 물가상승률(3.3%)을 고려하면 실질임금 하락
- 2022년 하반기부터 실질임금은 하락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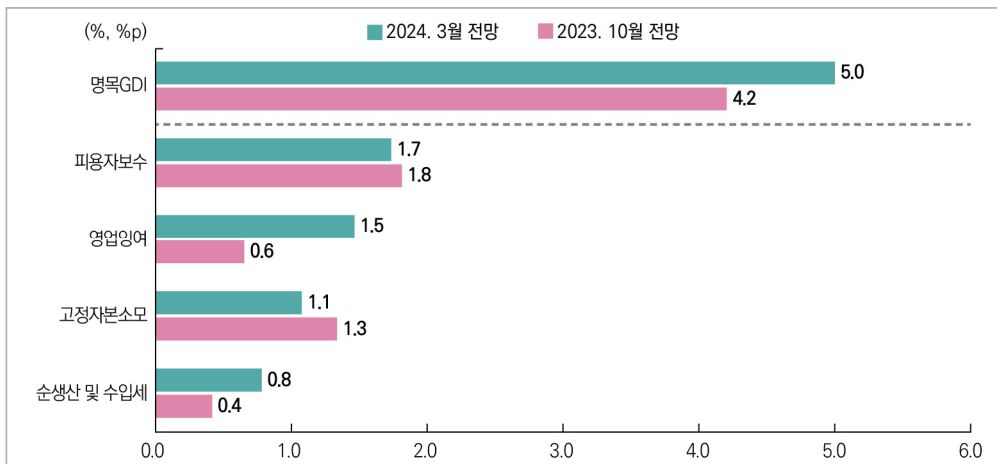


## II. 전망

### 1. 전망의 수정요인

- 2024년 국내총생산이 수출을 중심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관련 전망을 상향
  - 2024년 국내총생산이 수출을 중심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법인소득 증가를 예상하여 영업잉여 전망을 상향
  -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고정자본형성 디플레이터 등이 하향조정되어 피용자보수와 고정자본소모 전망을 하향
  - 순생산 및 수입세는 2023년의 기저효과와 명목GDP 성장률 상향조정을 반영하여 상향

| 2024년 분배국민소득 전망의 성장기여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024년 내수 관련 지표들은 하향조점됨에 따라 고용 전망을 하향

- 민간소비 등 내수 둔화 지속이 예상됨에 따라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을 하향, 실업률 전망은 상향
-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세에 못 미치는 고용 증가세 등을 고려하여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은 하향

## 2. 2024년 분배국민소득 전망

### □ 2024년 피용자보수는 3.6% 증가하여 전년대비 증가세 둔화 전망

- 고용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2024년 피용자보수 증가율은 2023년(3.7% 전망) 대비 0.1%p 하락 예상
- 2024년 피용자보수 증가율은 명목GDP 성장률(5.0% 전망)을 하회하여 GDP 대비 비중은 2023년 47.7%에서 47.1%로 0.6%p 하락할 전망

### □ 2024년 영업잉여는 7.1% 증가할 전망

- 명목GDP 성장률 개선, 피용자보수 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영업잉여 증가율은 2023년(5.5% 전망) 대비 1.6%p 증가 예상
- 2024년 영업잉여 증가율은 명목GDP 성장률(5.0% 전망)을 상회하여 GDP 대비 영업잉여 비중은 2023년 20.5%에서 2024년 20.9%로 증가 예상

### □ 2024년 고정자본소모는 4.8% 증가하여 전년대비 증가세 둔화 전망

- 자본재 물가 안정화,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부진 등의 영향으로 고정자본소모 증가율은 2023년(5.9% 전망) 대비 1.1%p 하락 예상
- GDP 대비 고정자본소모 비중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22.6%를 유지할 전망

### □ 2024년 순생산 및 수입세는 2023년의 기저효과로 8.4%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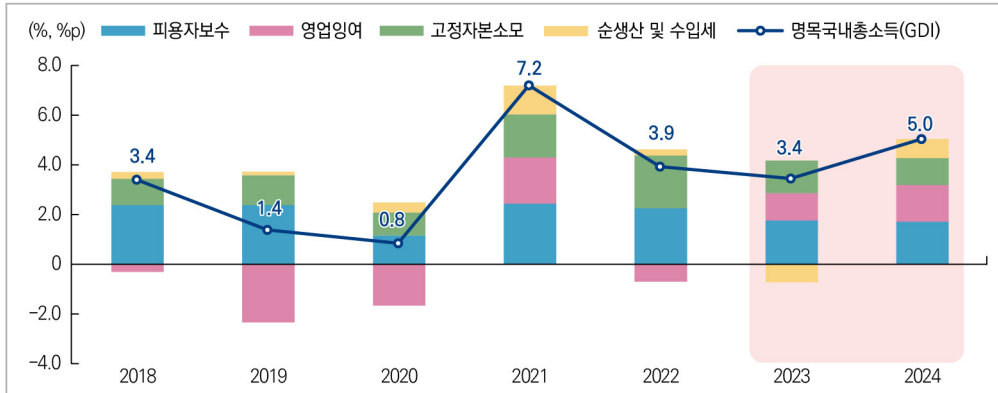
- 2023년 순생산 및 수입세는 통관수입 감소, 주택 공시가격 하락 등 세입여건 악화로 인해 이례적으로 감소(-7.1%)할 것으로 추정
- 2024년 순생산 및 수입세는 2023년의 기저효과에 더해 명목GDP가 5.0% 성장하고, 통관수입도 전년대비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23년 대비로는 8.4% 증가할 전망

### □ 2024년 국민총소득과 국민처분가능소득은 각각 4.1%와 3.9% 증가를 전망

- 순대외금융자산 증가율이 최근 낮아지고 있으며 2023년의 일시적 국외수취 자본소득 증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총소득 증가율은 명목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
- 국민처분가능소득의 증가율은 3.9%로 국민총소득 증가율을 하회할 전망



## | 2024년 분배국민소득 전망 |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추정치(2023년) 및 전망치(2024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3. 2024년 고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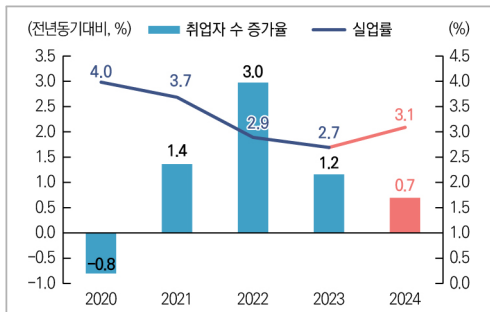
#### □ 2024년 취업자 수는 20.7만명(0.7%) 증가하여 전년대비 증가세 둔화 전망

- 민간 소비 둔화, 건설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 증가율은 2023년(1.2%) 대비 0.5%p 하락 예상
-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 증가하나 노동수요가 이를 흡수하지 못하여 실업률은 3.1%로 2023년(2.7%) 대비 0.4%p 증가 예상

#### □ 2024년 임금근로자의 명목임금은 2.9% 상승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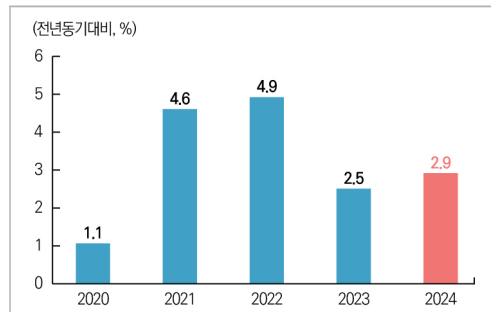
- 실업률 상승으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협상력 제약에도 불구하고, 2023년 실질임금 하락의 기저효과로 명목임금 상승률은 2023년(2.5%) 대비 0.4%p 증가

#### | 2024년 고용량 전망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 | 2024년 임금상승률 전망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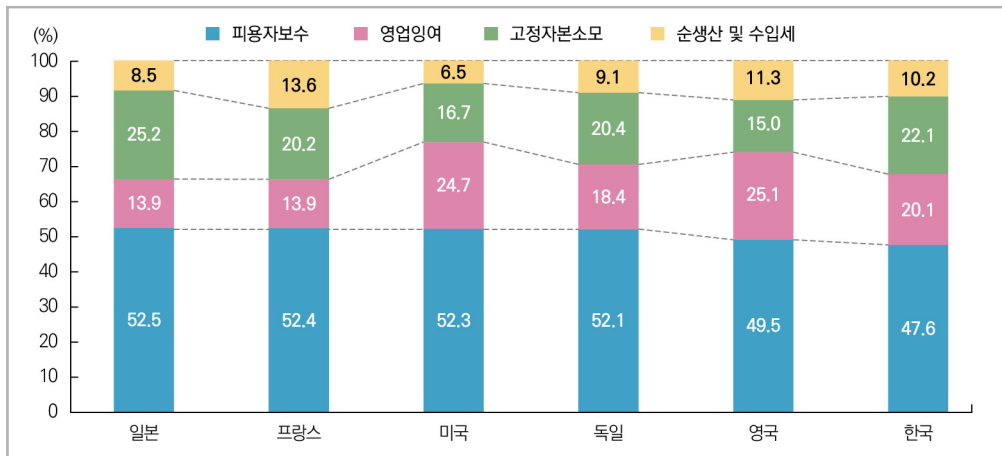
### III. 국제비교

#### 1. 주요국의 분배국민소득 구조 및 전망

##### □ 한국은 피용자보수의 비중이 작고, 고정자본소모의 비중이 큰 편

- 일본, 프랑스, 미국, 독일의 피용자보수의 GDP 대비 비중은 52%대로 유사하며, 영국과 한국은 소폭 낮은 49.5%와 47.6%
- 영업잉여는 국가별 차이가 큰 항목으로 미국은 24.7%로 높은 반면 일본은 영업잉여 비중이 13.9%로 낮은 편
- 순생산 및 수입세의 비중은 프랑스 13.6%, 영국 11.3%로 높으며, 한국도 10.2%로 높은 국가에 속함

| 주요국의 2022년 분배국민소득 구조 |



주: OECD는 영업잉여와 고정자본소모를 합산하여 총영업잉여(Gross operating surplus and gross mixed income)로 발표하지만, 한국은행 분배국민소득과 동일한 구성의 비교를 위해 자본계정의 고정자본소모(KIMS1)를 적용하여 구분

자료: OECD statistics

##### □ 분배국민소득의 전망은 재정전망과 경제전망의 활용에 따라 전망항목에 차이

-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분배국민소득 관련 전망치로 피용자보수와 기업 이익(corporate profit), 그 밖에 자산소득을 전망
  - 급여세(payroll tax)와 법인세(corporate tax)의 세입 전망에 활용
- 유럽연합 및 영국은 중앙은행의 경제전망에서 GDP 전망에 필요한 근거를 확보하는 일환으로, 노동소득인 피용자보수와 처분가능소득을 전망하고 이를 통해 민간소비와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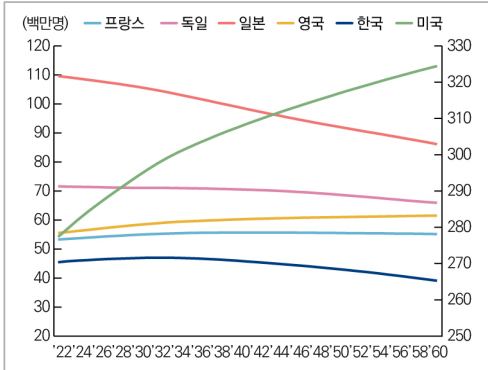


## 2. 노동가능인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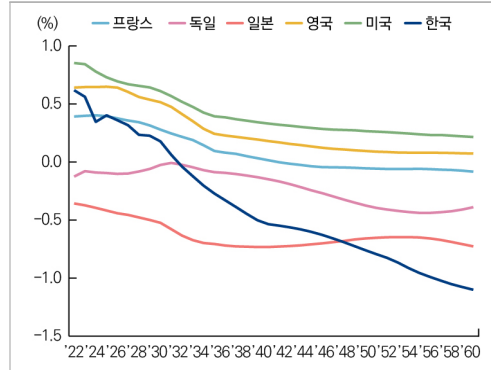
### □ 주요국의 고령화를 고려할 때 노동가능인구의 연령대별 전망이 필요

- 노동가능인구는 15세 이상의 인구를 의미하며, 2022년 기준 일본은 감소세에 있으며 한국은 2030년 이후, 프랑스는 2040년 이후 감소할 전망

| 주요국 노동가능인구 수 전망 |



| 주요국 노동가능인구 증가율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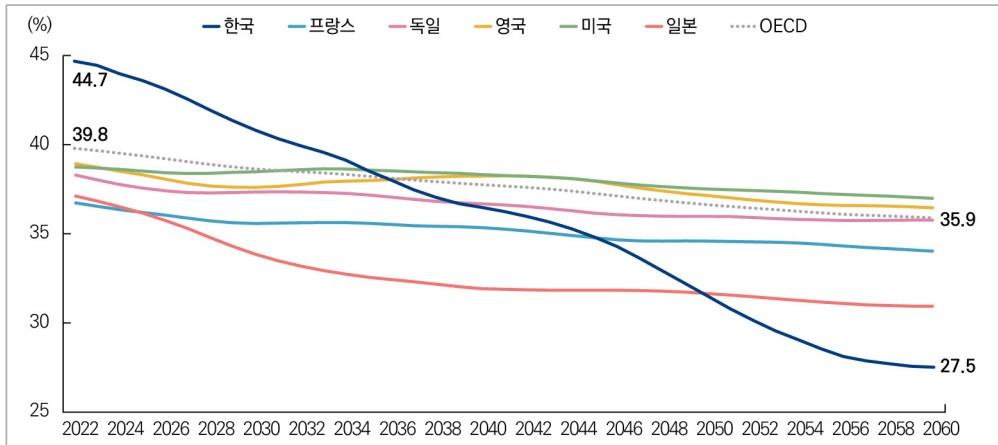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한국), OECD population projection(주요국)

### □ 한국의 핵심노동인구(25~54세)는 빠르게 하락할 전망

- 한국의 2022년 기준 핵심노동인구의 비중은 44.7%로 주요국 중 가장 높지만, 2060년에는 27.5%까지 빠르게 하락할 전망

| 주요국 핵심노동인구 비중 전망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한국), OECD population projection(주요국)

### 3. 주요국 고용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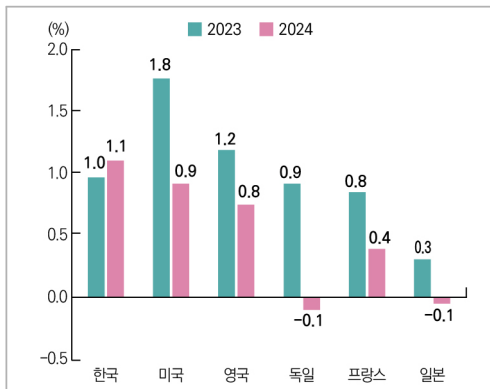
#### □ 2024년 주요 OECD국가의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전년대비 둔화 전망

- OECD(2023)는 주요 OECD 국가의 경제활동인구 증가세는 유지되지만 증가율은 전년대비 둔화될 것으로 전망
  - 한국(1.0%→1.1%), 미국(1.8%→0.9%), 영국(1.2%→0.8%), 프랑스(0.8%→0.4%), 독일(0.9%→-0.1%), 일본(0.3%→-0.1%)
- 세계노동기구(ILO)는 전세계의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전년도의 2.0%에서 0.8%로 큰 폭 둔화되며, 특히 아시아 및 태평양의 둔화폭이 큰 것으로 전망
  - 전세계(2.0%→0.8%), 아시아 및 태평양(2.3%→0.4%), 아메리카(1.2%→0.8%), 아프리카(3.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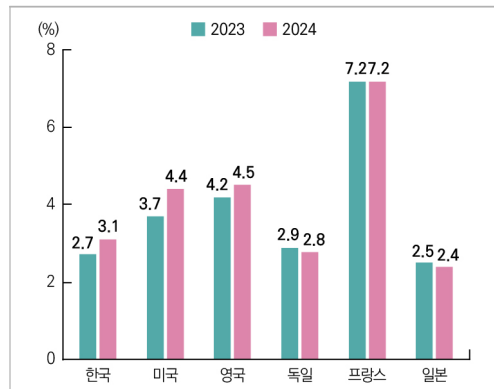
#### □ 2024년 주요 OECD국가의 실업률은 전년대비 낮은 수준의 증가 또는 감소

- OECD(2023)는 2024년 주요 OECD 국가의 소비 및 투자 둔화로 기업의 고용 유인이 감소하여 신규 취업자수 증가세 둔화가 이어지고 실업률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
  - 한국(2.7%→3.1%), 미국(3.7%→4.4%), 영국(4.2%→4.5%), 독일(2.9%→2.8%), 프랑스(7.2%→7.2%), 일본(2.5%→2.4%)

| 주요국 경제활동인구 전망 |



| 주요국 실업률 전망 |



주: 한국 자료는 2023년 실측치(통계청)와 2024년 전망치(국회예산정책처)를 제시하였고, 그 외 국가들은 OECD의 2023~2024년 전망치를 제시하였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OECD



## 제 I 부 동향

제1장 분배국민소득	3
제2장 고용	24

## 제 II 부 전망

제1장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35
제2장 피용자보수	38
제3장 영업잉여	41
제4장 고정자본소모	43
제5장 순생산 및 수입세	45
제6장 국민총소득	51
제7장 고용	57

## 제 III 부 국제비교

제1장 주요국의 분배국민소득 구조 및 전망 사례	67
제2장 노동가능인구 전망	79
제3장 고용 전망	82

# BOX 차례

[BOX 1] 고정자본소모 추정 방법 .....	14
[BOX 2] 2023년 국세수입 실적 .....	49
[BOX 3]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순저축 전망 .....	56
[BOX 4] 고용과 민간소비 및 수출 간 관계 비교 .....	59
[BOX 5] 주요국 고정자본소모 증가와 고정자본형성 .....	71
[BOX 6] 주요국 연령별 고용률 변화 .....	86





## [제 II 부]

[표 II-1] 2024년 분배국민소득 수정 전망 .....	36
[표 II-2] 2024년 고용 수정전망 .....	37
[표 II-3] 임금근로자 증가율 및 임금상승률 전망치 .....	39
[표 II-4] 주요 세목의 2024년 1월 국세수입 실적 .....	47
[표 II-5] 외국인 취업자의 월평균임금 구성비 .....	54

## [제 III 부]

[표 III-1] 미국 의회예산처의 소득 전망과 세입 전망 .....	73
[표 III-2] 오스트리아 저축률 전망 .....	76

# 그림 차례

## [제 I 부]

[그림 I-1] 국내총소득의 구성 .....	3
[그림 I-2] 국내총소득 성장률 기여도 .....	3
[그림 I-3] 피용자보수 및 GDP 대비 비중 .....	4
[그림 I-4] 피용자보수 구성 변화 .....	6
[그림 I-5] 임금 및 급여 증가요인 .....	6
[그림 I-6] 고용주의 실제 사회부담금 증가 요인 .....	7
[그림 I-7] 사회보험 가입률 추이 .....	7
[그림 I-8] 영업잉여 및 명목GDP 대비 비중 .....	9
[그림 I-9] 제도부문별 영업잉여 동향 .....	10
[그림 I-10] 영업잉여와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	10
[그림 I-11] 자영업자 및 혼합소득 동향 .....	11
[그림 I-12] 고정자본소모 및 명목GDP 대비 비중 .....	12
[그림 I-13] 고정자산 유형별 고정자본형성 디플레이터 증가율 .....	13
[그림 I-14] 국민계정상 조세 및 보조금의 분류 체계 .....	17
[그림 I-15] 순생산 및 수입세 및 명목GDP 대비 비중 .....	17
[그림 I-16] 생산 및 수입세와 보조금 추이 .....	18
[그림 I-17] GNI 성장률 추이 .....	19
[그림 I-18] GNI 성장률 기여도 .....	19
[그림 I-19] 국외순수취요소소득 증가율 .....	20
[그림 I-20] 국외순수취요소소득 .....	20
[그림 I-21] GNI의 생산요소간 분배 .....	21
[그림 I-22] GNI의 제도부문별 구성의 변화 .....	21
[그림 I-23] 국민처분가능소득의 구성 .....	22
[그림 I-24] 국민처분가능소득의 분배 .....	22



[그림 Ⅰ-25] 국민처분가능소득의 처분 .....	23
[그림 Ⅰ-26] 취업자 수 변화 .....	24
[그림 Ⅰ-27]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변화 .....	25
[그림 Ⅰ-28] 실업률 변화 .....	25
[그림 Ⅰ-29] 서비스업 주요 업종별 취업자 수 변화 .....	26
[그림 Ⅰ-30]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	26
[그림 Ⅰ-31] 연령대별 취업자 수 증감 .....	26
[그림 Ⅰ-32] 15~29세 취업자 수 변화 분해 .....	27
[그림 Ⅰ-33] 60세 이상 취업자 수 변화 분해 .....	27
[그림 Ⅰ-34] 성별 취업자 수 증감 .....	28
[그림 Ⅰ-35] 빈일자리 변화 .....	28
[그림 Ⅰ-36]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수준 및 임금상승률 변화 .....	28
[그림 Ⅰ-37] 상용직 임금변화 분해 .....	29
[그림 Ⅰ-38] 임시·일용직 임금상승률 분해 .....	29
[그림 Ⅰ-39] 2023년 상하반기 산업별 임금상승률 .....	30

## [제 Ⅱ 부]

[그림 Ⅱ-1] 2024년 분배국민소득 전망의 성장기여도 .....	36
[그림 Ⅱ-2] 피용자보수와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	39
[그림 Ⅱ-3] 2024년 피용자보수 증가율 전망 .....	40
[그림 Ⅱ-4] 영업잉여와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	42
[그림 Ⅱ-5] 2024년 영업잉여 증가율 전망 .....	42
[그림 Ⅱ-6] 고정자본소모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	44
[그림 Ⅱ-7] 2024년 고정자본소모 증가율 전망 .....	44

[그림 Ⅱ-8] 2024년 순생산 및 수입세 증가율 전망 .....	46
[그림 Ⅱ-9] 2024년 순생산 및 수입세의 명목GDP 대비 비중 전망 .....	47
[그림 Ⅱ-10] 순생산 및 수입세와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	48
[그림 Ⅱ-11] 국민총소득과 국외순수취요소소득 .....	52
[그림 Ⅱ-12] 순대외금융자산 .....	53
[그림 Ⅱ-13]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 .....	53
[그림 Ⅱ-14] 체류외국인 현황 .....	54
[그림 Ⅱ-15] 국민처분가능소득의 구성 .....	54
[그림 Ⅱ-16] 국외순수취요소소득과 본원소득수지 .....	55
[그림 Ⅱ-17] 국외경상이전과 이전소득수지 .....	55
[그림 Ⅱ-18] 국민처분가능소득 전망 .....	55
[그림 Ⅱ-19] 2024년 취업자 수 및 실업률 전망 .....	58
[그림 Ⅱ-20]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명목 및 실질 임금상승률 변화 .....	62

### [제 Ⅲ 부]

[그림 Ⅲ-1] 주요국의 2022년 분배국민소득 구조 .....	67
[그림 Ⅲ-2] 주요국의 2022년 분배국민소득 기여도 비교 .....	68
[그림 Ⅲ-3] GDP 대비 피용자보수 비중 .....	69
[그림 Ⅲ-4] GDP 대비 총영업잉여 비중 .....	69
[그림 Ⅲ-5] GDP 대비 고정자본소모 비중 .....	69
[그림 Ⅲ-6] GDP 대비 영업잉여 비중 .....	69
[그림 Ⅲ-7] 주요국의 GDP 대비 순생산 및 수입세 비중 .....	70
[그림 Ⅲ-8] 미국 피용자보수 전망 .....	74
[그림 Ⅲ-9] 미국 기업이익 전망 .....	74



[그림 Ⅲ-10] 독일 처분가능소득 전망 .....	75
[그림 Ⅲ-11] 독일 저축률 전망 .....	75
[그림 Ⅲ-12] 오스트리아 가계 처분가능소득 전망 .....	76
[그림 Ⅲ-13] 프랑스 처분가능소득 전망 .....	77
[그림 Ⅲ-14] 프랑스 가계 저축률 전망 .....	77
[그림 Ⅲ-15] 아일랜드 처분가능소득 전망 .....	78
[그림 Ⅲ-16] 영국 처분가능소득 전망 .....	78
[그림 Ⅲ-17] 주요국 노동가능인구 수 전망 .....	79
[그림 Ⅲ-18] 주요국 노동가능인구 증가율 전망 .....	79
[그림 Ⅲ-19] 주요국 핵심노동인구 비중 전망 .....	80
[그림 Ⅲ-20] 주요국 55세 이상 인구 비중 전망 .....	81
[그림 Ⅲ-21]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전망 .....	82
[그림 Ⅲ-22] 지역별 취업자수 증가율 전망 .....	83
[그림 Ⅲ-23] 주요국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전망 .....	83
[그림 Ⅲ-24] 주요국 실업률 전망 .....	85



동향

I

제1장 분배국민소득

제2장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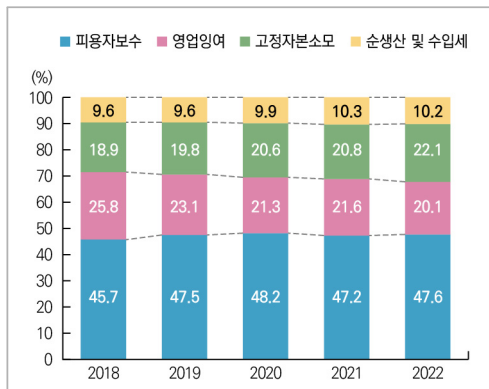


## 제1장 분배국민소득

- ▶ 2022년 명목 **국내총소득(GDI)**은 전년대비 3.9% 증가하였으며, 생산요소별 소득의 분배 측면에서 노동의 대가로 가계에 분배된 소득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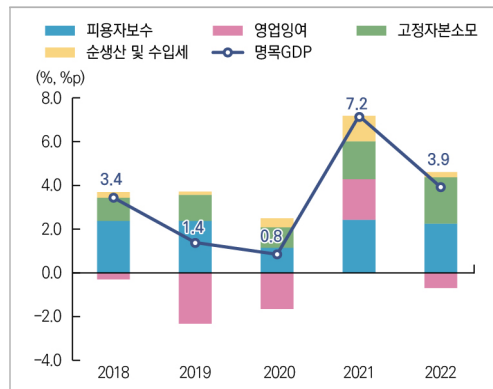
2022년 국내총소득(Gross Domestic Income, 이하 GDI)<sup>1)</sup>의 분배는 노동소득의 증가와 자본소득의 감소로 나타났다. 낮은 실업률과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인 고용시장의 호조,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해 노동소득 분배분이 높아졌다. 반면, 기업 및 재산소득에 해당하는 영업잉여는 2018년 이어진 하락세가 유지되어 2022년 기준 GDP 대비 20.1%를 기록하였다. 2022년의 국내총소득 성장률은 3.9%로 이 중 노동소득의 기여도가 2.3%p로 높고, 자본소득의 기여도는 영업잉여와 고정자본소모를 합하여 1.4%p이다.

| 그림 I-1 | 국내총소득의 구성



자료: 한국은행

| 그림 I-2 | 국내총소득 성장률 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hurgh@assembly.go.kr, 6788-47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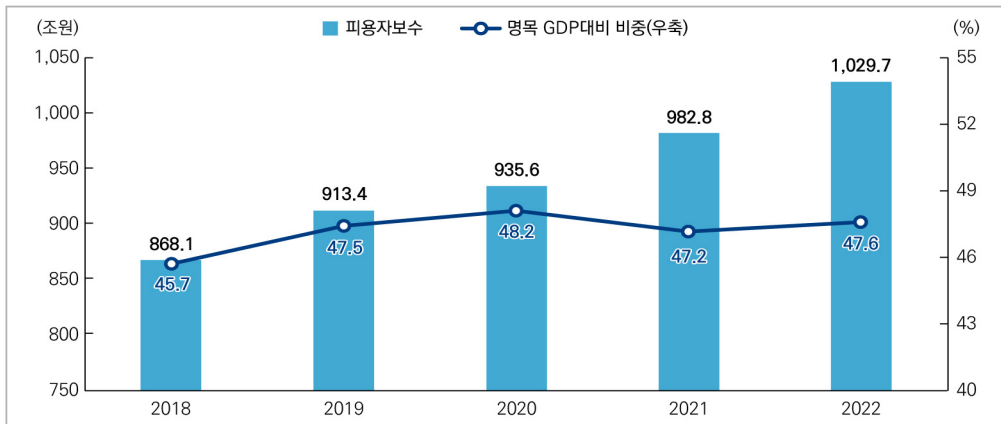
1) 명목 국내총소득은 국내 거주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실질 무역 손익을 더하여 구하며, 구매력을 보여주는 소득지표이다. '국민소득 삼면등가의 원칙'에 따라 명목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이하 GDP)과 동일한 값을 의미한다.

## 1. 피용자보수

- ▶ **피용자보수**는 한 국가의 생산활동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중 노동에 대한 대가로 분배 되는 임금과 급여, 부가급부 등의 의미<sup>2)</sup>
- ▶ **2022년 피용자보수**는 1,029.7조원으로 명목GDP의 47.6%를 차지
  - 피용자보수 비중은 2021년(47.2%)보다 0.4%p 상승

2022년 기준 피용자보수는 전년대비 4.8% 증가한 1,029.7조원으로 명목 GDP의 47.6%를 차지하였다. 2018년 이후 피용자보수는 연평균 약 4.5%의 속도로 증가하여 동기간 명목GDP의 연평균 성장률 3.3%를 상회하였다. 그 결과 피용자보수의 GDP 대비 비중은 추세적으로 상승하여 2018년 45.7%에서 2022년 47.6%로 1.9%p 상승하였다.

| 그림 I-3 | 피용자보수 및 GDP 대비 비중



자료: 한국은행

천경록 경제분석관(chunkr21@assembly.go.kr, 6788-4751)

2) 피용자보수는 임금 및 급여와 각종 수당, 통근비 등 보조수당, 특별보너스, 피고용자가 받는 커미션, 봉사료, 기타 피고용자 가족들이 사용하는 주거서비스, 피고용자가 작업장 밖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유니폼, 피고용자가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되는 차량 또는 기타 내구재의 서비스, 생산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피고용자가 무상 또는 할인가격으로 이용하는 경우, 피고용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스포츠 및 휴양시설, 통근수송, 주차, 피고용자 자녀의 탁아소, 피고용자가 주택, 가구 등을 구입할 때 고용주가 저리 대출을 제공한 경우 고용주의 이자부담액 등을 포함한다. 또한 고용주가 피고용자를 수혜자로 하여 사회보장기구나 민간기금, 사회보험기구 등에 납부하는 실제 사회부담금과 고용주가 비기금형 사회수혜금으로 제공하는 귀속 사회부담금을 포함한다. (자료: 연미숙, 「분기 분배국민소득 집계방법 연구」, 한국은행,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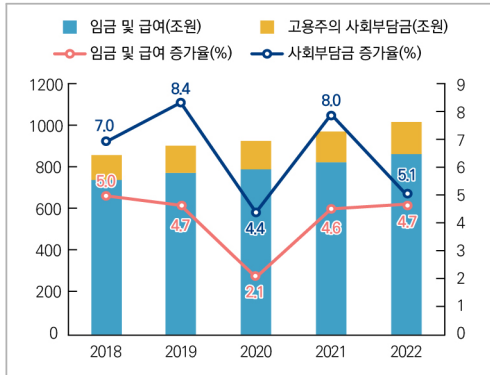
피용자보수는 임금근로자가 수행한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한 현금 및 현물 총액을 의미하므로 임금 뿐 아니라 현물로 지급되는 급여 및 급여성 대가와 고용주가 지급하는 사회부담금(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및 퇴직급여 등)을 포괄한다. 이 중 임금 및 현물 급여는 소득계정의 본원소득분배 계정에서 '임금 및 급여' 항목으로 계상되며 사회부담금은 '고용주의 사회부담금'으로 계상된다. 2022년 기준 임금 및 급여가 피용자보수의 85.0%를 차지하고 고용주의 사회부담금은 15.0%를 차지한다. 2018년 이후 임금 및 급여는 연평균 4.0% 증가한 반면 사회부담금은 6.5% 증가하여 사회부담금의 비중이 점차 커지는 추세를 보인다.

임금 및 급여의 증가 요인은 평균 임금 증가율과 임금근로자 증가율로 분해하여 살펴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로 파악되는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2018년 이후 2022년까지 연평균 3.5% 증가하였으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로 파악되는 임금근로자 수는 동기간 연평균 1.7% 증가하여 임금소득 총액은 연평균 5.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sup>3)</sup> 임금 및 급여는 동기간 연평균 4.0% 증가하여 임금소득 총액보다 1.3%p 느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현물 또는 기타 비임금 급여에 해당하는 근로자 1인당 복지비용<sup>4)</sup>이 연평균 3.3% 증가에 그친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자 1인당 복지비용 증가율이 0.1%에 그친 2022년에는 임금소득 총액 증가율(8.5%)과 임금 및 급여 증가율(4.7%) 간의 괴리가 특히 크게 나타난다.

3) 임금소득 총액은 임금근로자 수×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으로 정의하였다. 임금소득 총액은 피용자보수의 '임금 및 급여' 중 순수 임금 부분에 해당하여 현물 급여, 복지 지출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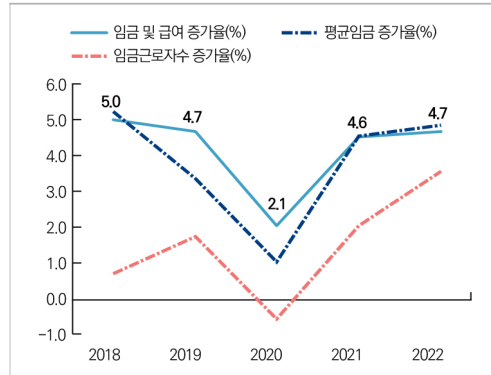
4) 고용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의 '법정의 복지비용'으로 측정

그림 I-4 | 피용자보수 구성 변화



자료: 한국은행

그림 I-5 | 임금 및 급여 증가요인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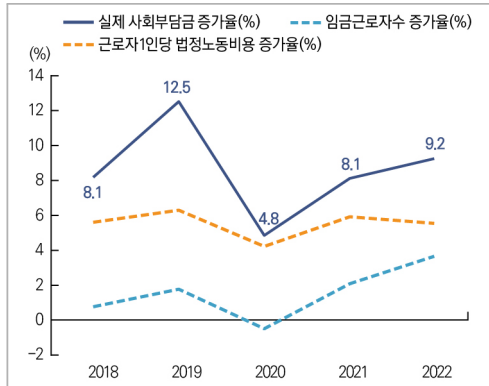
고용주의 사회부담금은 고용주가 피고용자를 수혜자로 하여 사회보험기구 등에 납부하는 실제 사회부담금과 고용주가 사회보험기구에 가입하지 않고 사유 발생시 자체재원으로 피고용자나 그 가족에게 지급하는 수혜금, 즉 의제 사회부담금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sup>5)</sup> 2022년 기준 의제 사회부담금은 전체 사회부담금의 6.2%로 비중이 작아 실제 사회부담금을 중심으로 변동요인을 분석하였다. 고용주의 실제 사회부담금은 2018~2022년 중 연평균 8.6% 증가하여 동 기간 중 고용주의 전체 사회부담금(연평균 6.5% 증가) 증가의 주 요인이었다. 고용주의 실제 사회부담금 증가율은 임금근로자 1인당 실제사회부담금 증가율과 임금근로자 증가율로 분해할 수 있다. 2018~2022년 중 임금근로자 수가 연평균 1.7% 증가하였음을 고려하면 근로자 1인당 실제 사회부담금은 연평균 6.8%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자 1인당 고용주의 실제 사회부담금 중 4대 사회보험료 등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고용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자료의 '법정 노동비용'으로 파악 가능하다.<sup>6)</sup> 동 법정 노동비용은 2018~2022년 중 연평균 5.5% 증가하여 근로자 1인당 실제 사회부담금 상승의 주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체계」, 2020, p.194

6) 고용노동부의 통계 설명자료에 의하면 '법정 노동비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담금, 재해보상비 등 법령에 따라서 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노동비용"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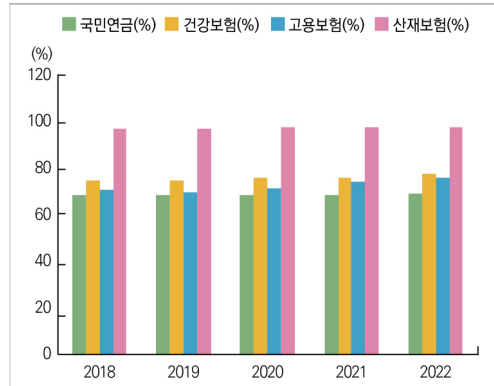
고용주의 실제 사회부담금 중 4대 사회보험료는 근로자 임금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임금 인상률만큼 증가하게 되어 있다. 또한 4대 사회보험은 일부 일용직 및 초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한 대다수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임에도 2023년 기준 직장가입자 가입률이 건강보험 78.9%, 국민연금 69.6% 등에 머무르고 있어,<sup>7)</sup> 추후 가입률 확대 여지를 고려하면 고용주의 사회부담금은 추가 상승 요인이 존재한다. 이에 더해 건강보험 등의 보험료율은 매년 인상되는 추세이며 2007년 이후 소득의 9%로 동결된 국민연금요율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인상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고용주의 사회부담금 증가율은 임금소득 증가율을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

|그림 I-6| 고용주의 실제 사회부담금 증가 요인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고용노동부

|그림 I-7| 사회보험 가입률 추이



자료: 통계청, 고용노동부

7)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 2. 영업잉여

- ▶ **영업잉여**는 경제주체가 생산활동에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이익
  - 부가가치 총액에서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순생산 및 수입세를 차감하여 산출
- ▶ **2022년 영업잉여**는 434.7조원으로 명목GDP의 20.1%를 차지
  - 영업잉여는 지난 5년간 연평균 2.6% 감소
  - 명목GDP 대비 영업잉여 비중은 2021년(21.6%) 보다 1.5%p 하락

(전년대비, %)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 ~2022
-1.1	-9.0	-7.1	8.7	-3.2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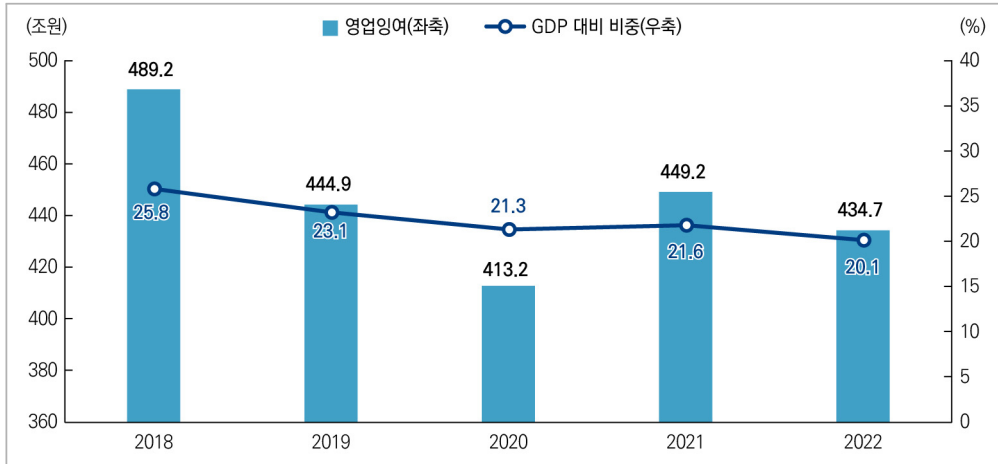
영업잉여(operating surplus)는 경제주체가 생산활동에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이익을 의미한다.<sup>8)</sup> 단, 자영업자 등 가계 비법인 기업의 소득에는 자본에 대한 대가와 노동에 대한 대가가 섞여 있는데, 국민계정은 이를 영업잉여에 포함시키기는 하지만 혼합소득(mixed income)이라는 하위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영업잉여는 한 해 동안의 생산활동으로 발생한 부가가치 총액에서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순생산 및 수입세를 차감한 잔차로 구한다.

영업잉여 비중은 1980년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자본의 한계수익률이 낮아지고 자영업자의 비중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업잉여의 GDP 대비 비중만이 아니라 절대적 수준 또한 감소하는 추세다. 2018~2022년 중에는 2021년을 제외하면 영업잉여가 매년 감소하여 연평균 -2.6%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2022년 수준값은 2017년 대비 12.1% 하락하였고 명목GDP 대비 비중은 26.9%에서 20.1%로 6.8%p 하락하였다.

천경록 경제분석관(chunkr21@assembly.go.kr, 6788-4751)

8) 한국은행은 이 밖에도 영업잉여를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잉여로서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금융자산, 토지, 기타유형의 비생산자산에 대한 명시적 또는 암묵적 이자, 임료, 기타 재산소득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으로 규정한다.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p.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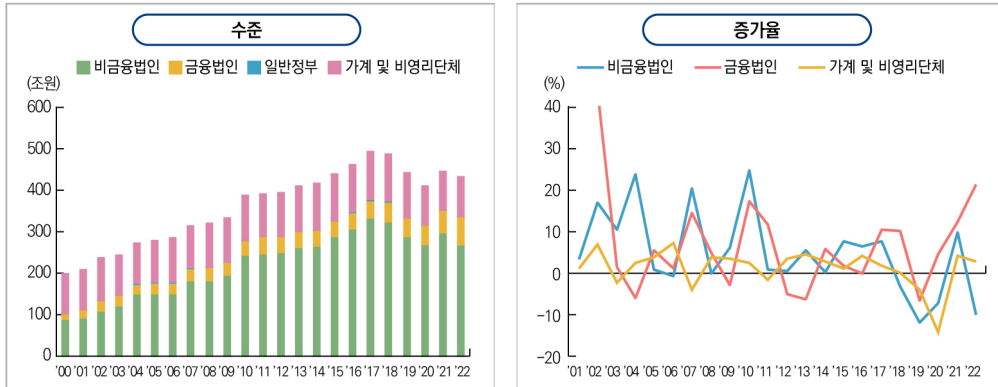
그림 I-8 | 영업잉여 및 명목GDP 대비 비중



자료: 한국은행

영업잉여의 제도부문별 비중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으로 비금융법인이 전체 영업잉여의 61.8%를 차지하여 비중이 가장 크고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22.8%, 금융법인이 15.2%, 정부가 0.2%를 차지한다. 2000년에 비금융법인이 44.4%,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49.6%, 금융법인이 5.6%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장기적으로 법인 비중이 확대되고 가계 비중이 축소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2018~2022년 기간의 영업잉여 하락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문은 비금융법인으로, 동 부문의 영업잉여는 2022년 9.2% 하락하는 등 2021년을 제외하면 2018년부터 매년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친 부문은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 가계 및 비영리단체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는 2018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락하였다가 이후 소폭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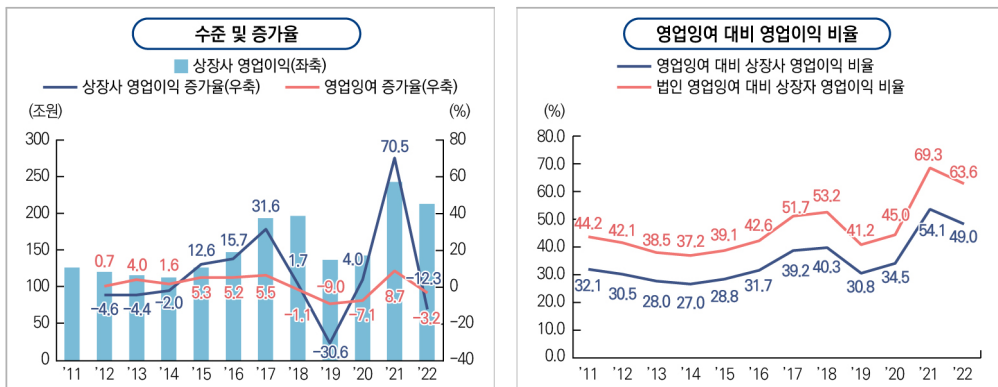
그림 I-9 | 제도부문별 영업잉여 동향



자료: 한국은행

법인 영업잉여는 기업 손익계산서의 이익항목 중 영업이익과 개념상 가장 유사하다. 따라서 회계자료가 제공되는 코스피(KOSPI) 상장기업의 영업이익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영업잉여와 유사한 동향을 보인다. 특히 2019년(30.6% 하락), 2021년(70.5% 증가), 2022년(12.3% 하락)의 증감은 영업잉여의 증감률과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 전체 영업잉여 대비 상장기업 영업이익의 비율은 상장기업 영업이익 규모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2021년 상장기업 영업이익이 70.5% 증가한 결과 영업잉여 대비 영업이익 비율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54.1%를 기록하였고 2022년 상장기업 영업이익이 12.3% 하락함에 따라 영업잉여 대비 비율도 49.0%로 하락하였다.

그림 I-10 | 영업잉여와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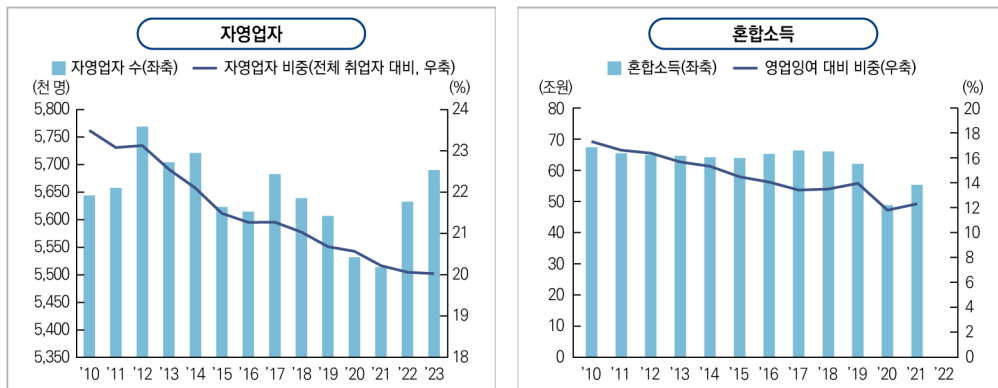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Fn가이드



GDP 대비 영업잉여 비중의 최근 감소세는 자영업자 비중 감소와도 무관하지 않다. 자영업자 비중의 감소는 (자영업자 1인당 혼합소득이 GDP보다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 이상) GDP 대비 혼합소득의 비중에도 하방 압력을 가하며, 따라서 자영업자의 혼합소득을 포함하는 영업잉여의 GDP 대비 비중에도 하방 압력을 가한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010년 23.5%에서 2023년 20.0%로 3.5%p 하락하였다. 혼합소득에 대한 자료는 2021년까지만 가용하여 최신 동향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2010년 68.0조원에서 2021년 55.8조원으로 12.2조원 하락하였다. 단, 취업자 수가 이례적으로 증가한 2022~2023년에는 자영업자 수도 2021년 대비 10만명 이상 증가하여 2022~2023년 혼합소득은 2021년 대비 증가할 수 있다.

| 그림 I-11 | 자영업자 및 혼합소득 동향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3. 고정자본소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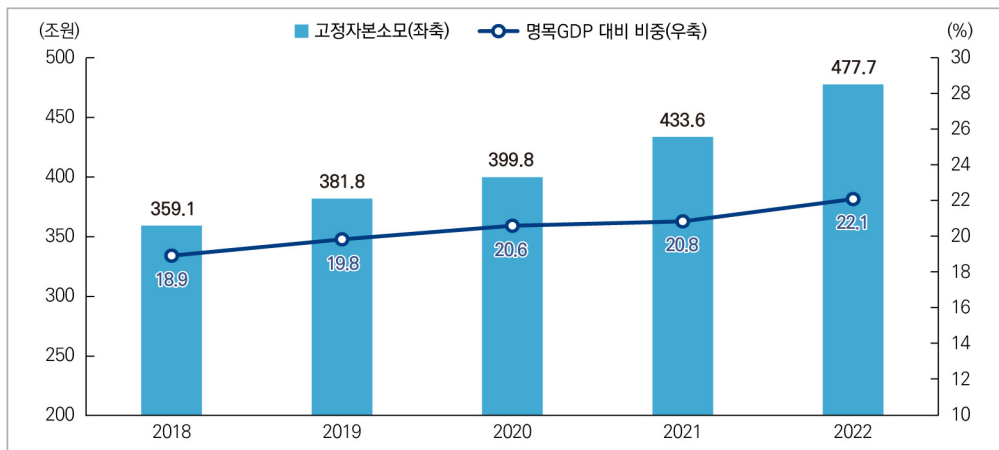
- ▶ 고정자본소모는 생산활동에 사용된 고정자산의 가치 감소분
- ▶ 2022년 고정자본소모는 477.7조원으로 명목GDP의 22.1%를 차지
  - 고정자본소모는 지난 5년간 연평균 7.1% 증가
  - 고정자본소모의 비중은 2021년(20.8%) 보다 1.3%p 증가

(전년대비, %)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 ~2022
5.7	6.3	4.7	8.5	10.2	7.1

고정자본소모(consumption of fixed capital)는 한 해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소모된 고정자본의 가치를 의미한다. 생산활동에 사용된 고정자산이 마모되거나 진부화되어 가치가 감소하는 정도를 의미하므로, 기술발전의 속도가 빨라지고 경제구조가 자본집약형으로 자본의 비중이 커질수록 고정자본소모도 커지게 된다. 명목GDP 중 고정자본소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7.2%에서 2022년 22.1%로 증가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8~2022년 기간 중 고정자본소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7.1%로 명목GDP의 연평균 증가율 3.3%를 크게 상회하였다.

| 그림 I-12 | 고정자본소모 및 명목GDP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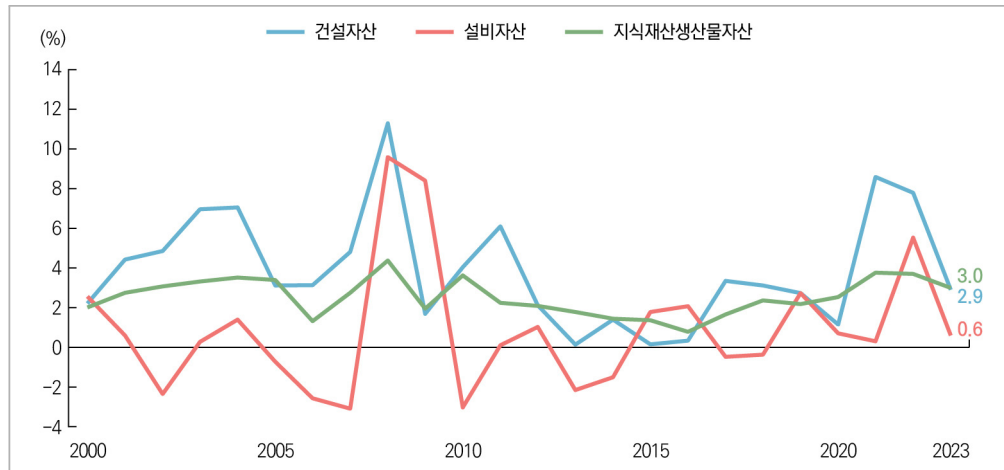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천경록 경제분석관(chunkr21@assembly.go.kr, 6788-4751)

고정자본소모는 특히 2022년에 10.2%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건설자재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건설자산 등의 고정자본형성 디플레이터가 대폭 증가한 결과로 보인다. 2023년에는 자산 유형별 고정자본형성 디플레이터가 예년 수준으로 하락한 점을 고려할 때, 2021~2022년의 높은 고정자본소모 증가세는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고정자본소모 증가율은 지식재산생산물자산 투자 증가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는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를수록 연구개발 투자도 활발해지고 기존 자본스톡의 진부화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그림 I-13 | 고정자산 유형별 고정자본형성 디플레이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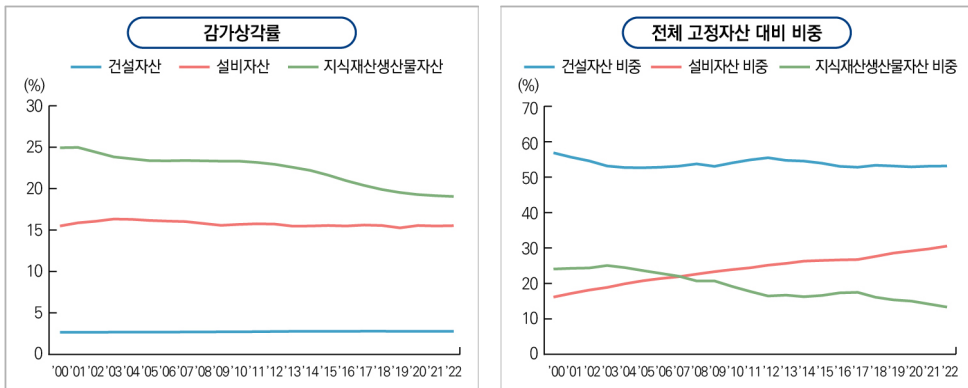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BOX 1] 고정자본소모 추정 방법

고정자본소모는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3대 고정자산(건설자산, 설비자산, 지식재산생산물자산)의 실질 가치 감소분에 대한 평가액으로서, 각 자산의 실질 가치 감소분에 당해 연도 자본재 가격이 반영된 (자산유형별)고정자본형성 디플레이터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고정자산의 실질 가치 감소분은 자본축적 방정식<sup>9)</sup>에서 감가상각률과 전기의 자본스톡을 곱한 항 ( $\delta K_{t-1}$ )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감가상각률은 관측되는 값이 아니므로  $\delta K_{t-1}$ 은 당해 연도 고정자본형성( $I_t$ )에서 당해 연도 고정자본스톡 변화량 ( $K_t - K_{t-1}$ )을 차감한 값으로 추정된다.<sup>10)</sup> 이렇게 추정된 고정자산의 실질 가치 감소분을 다시 전년도 자본스톡( $K_{t-1}$ )으로 나누면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률( $\delta$ )도 추정할 수 있다.

기존 자산이 마모되거나 진부화하여 가치가 하락하는 속도를 의미하는 감가상각률은 고정자산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기술발전 속도가 가장 빠른 지식재산생산물자산의 감가상각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기술발전의 영향을 덜 받는 건설자산의 감가상각률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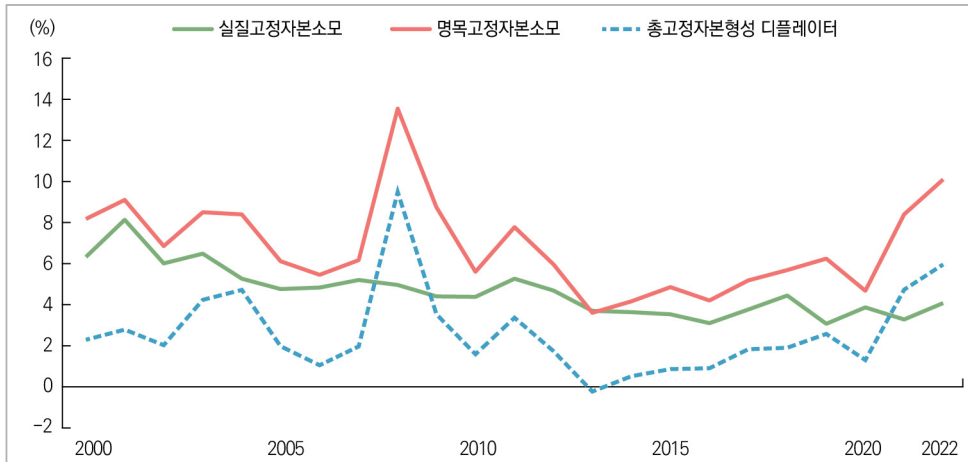
고정자산 유형별 감가상각률 및 비중



자료: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처 작성

그러나 자산 유형과 무관하게 감가상각률은 연도별 변동성이 낮다. 따라서 실질로 계산한 고정자본소모(각 유형 고정자산의 실질 가치 감소분의 합)의 증가율도 변동성이 크지 않다. (명목)고정자본소모 증가율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큰 변수는 고정자본형성 디플레이터인 것으로 보인다. 총고정자본형성 디플레이터의 증가율을 고정자본소모의 증가율과 비교하면 등락폭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가령 2008~2009년과 2021~2022년의 이례적으로 높은 고정자본소모 증가율은 실질 고정자본소모보다는 고정자본형성 디플레이터의 움직임으로 주로 설명된다.

| 고정자본소모(실질 및 명목) 및 총고정자본형성 디플레이터 증가율 |



자료: 한국은행

9)  $K_t = I_t + (1 - \delta)K_{t-1}$ ,  $I_t$ 는 당기의 고정자본형성(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10)  $\delta K_{t-1} = I_t - (K_t - K_{t-1})$

## 4. 순생산 및 수입세

- ▶ **순생산 및 수입세**는 국내총소득 중 정부로 1차 분배되는 몫을 의미
- ▶ **2022년 순생산 및 수입세**는 219.7조원으로 명목GDP의 10.2%를 차지
  - 순생산 및 수입세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4% 증가
  - 순생산 및 수입세 비중은 2021년(10.3%) 보다 0.1%p 하락

(전년대비, %)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 ~2022
2.7	1.5	4.2	11.7	2.4	4.4

순생산 및 수입세는 생산 및 수입세(taxes on production and imports)<sup>11)</sup>에서 보조금(subsidies)<sup>12)</sup>을 제한 값을 말한다. 순생산 및 수입세는 생산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본원소득 중 정부에 1차로 분배되는 몫을 나타낸다. 국민계정체계에서 조세는 생산 및 수입세, 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로 분류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경우 생산물보조금과 기타생산보조금으로 분류한다(그림 I-14) 참고).

생산 및 수입세는 생산물세와 기타생산세로 구성되고,<sup>13)</sup> 순생산 및 수입세는 순생산물세(생산물세 - 생산물보조금)와 순기타생산세(기타생산세 - 기타생산보조금)로 구분한다. 우리나라는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생산물세는 부가가치세, 수입세(관세) 및 기타생산물세로 구성되며, 기타생산세에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이 포함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도의 생산 및 수입세 실적(잠정치)을 살펴보면 총 234.1조원 중 생산물세가 195.0조원(83.3%)을 차지했고, 기타생산세가 39.1조원(16.7%)으로 생산물세의 규모가 기타생산세의 약 5배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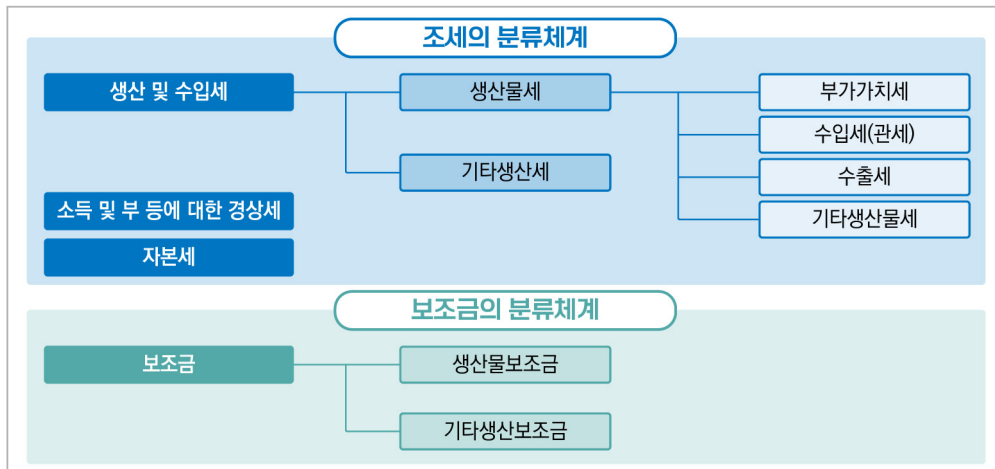
김민혁 경제분석관(mh.k@assembly.go.kr, 6788-4750)

11) 국민계정체계에서는 간접세 대신에 생산 및 수입세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각종 조세를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를 결정하기 어렵고, 경제학에서도 간접세 등의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12) 보조금은 정부가 생산자의 생산비용 일부를 부담한 것인데, 대중교통업체에 대한 유가보조금, 석탄 생산에 대한 보조금 등이 있다. 보조금은 재화 또는 서비스가 생산·판매 또는 수입되었을 때 해당 재화 또는 서비스 한 단위당 지급되는 보조금인 생산물보조금과 그 밖에 기업이 생산에 참여한 결과 수취하는 보조금으로서 지급급여 또는 고용보조금 등을 포함하는 기타생산보조금으로 구분한다.

13) 생산물세는 생산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배달, 판매, 이전하거나 기타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그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고, 기타생산세는 생산에 사용된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의 소유 또는 이용에 대한 조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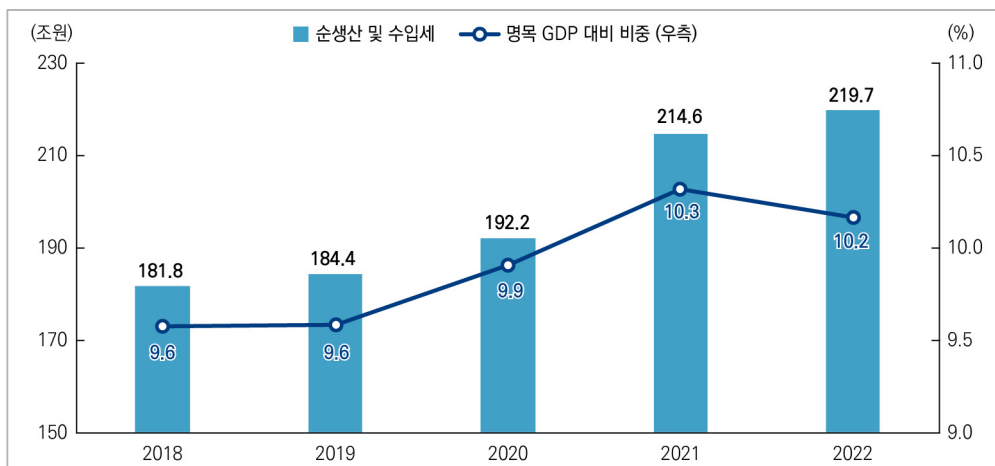
| 그림 I-14 | 국민계정상 조세 및 보조금의 분류 체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그림 I-15]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순생산 및 수입세 실적과 명목 GDP 대비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순생산 및 수입세 잠정치는 219.7조원으로, 2018년(181.8조원)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순생산 및 수입세의 연평균 증가율은 4.4%로 나타났다.

| 그림 I-15 | 순생산 및 수입세 및 명목GDP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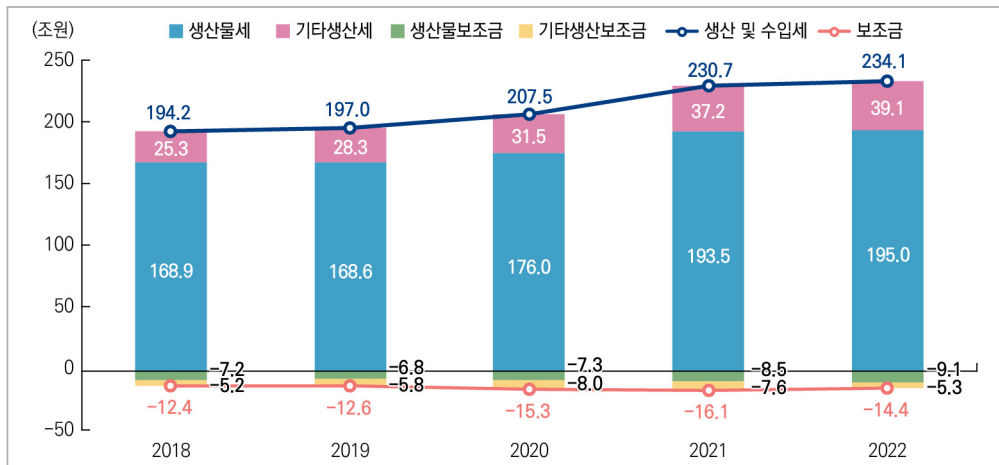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순생산 및 수입세의 명목GDP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국내총소득 중 정부에 분배되는 비중을 파악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순생산 및 수입세의 GDP 대비 비중은 9.4%~11.1% 범위에서 변동했으며, 평균 비중은 9.9% 수준이었다. 2013년에 명목GDP 대비 순생산 및 수입세의 비중이 9.4%를 기록한 이래 정부로 분배되는 몫이 지속하여 증가해 왔으며, 2021년에는 10.3%까지 상승했으나 2022년에는 소폭(0.1%p) 하락했다.

[그림 I-16]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생산 및 수입세와 보조금 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국민경제의 성장에 따라 생산 및 수입세는 2018년(194.2조원)부터 2022년(234.1조원)까지 매년 증가했으며, 그 중 자산의 소유·이용에 대한 조세인 기타생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13.0%)에서 2022년(16.7%)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보조금은 2018년(12.4조원)부터 2021년(16.1조원)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22년에는 기타생산보조금이 전년 대비 2.3조원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10.6% 하락한 14.4조원을 기록했다.

| 그림 I-16 | 생산 및 수입세와 보조금 추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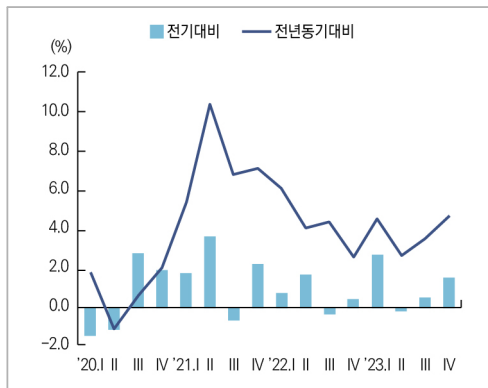


## 5. 국민총소득

- ▶ 2023년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전년대비 3.9% 성장
- ▶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늘어 명목 국내총생산(GDP)보다 성장률이 0.5%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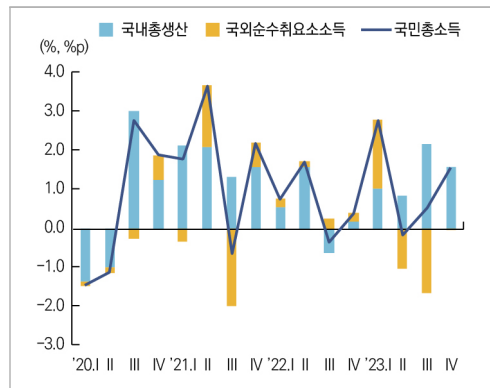
2023년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이하 GNI)은 2분기에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3분기와 4분기에는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3.9% 성장률을 기록했다. GNI 성장률을 GDP와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의 기여도로 구분하면 2023년 상반기에는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 수익 등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의 기여도가 크며, 하반기에는 순수출 증가에 따른 국내총생산의 성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sup>14)</sup>.

| 그림 I-17 | GNI 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 그림 I-18 | GNI 성장률 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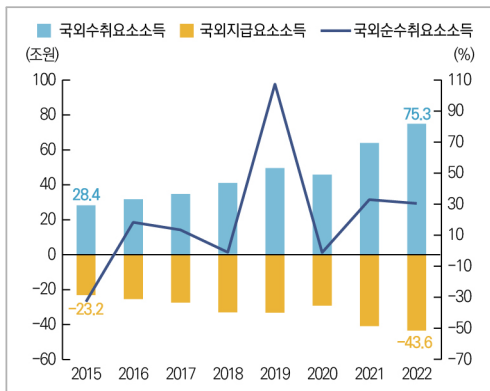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국내에서 국외로 지급하는 국외지급요소소득과 국외에서 들어오는 국외수취요소소득으로 구분되는데,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외에서 들어오는 국외수취요소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GNI 증가율이 국내총소득 증가율보다 높아졌다. 이를 요소소득으로 구분하여보면, 국외순수취 비용자보수와 국외순수취 영업잉여(기업 및 재산소득)로 구분할 수 있다. 과거에는 국외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hurgh@assembly.go.kr, 6788-4749)

14) 국내경제 동향은 「2024 경제동향 I: 지출부문」에서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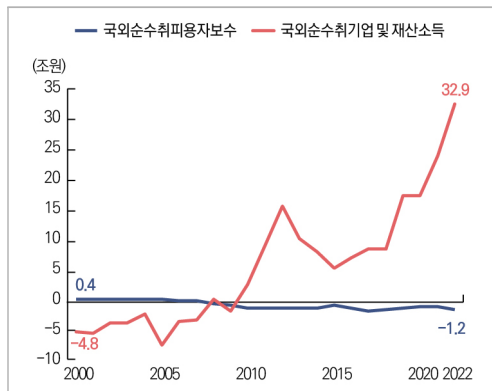
순수취 피용자보수가 영업잉여보다 컸으며, 국외순수취 영업잉여는 상당한 적자상태였다. 하지만, 국내 경제규모가 확대되었고 국내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해외인력이 국내 거주자의 해외근로보다 늘어남에 따라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sup>15)</sup>는 적자가 되었다. 반면 국내 자본의 해외 시장 투자는 증가함에 따라 국외순수취 영업잉여<sup>16)</sup>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국외순수취 영업잉여는 2000년대 후반 이후 흑자로 전환되어 2022년에는 32.9조원까지 증가하였다.

| 그림 I-19 | 국외순수취요소소득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 그림 I-20 | 국외순수취요소소득



자료: 한국은행

국민총소득의 생산요소간 및 제도부문간 분배를 통해 국민총소득이 경제 전반에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한 해 동안 우리 경제가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은 노동과 자본, 정부의 몫으로 분배되는데, 2022년에 노동으로 분배된 몫인 피용자보수는 양호한 고용시장과 임금상승으로 인해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9%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전년 대비로도 국민총소득의 4.3% 성장 중 2.2%p의 기여가 있었다. 고정자본소모와 기업 및 재산소득은 자본의 몫에 해당하는데, 전년 대비 국민총소득의 성장에 대한 기여는 차이가 있다. 고정자본소모는 2.1%p의 기여를 갖는 반면, 기업 및 재산소득은 -0.3%p의 기여도를 가졌다. 기업 및 재산소득의 비중이 감소하고 음의 성장기여도를 보이는 경향은 지난 5년 동안 반복적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현 수준의 생산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비축하는 소득인 고정자본소모의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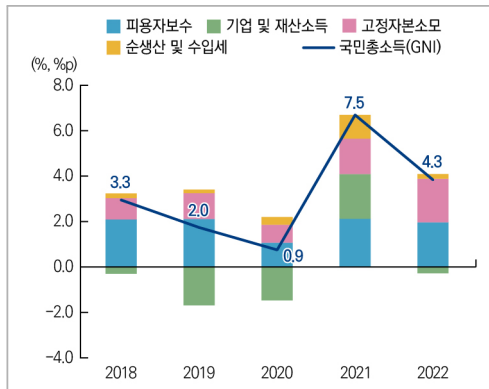
15)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는 국외로부터의(에 대한) 급료 및 임금을 의미한다.

16) 국외순수취 영업잉여는 국외로부터의(에 대한) 투자소득으로 기업 및 재산소득이다.

증은 증가하는 반면, 추가적인 투자와 저축, 지출로 이어질 수 있는 자본의 소득은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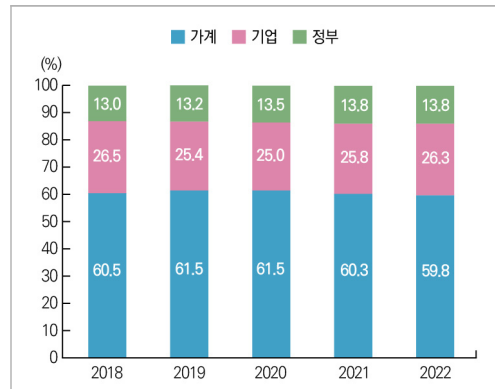
국민총소득을 제도부문별 분배로 검토하면, 가계부문의 소득은 국민총소득의 59.8%를 차지하며 기업은 26.3%, 정부는 13.8%를 차지한다. 이때 가계소득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정부로부터의 이전소득을 모두 포함한 소득이다. 지난 5년(2018~2022년)의 GNI의 제도부문별 구성은 1%p 내외에서 변동하였다.

| 그림 I-21 | GNI의 생산요소간 분배



자료: 한국은행

| 그림 I-22 | GNI의 제도부문별 구성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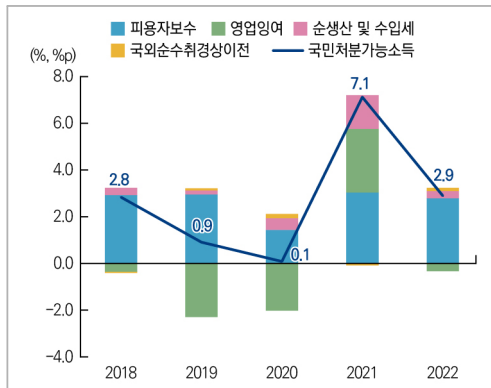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민처분가능소득(National Disposable Income, 이하 'NDI')은 가계와 기업, 정부 등 국민경제 전체가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의 규모를 의미한다.<sup>17)</sup> 2022년의 국민처분가능소득 중 파용자보수는 60%의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성장기여도 면에서는 2.9% 중 2.8%p의 기여도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처분가능소득은 2022년의 고용시장 호조에 따른 노동소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약 절반의 성장기여도를 가졌던 영업잉여는 2022년에는 -0.3%p로 낮아 고정자본소득을 제외한 자본의 소득은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

17) 국민처분가능소득(NDI)은 국내총소득(GDI) 중 고정자본소득을 제외한 파용자보수와 영업잉여, 순생산 및 수입세에 외국으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인 국외순취요소소득을 더하고, 외국에 지급한 소득인 국외지급경상이전은 차감하여 산출한다. 국외순취요소경상이전은 1981년에는 GDI 대비 비중이 10.6%로 높았으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부터 음(-)의 값으로 바뀌었으며 2022년에는 -0.15% 수준으로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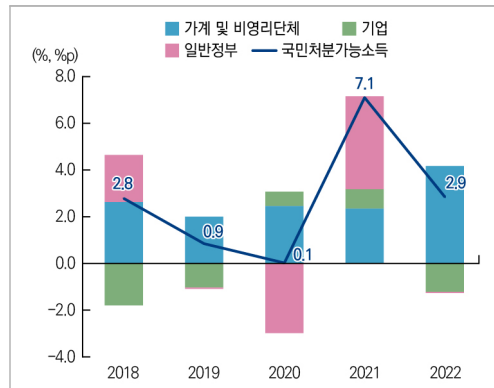
처분가능소득의 경제주체별 비중을 가계 및 비영리단체, 일반정부, 법인으로 구분해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국민계정의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서 일반정부로 칭하며, 일반정부의 비중은 2010년 23.2%에서 2022년 24.5%로 1.3%p 증가에 그친다. 반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경우 2010년 63.1%에서 2022년 66.6%로 3.5%p 높아졌다. 2022년의 제도부문별 분배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기여도가 높았다. 2022년 국민처분가능소득 증가율 2.9% 중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기여도는 4.2%p였으며, 법인의 기여도는 -1.2%p로 낮았다.

| 그림 I-23 | 국민처분가능소득의 구성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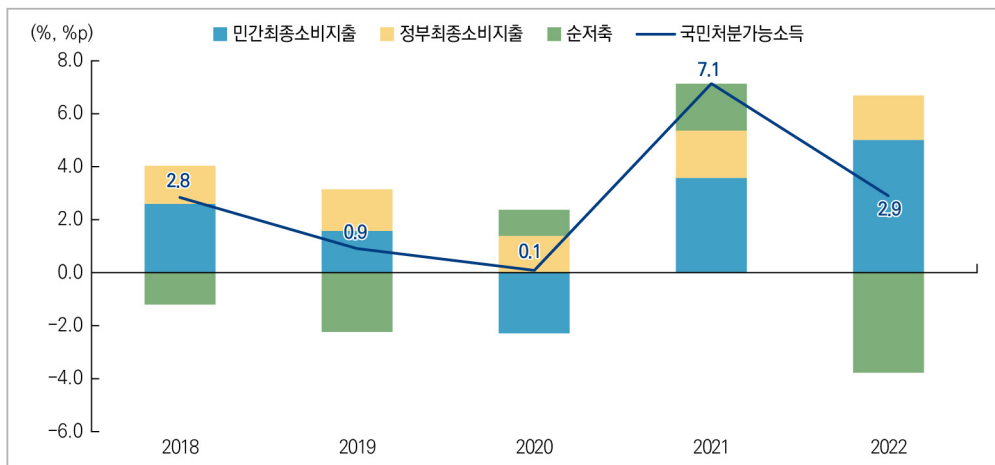
| 그림 I-24 | 국민처분가능소득의 분배



자료: 한국은행

국민처분가능소득의 처분은 민간과 정부의 최종소비지출과 순저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22년에는 순저축의 비중이 15.7%로 전년의 19.9% 대비 크게 감소했을 뿐 아니라 2000년 이후로도 가장 낮은 비중이다. 기여도면에서도 순저축은 -3.8%p로 처분가능소득의 주요 하방 요인이었다. 한편 민간소비는 8.7% 증가하여 국민처분가능소득의 증가율 2.9%를 크게 초과했으며, 기여도면에서도 5.0%p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코로나19 이후 본격화된 경기회복 상황에서 내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I-25 | 국민처분가능소득의 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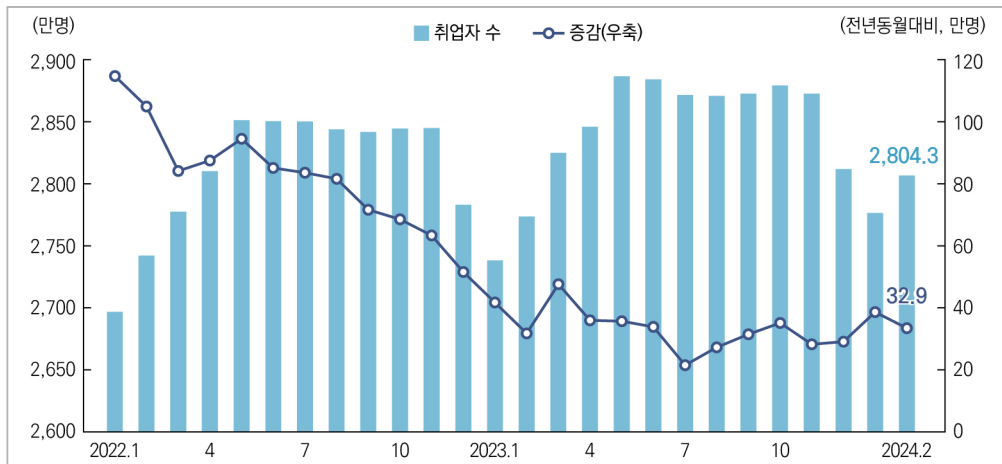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1. 고용량

2023년 취업자 수는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37.2만명 증가한 후 하반기에는 28.3만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2022년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81.6만명 증가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모습이다. 2024년 들어 취업자 수는 1월에 전년동기대비 38.0만명, 2월에 32.9만명 증가하여 2023년 하반기의 증가세를 조금 웃돌고 있다.

그림 I-26 | 취업자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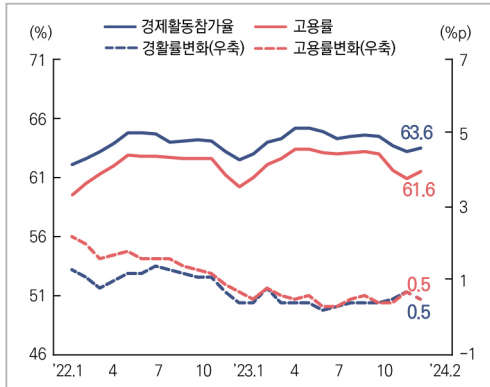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3년 하반기 고용률은 전년동기대비 0.4%p 상승한 62.9%를 기록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은 0.4%p 상승한 64.5%를 기록하였다. 실업률은 전년동기대비 0.1% 하락한 2.5%를 기록하였다. 다만, 2021년 4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왔던 실업률은 고용률 증가속도가 경제활동참가율에 뒤처지기 시작한 2023년 11월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전환하여 2024년 2월 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0.1% 상승한 3.2%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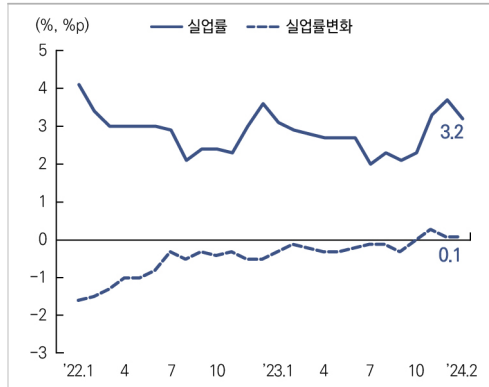
천경록 경제분석관(chunkr21@assembly.go.kr, 6788-4751)

| 그림 I-27 |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변화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I-28 | 실업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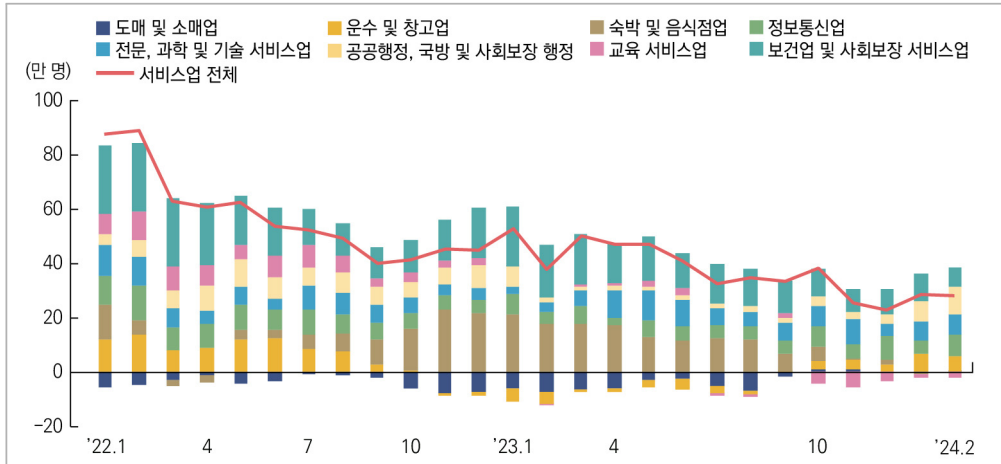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수 변화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2023년 하반기 동안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31.1만명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주도하였고 제조업 취업자 수는 4.2만명 감소, 건설업 취업자 수는 1.9만명 증가하였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23년 1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오다 11월부터 상승 전환하였고 건설업은 9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반면 2021년 3월부터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해온 서비스업의 증가세는 2023년 상반기의 45.9만명에 견주면 확연히 둔화된 모습인데, 민간소비 증가율이 2023년 상반기 3.1%에서 하반기 0.6%로 급감한 영향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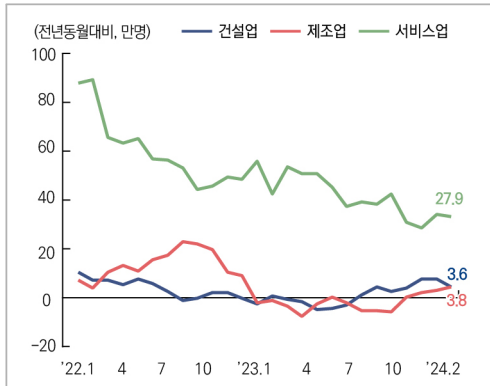
서비스업에서 고용 비중이 비교적 높은 산업의 취업자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민간소비에 민감한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23년 9월부터 급감한 점이 눈에 띈다. 공공 비중이 높은 보건·복지업의 증가세도 하반기 들어 위축되었고, 교육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하반기 들어 하락세로 전환하였다.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상반기 대비 하락폭은 축소되었고, 운수 및 창고업은 하반기 들어 상승세로 전환하였다.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업은 상하반기 모두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그림 I-29 | 서비스업 주요 업종별 취업자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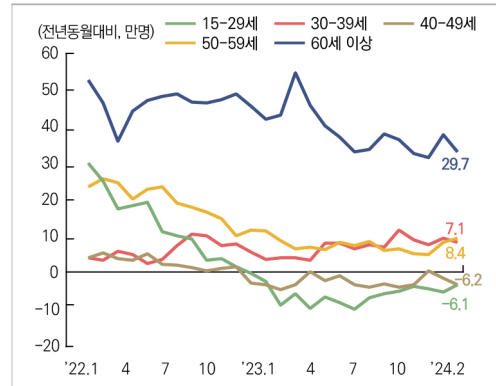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I-30 |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I-31 | 연령대별 취업자 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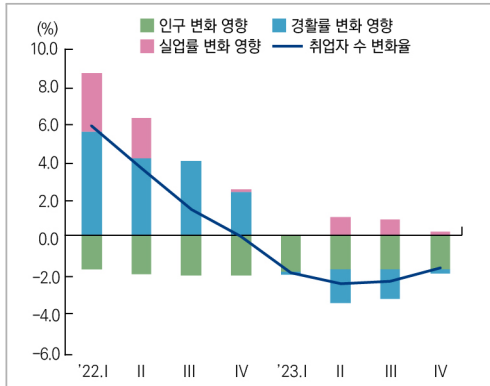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가장 큰 폭의 취업자 수 증가세를 지속하였는데, 2023년 하반기 31.1만명 증가하여 상반기 42.1만명에 비해 증가폭은 둔화되었다. 15~29세 취업자 수는 상반기 10.3만명 감소에 이어 하반기에도 9.2만명 감소하였다. 30대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소폭 증가하였고 40대는 상반기의 하락세가 하반기에도 비슷하게 유지된 한편 50대는 상반기의 증가세가 하반기에도 유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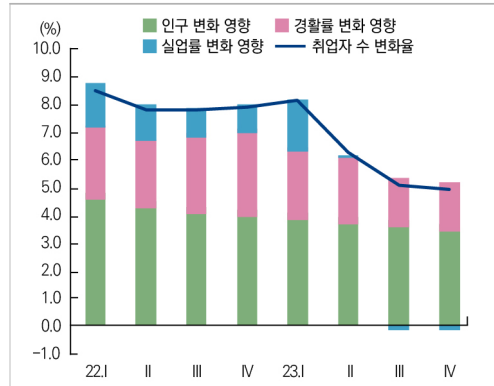
연령대별 취업자 수 변화를 인구 수와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변화의 영향으로 분해<sup>18)</sup>하여 살펴본 결과, 15~29세 취업자 수 하락에는 인구 감소가, 6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 수 증가에는 인구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I-32 | 15~29세 취업자 수 변화 분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I-33 | 60세 이상 취업자 수 변화 분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3년 하반기 취업자 수 증가폭은 성별에 따라 크게 다른 양상을 보여 남성은 2.0만명, 여성은 26.3만명 증가하였다. 이 같은 성별 격차는 2022년 10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2023년 내내 지속되었다. 다만 남성 취업자 수는 2023년 12월부터 증가폭이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다.

충족되지 않은 노동수요를 의미하는 빈일자리는 2023년 상하반기 모두 20.9만명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0월부터는 눈에 띄게 하락하는 추세가 감지된다. 이에 따라 전체 일자리 중 빈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빈일자리율)은 상반기에 1.06%, 하반기에 1.05%를 기록하였다. 빈일자리율이 1.13%였던 2022년에 비하면 인력 공급의 빠듯함(tightness)이 소폭 완화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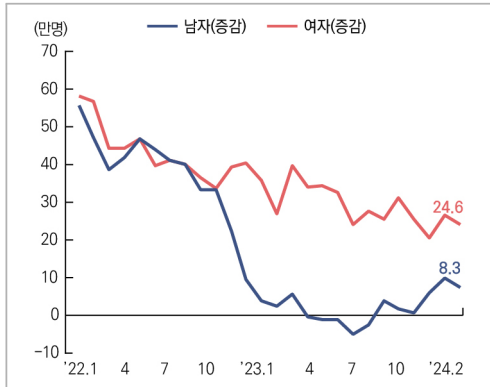
18) 다음의 수식을 통해 각 항목이 취업자 수 증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text{취업자수} = \text{인구수} \times \text{경제활동참가율} \times (1 - \text{실업률})$$

$$\Rightarrow \ln(\text{취업자수}) = \ln(\text{인구수}) + \ln(\text{경제활동참가율}) + \ln(1 - \text{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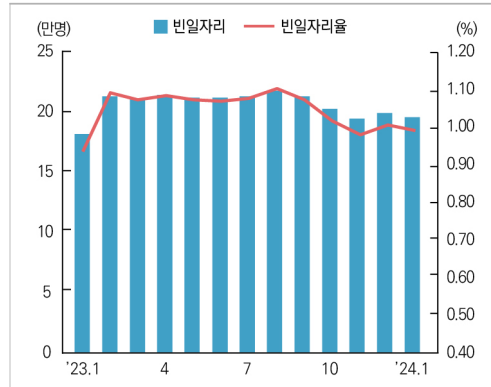
$$\Rightarrow \Delta \ln(\text{취업자수}) = \Delta \ln(\text{인구수}) + \Delta \ln(\text{경제활동참가율}) + \Delta \ln(1 - \text{실업률})$$

| 그림 I-34 | 성별 취업자 수 증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I-35 | 빈일자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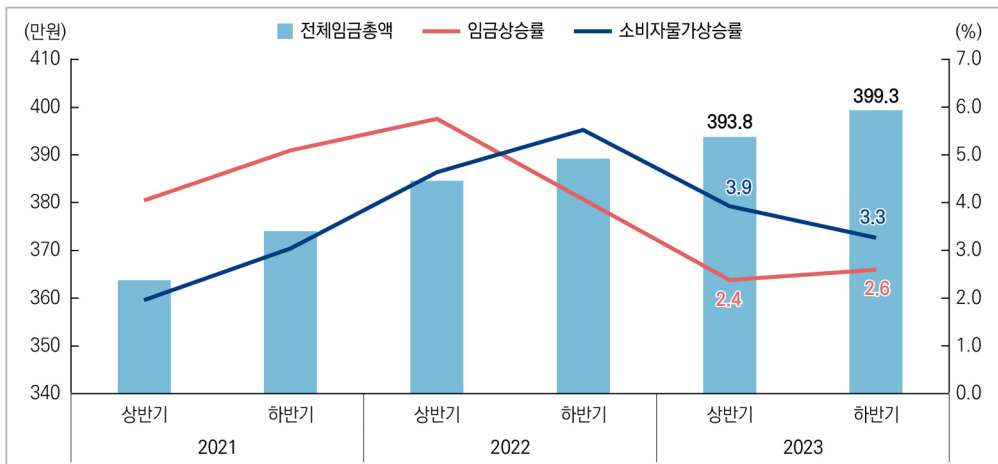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 임금

2023년 하반기 중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399.3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만원 증가하였다. 상반기에 2.4%였던 임금상승률은 하반기에 2.6%로 증가하며 2023년 연평균 임금상승률은 2.5%를 기록하였다. 2023년 소비자물가 증가율이 상반기 3.9%, 하반기 3.3%, 연간 3.6%임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은 상반기 모두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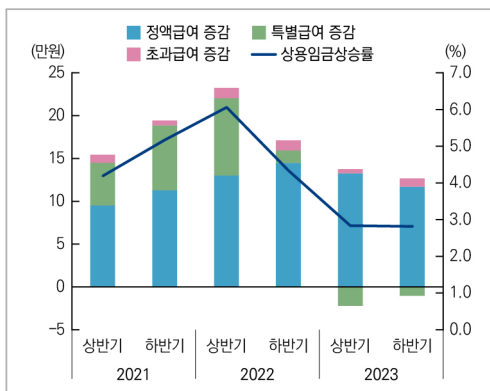
| 그림 I-36 |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수준 및 임금상승률 변화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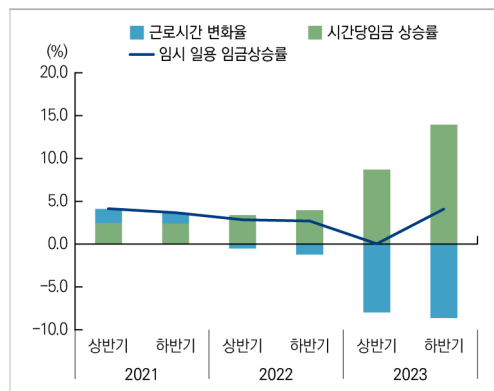
상용직의 임금은 상하반기 모두 2.8% 상승하였는데, 정액급여는 상반기 4.0% 상승한 이후 하반기 3.5%로 상승률이 하락한 반면 특별급여는 상반기 4.0% 감소에서 하반기 1.9% 감소로 하락폭이 축소되었다. 임시일용직의 임금은 상반기에 0.0%, 하반기에 4.1% 상승하였다. 임시일용직은 상하반기 내내 근로시간이 8% 이상 축소되었음에도 하반기에는 시간당임금 상승률이 14.0%를 기록하여 그 영향을 상쇄하였다.

| 그림 I-37 | 상용직 임금변화 분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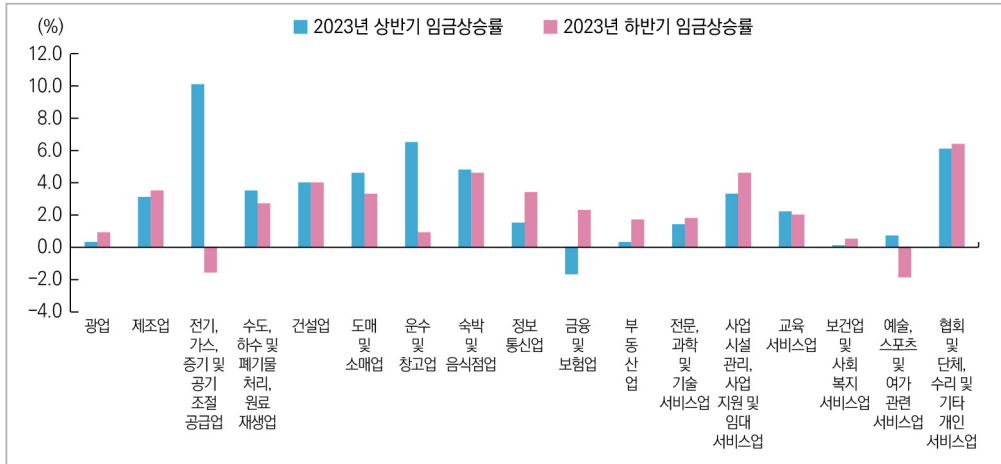
| 그림 I-38 | 임시·일용직 임금상승률 분해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산업별로 살펴보면, 2023년 하반기 협회·단체·개인서비스업(6.4%), 숙박·음식점업(4.6%), 사업시설 관리·임대업(4.6%), 건설업(4.0%), 제조업(3.5%), 정보통신업(3.4%)에서 물가상승률(3.3%)을 상회하는 임금상승률을 기록하였고 나머지 산업의 임금상승률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전기·가스·수도업(-1.6%), 예술·스포츠·여가업(-1.9%)은 임금이 하락하였고 보건·복지업(0.5%), 운수·창고업(0.9%) 등도 저조한 임금상승률을 기록하였다.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보건·복지업, 예술·스포츠·여가업 등은 상·하반기 모두 임금상승률이 2% 이하로 저조하였던 반면 협회·단체·개인서비스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등은 상하반기 모두 4% 이상의 임금상승률을 기록하였다.

그림 I-39 | 2023년 상반기 산업별 임금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전망

# II

제1장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제2장 피용자보수

제3장 영업잉여

제4장 고정자본소모

제5장 순생산 및 수입세

제6장 국민총소득

제7장 고용





### 제1절 분배국민소득

2024년 명목GDP 수정 전망(5.0%)은 NABO 중기전망(4.2%)<sup>19)</sup> 대비 0.8%p 상향 조정되었다.

피용자보수 증가율은 고용 전망의 수정 결과를 반영하여 중기전망(3.7%) 대비 0.1%p 하향 조정된 3.6%로 전망하였다. 명목GDP 성장률 전망이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등에 대한 전망이 하향 조정된 결과, 중기전망 대비 임금근로자 수 증가세와 임금상승률 모두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여 피용자보수 증가율을 하향 조정하였다.

영업잉여는 명목GDP 증가율이 상향 조정된 반면 피용자보수 및 고정자본소모 증가율은 하향 조정된 영향으로 중기전망(3.5%) 대비 3.7%p 증가한 7.1%로 전망되었다. 국내 500대 기업 영업이익 증가 등도 간접적으로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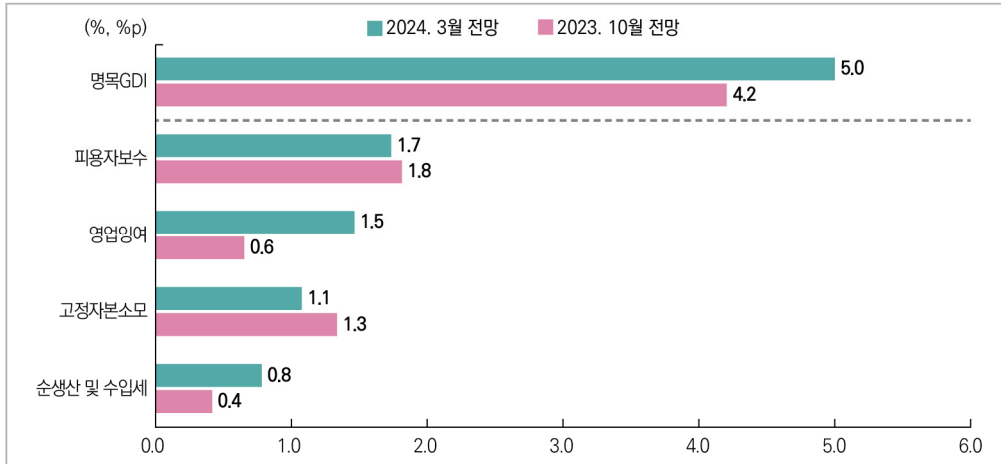
고정자본소모는 중기전망(5.9%) 대비 1.1%p 하향 조정된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여기에는 2024년 고정자본형성 디플레이터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영향과 더불어 건설투자 등 고정자본형성 증가율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영향도 있었다. 순생산 및 수입세는 명목GDP 성장률 및 통관수입 전망 상향 조정과 2023년의 기저효과를 반영하여 지난 전망(4.4%) 대비 4.0%p 상향 조정하였다. 고물가, 고금리 등 소비제약 요인의 영향으로 2023년의 부가가치세 및 관세 세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2023년 순생산 및 수입세 추정치(-4.6%)는 -2.5%p 하향 조정하였다. 2024년에도 내수는 여전히 부진하겠으나, 2024년 순생산 및 수입세는 2023년 대비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2024년 국민총소득은 본원소득수지 하향 조정에 따라 4.2%에서 4.1%로 소폭 하향되었다. 고정자본소모를 제하는 국민처분가능소득(NDI)은 고정자본소모의 하향 조정으로 인해 소폭 상향 조정되었다.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hurgh@assembly.go.kr, 6788-4749)

19)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2023.10월 발간) 기준.

| 그림 II-1 | 2024년 분배국민소득 전망의 성장기여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분배국민소득 수정전망 결과 GDP 대비 구성비는 사용자보수 47.1%, 영업잉여 20.9%, 고정자본소모 22.6%, 순생산 및 수입세 9.4%이다. 2024년 국내 총생산이 수출을 중심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영업잉여 전망이 상향된 반면, 사용자보수의 비중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표 II-1 | 2024년 분배국민소득 수정 전망

(단위: %, %p)

	23. 10월 전망(A)	24. 3월 전망(B)	차이(B-A)
명목 국내총생산(GDP)	100.0	100.0	
사용자보수	48.2	47.1	-1.1
영업잉여	19.2	20.9	1.7
고정자본소모	23.0	22.6	-0.4
순생산및수입세	9.5	9.4	-0.1

주: 차이는 수정전망(2024. 3월)치에서 중기전망(2023. 10월)치를 뺀 값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제2절 고용

2024년 취업자 수 증가율 수정 전망(0.7%)은 NABO 증기전망(0.8%) 대비 0.1%p 하향 조정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고용률 수정 전망(62.8%)은 0.1% 하향 조정되었고 실업률 수정 전망(3.1%)은 0.1%p 상향 조정되었다.

증기전망 대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 전망이 하향 조정된 데는 민간소비 등의 증가율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영향이 컸다. 민간 소비 둔화는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서비스업 고용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치의 2.7%p 하향 조정과 부동산PF 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도 전망치 수정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표 II-2 | 2024년 고용 수정전망

(단위: %, %p)

	23. 10월 전망(A)	24. 3월 전망(B)	차이(B-A)
취업자수 증감률	0.8	0.7	-0.1
고용률	62.8	62.8	-0.1
경제활동참가율	64.8	64.7	0.0
실업률	3.0	3.1	0.1
임금상승률	3.0	2.9	-0.1

주: 원 수치를 반올림하여 소수점 1자리까지 표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제2장 사용자보수

### ▶ 2024년 사용자보수는 전년대비 3.6% 증가할 전망

- 이는 전년도 증가율(3.7% 전망) 대비 0.1%p 하락한 수치
- 명목GDP 성장률 대비 낮은 증가율을 보이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7.7%에서 47.1%로 0.6%p 하락

(전년대비, %)

	2022	2023 <sup>e</sup>	2024 <sup>f</sup>
사용자보수	4.8	3.7	3.6
GDP대비 비중	47.6	47.7	47.1

주: 이하 표에서 위첨자 e는 해당연도 수치가 추정치임을 의미하며, 위첨자 f는 전망치임을 의미함

###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임금상승률 반등	○ 임금근로자 증가세 둔화

2024년 사용자보수는 전년대비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3년에는 전년대비 3.7%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10월 발표된 NABO 중기 경제전망 대비 2024년 전망치는 0.1%p 하향조정되었다.

사용자보수가 노동의 몫으로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부분임을 고려할 때, 고용전망을 통해 도출되는 임금근로자 증가율과 임금상승률을 통해 기본적인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사용자보수는 임금근로자 수와 그들이 받는 임금의 곱으로 표현되며, 결과적으로 사용자보수의 증가율은 임금근로자 증가율과 임금상승률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20)</sup> 해당 방법론을 통해 기본 전망치를 도출한 후, 기본 전망치가 반영하지 못하는 사항들을 고려하여 전망치를 보정하였다.<sup>21)</sup>

천경록 경제분석관(chunkr21@assembly.go.kr, 6788-4751)

20) 임금과 임금근로자 수의 곱을 더하기 관계로 변환시키는 방법은 다음의 수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egin{aligned} \text{사용자보수} &= \text{명목임금} \times \text{임금근로자 수} \\ \Rightarrow \ln(\text{사용자보수}) &= \ln(\text{명목임금}) + \ln(\text{임금근로자 수}) \\ \Rightarrow \Delta \ln(\text{사용자보수}) &= \Delta \ln(\text{명목임금}) + \Delta \ln(\text{임금근로자 수}) \\ \Rightarrow \text{사용자보수 증가율} &= \text{명목임금상승률} + \text{임금근로자 증가율} \end{aligned}$$

| 그림 II-2 | 피용자보수와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2.5% 증가에 그쳤으나 임금근로자 수는 양호한 고용상황으로 인해 비교적 큰 폭(1.5%)으로 증가하여<sup>22)</sup> 피용자보수는 명목GDP 성장률(3.4% 전망) 대비 0.3%p 높은 3.7%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GDP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47.6%에서 2023년 47.7%로 소폭 상승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 표 II-3 | 임금근로자 증가율 및 임금상승률 전망치

(단위: %)

	2022	2023	2024
임금근로자 증가율	3.6	1.5	1.1
(임금근로자 비중)	(76.5)	(76.8)	(77.1)
임금상승률	4.9	2.5	2.9

주: 임금근로자 증가율은 고용량 전망에서 제시된 취업자 수 전망치에 기존의 추세에 기반하여 생성한 임금근로자 비중을 적용하여 도출하였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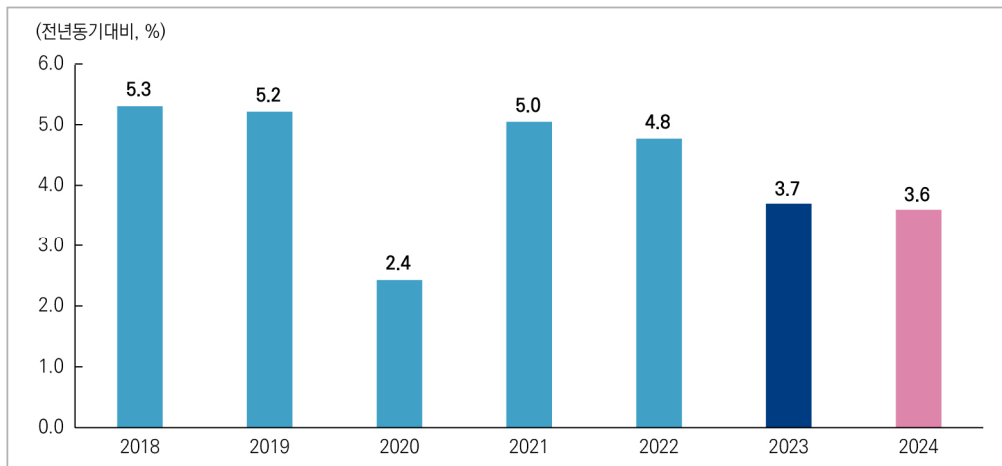
2024년 임금근로자 증가율은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0.4%p 하락한 1.1%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나, 임금상승률은 2022년부터 지속된 실질임금 감소의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대비 0.4%p 증가한 2.9%를 기록할

21) 국민계정의 피용자보수는 임금 외에도 임금근로자들이 받는 주거서비스, 건강·보건비용, 보육지원금 등 복지비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임금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임금근로자 증가율과 임금상승률을 통해 추정한 기본 전망치에 오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임금 데이터의 바탕이 되는 사업체노동력조사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일부만을 포착(2022년 기준 87.7%)한다는 점에서, 누락된 임금근로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망치를 보정할 필요가 있다.

22) 관련 논의는 본권 1부 2장, 고용 동향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전망이다.<sup>23)</sup> 이 밖에 피용자보수에 반영되는 비임금 급여의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면 2024년 중 피용자보수는 전년대비 3.6%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전년의 증가율 3.7%(추정) 대비 0.1%p 하락한 것으로 명목GDP 성장률(5.0% 전망)을 하회하여 전체 GDP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23년 47.7%에서 47.1%로 하락이 예상된다.

| 그림 II-3 | 2024년 피용자보수 증가율 전망



주: 2023년은 추정치, 2024년은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23) 관련 논의는 본권 II부 7장, 고용 전망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 제3장 영업잉여

- ▶ 2024년 영업잉여는 전년(5.5% 전망)보다 1.6%p 높은 7.1% 증가할 전망

(전년대비, %)

2022	2023 <sup>e</sup>	2024 <sup>f</sup>
-3.2	5.5	7.1

-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목GDP 성장률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생산 및 수입세 증가율 상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용자보수 증가율 하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정자본소모 증가율 하락</li> </ul>	

영업잉여는 2024년에 전년대비 7.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3년에는 5.5%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10월 발표된 NABO 중기 경제전망 대비 2024년 전망치는 3.6%p 상향조정되었다.

이처럼 큰 폭의 상향조정이 이루어진 주된 이유는 2024년 명목GDP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조정된 반면 피용자보수 증가율 전망치는 하향조정되었기 때문이다. 영업잉여는 명목GDP 전망에서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순생산 및 수입세 전망을 제한 잔차로 구한다. 따라서 피용자보수·고정자본소모·순생산 및 수입세의 증가(하락)는 영업잉여의 하방(상방) 요인으로, 명목GDP의 증가(하락)는 상방(하방)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림 II-4 | 영업잉여와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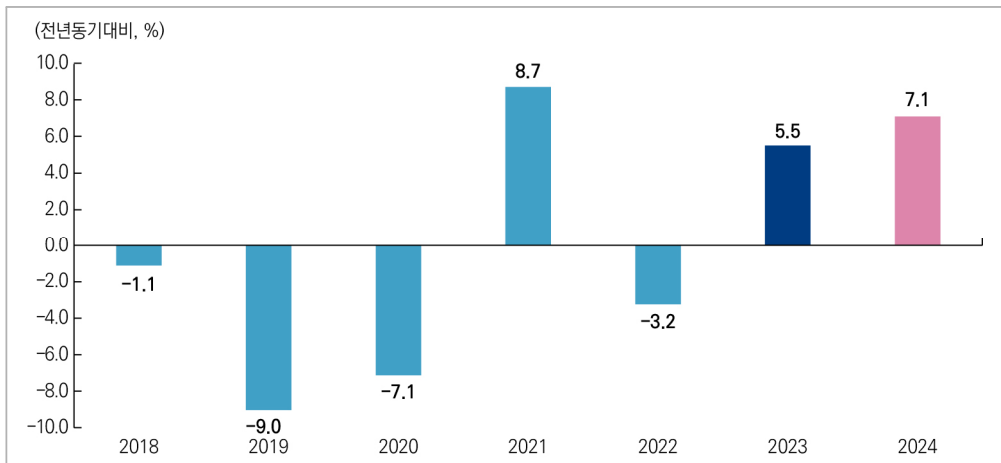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에는 명목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1.6%p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비용자보수 증가율은 0.1%p 하락, 고정자본소모 증가율은 1.1%p 하락할 전망이다. 영업잉여 증가율이 전년보다 증가할 요인들이 존재한다. 순생산 및 수입세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점은 영업잉여의 하방 요인이지만, GDP 대비 순생산 및 수입세 비중이 비용자보수·고정자본소모에 비하면 작아서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2023년과 2024년 모두 영업잉여 증가율이 명목GDP 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 또는 전망됨에 따라 GDP 대비 영업잉여 비중은 2022년 20.1%에서 2023년 20.5%, 2024년 20.9%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그림 II-5 | 2024년 영업잉여 증가율 전망



주: 2023년은 추정치, 2024년은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제4장 고정자본소모

- ▶ 2024년 고정자본소모는 전년(5.9% 전망)보다 1.1%p 낮은 4.8% 증가할 전망

(전년대비, %)

2022	2023 <sup>e</sup>	2024 <sup>f</sup>
10.2	5.9	4.8

-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자재 등 원자재 가격의 불안 요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재 가격 안정화로 인한 고정자본형성 디플레이터 하락</li> <li>○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부진</li> </ul>

고정자본소모는 2024년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3년에는 5.9%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고정자본소모 비중은 2022년 22.1%에서 2023년 22.6%, 2024년 22.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정자본소모는 기존 자본스톡의 노후화, 진부화 등으로 인한 가치 감소분의 화폐 평가액이다. 고정자본소모를 결정하는 요인은 고정자산 유형별 감가상각률, 전년도 고정자산 스톡, 자본재 물가를 반영하는 고정자본형성 디플레이터, 그리고 기존 자본스톡의 진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 발전 속도다. 고정자산 유형별 자본스톡의 실질 가치 감소분은 자본축적 방정식<sup>24)</sup>에 따라 감가상각률과 전년도 자본스톡에 의해 결정된다. 고정자본소모는 이 감소분을 화폐액으로 평가한 명목 변수이므로 자본재 가격을 반영하는 고정자본형성 디플레이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또한 지식재산생산물자산 투자(기술 발전 속도)가 증가하면 기존 자본스톡의 진부화가 빨라져 고정자본소모가 증가한다. 이러한 관계에 기반하여 고정자본소모를 전망하였다.

천경록 경제분석관(chunkr21@assembly.go.kr, 6788-4751)

24)  $K_t = I_t + (1 - \delta)K_{t-1}$ , 여기서  $K_t$ 는 당해년도 자본스톡,  $I_t$ 는 당해년도의 고정자본형성(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delta$ 는 감가상각률,  $K_{t-1}$ 은 전년도 자본스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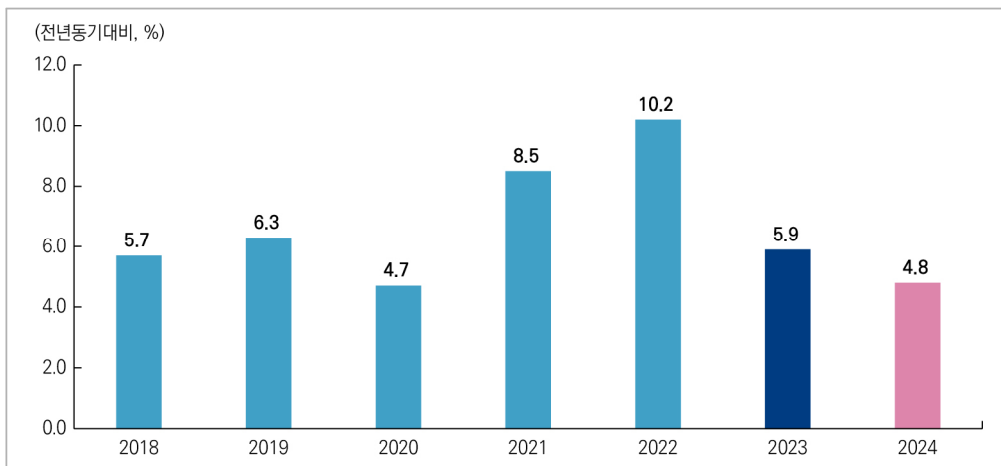
| 그림 II-6 | 고정자본소모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에는 원자재가격 상승률 안정화의 영향으로 총고정자본형성 디플레이터 증가율이 전년의 2.2% 대비 1.2%p 하락한 1.0%를 기록할 전망이다. 또한 2023년 총고정자본형성(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증가율이 1.1%에 그쳐 고정자산 스톡의 증가율이 저조한 점도 고정자본소모 전망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2024년 고정자본소모 증가율은 2023년 대비 1.1%p 하락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술 혁신도 고정자본소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본 전망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 그림 II-7 | 2024년 고정자본소모 증가율 전망



주: 2023년은 추정치, 2024년은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제5장 순생산 및 수입세

### ▶ 2024년 순생산 및 수입세는 8.4% 증가할 전망

(전년대비, %)

2022	2023 <sup>e</sup>	2024 <sup>f</sup>
2.4	-7.1	8.4

###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성장률 상승</li> <li>○ 통관수입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수경기 둔화</li> <li>○ 중간재에 대한 환급액 증가</li> </ul>

2024년 순생산 및 수입세<sup>25)</sup>는 8.4%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순생산 및 수입세는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 이례적으로 감소(-7.1%)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에 따른 기저효과로 2024년에는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2023년의 명목GDP 성장률은 3.4%로 2022년(3.9%) 대비 0.5%p 감소했다. 2023년에 명목GDP 성장이 둔화하면서 순생산 및 수입세의 상방 요인은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특히, 통관수입의 2023년 증가율이 -12.1%로 2022년(18.9%)과 비교하여 31.0%p 하락하면서 생산 및 수입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 및 관세의 주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밖에도 종합부동산세에 영향을 미치는 공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등 순생산 및 수입세의 세입 여건은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이였다(BOX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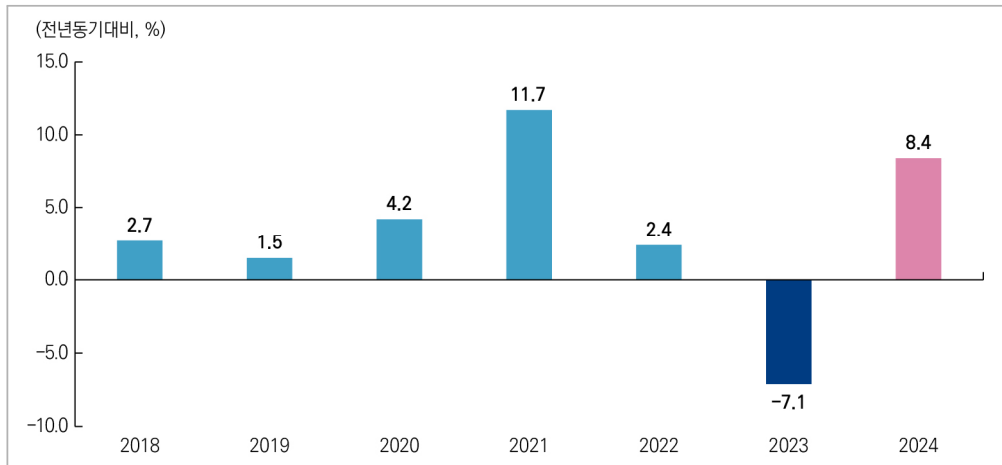
2024년에는 명목GDP 성장률이 전년보다 1.6%p 높은 5.0%까지 상승하면서 순생산 및 수입세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3년에는 통관수입도 전년대비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순생산 및 수입세의 세입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소비부진 등 내수의 둔화 움직임이 뚜

김민혁 경제분석관(mh.k@assembly.go.kr, 6788-4750)

25) 생산 및 수입세에서 보조금을 제한 값을 말한다(p.16 참고).

렸하게 나타나고 있어 순생산 및 수입세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출 증가는 중간재에 대한 환급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2023년의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순생산 및 수입세는 8.4% 수준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sup>26)</sup>

| 그림 II-8 | 2024년 순생산 및 수입세 증가율 전망



주: 2023년은 추정치, 2024년은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표 II-4]는 2024년 1월 순생산 및 수입세와 관련된 주요 세목(5종)의 세입 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2023년 대비 1월 국세수입 실적은 7.1% 증가하였으며, 부가가치세는 전년대비 11.2%, 관세는 8.3% 증가하는 등 순생산 및 수입세 관련 주요 세목의 세입 실적은 대체로 증가세를 보이면서 2024년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26) 경제성장률 및 대외거래 전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4 경제전망 I: 지출 부문」에서 설명한다.

표 II-4 | 주요 세목의 2024년 1월 국세수입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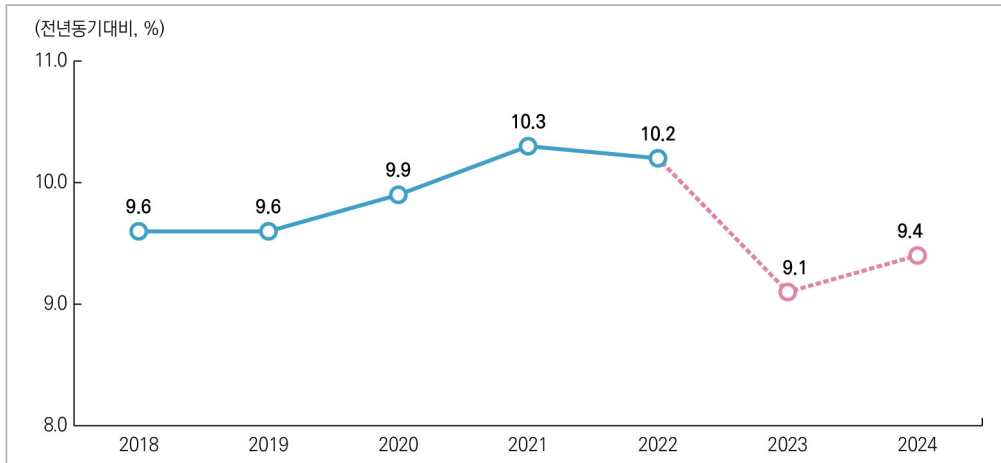
(단위: 조원, %)

구 분	1월까지 누계				진도율		'23년	'24년
	'23.1	'24.1	증감액	증감률	'23.1	'24.1	실적	예산
국세수입	42.9	45.9	3.0	7.1	12.5	12.5	344.1	367.3
부가가치세	20.7	23.1	2.3	11.2	28.1	28.3	73.8	81.4
개별소비세	1.1	1.1	0.0	0.7	11.9	10.4	8.8	10.2
증권거래세	0.4	0.4	0.1	24.6	5.9	8.3	6.1	5.4
교통·에너지·환경세	1.0	0.9	-0.0	-2.5	8.8	6.1	10.8	15.3
관세	0.6	0.6	0.0	8.3	7.9	7.0	7.3	8.9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3년 순생산 및 수입세의 명목GDP 대비 비중은 9.1%로 2022년 10.2%에서 1.1%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에는 명목GDP 대비 비중이 9.4%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지만, 내수 부진에 따라 2018년 수준(9.6%)까지 회복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그림 II-9 | 2024년 순생산 및 수입세의 명목GDP 대비 비중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순생산 및 수입세는 명목GDP 성장률, 통관수입액 및 통관수출액을 주요 결정요인으로 선정하여 전망하였다. 생산물세는 재화나 서비스가 생산·판매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 단위 또는 가격에 기반하여 부과되므로 명목GDP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수입된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부과하므로 통관수입액에도 영향을 받는다. 한편, 수출에 사용된 중간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관세환급특례법」에 근거하여 수출에 활용된 수입 원재료에 대해 이미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돌려주는 수출지원 관세 환급제도가 운영 중이므로 통관수출액을 결정요인에 반영하여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순생산 및 수입세와 주요 결정요인 간의 관계는 아래의 [그림 II-1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에도 유가(교통·에너지·환경세 등)나 공시 주택가격(종합부동산세 등)을 비롯한 변수들을 순생산 및 수입세 전망에 고려한다. 세율 변화 등 제도적 변동요인 또한 순생산 및 수입세에 영향을 미친다.

| 그림 II-10 | 순생산 및 수입세와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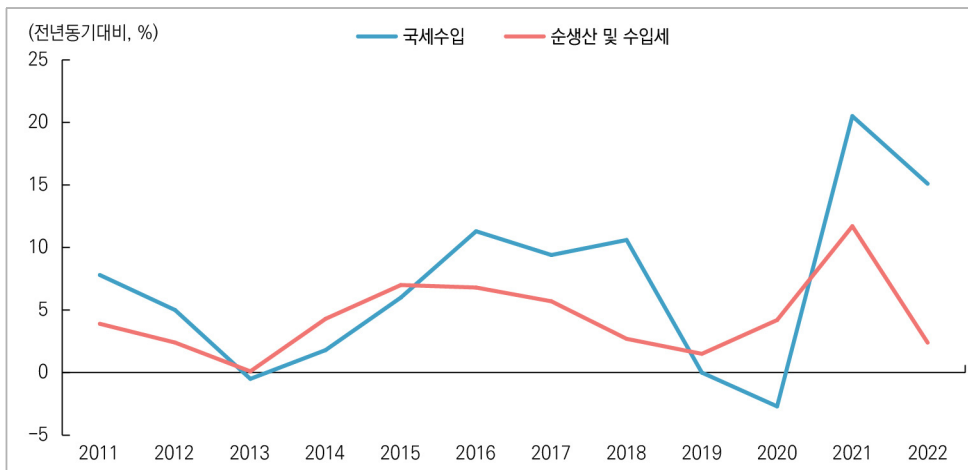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BOX 2] 2023년 국세수입 실적

국세수입 증가율과 순생산 및 수입세 증가율은 상관관계(상관계수 0.62, 2011~2022년 기준)를 가지기 때문에 국세수입 실적 변화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지방세 징수실적이 발표되기까지의 시차가 길다는 한계점을 고려하면 국세수입 실적은 상당히 유용한 참고자료가 된다. 국민계정 상 2023년 순생산 및 수입세의 잠정치는 2024년 6월경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2023년의 국세수입 실적을 살펴봄으로써 순생산 및 수입세의 이례적인 감소 추이를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국민계정체계 상 순생산 및 수입세는 일반정부의 소득을 의미하므로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기에 국세수입 실적만으로 순생산 및 수입세의 추이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발생주의에 기반해 작성되는 순생산 및 수입세와 현금주의에 기반해 작성되는 국세수입 실적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양자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국세수입 실적과 순생산 및 수입세 추이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1월 기획재정부는 2023년 연간 국세수입 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다. 국세수입 실적과 순생산 및 수입세와 관련된 주요 세목(6종)의 세입 실적을 살펴본 결과, 2023년 국세수입은 2022년 대비 51.9조원(-13.1%) 감소하였다. 순생산 및 수입세 관련 세목 중 부가가치세 세입은 7.9조원(-9.6%) 감소하였으며, 관세는 3.0조원(-29.4%), 종합부동산세는 2.2조원(-32.4%) 감소하였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의 부가가치세 및 관세수입 감소의 원인을 2023년의 통관수입액이 2022년 대비 12.1%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세입 감소는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률 -18.6% 등 공시지가 하락과 관련 세율 인하에 따른 것으로 평가했다.<sup>27)</sup>

### Ⅰ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 Ⅰ

(단위: 조원, %)

구 분	연간 누계				'22년 실적	'23년 예산	'23년 예산 대비	
	'22.12	'23.12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국세수입	395.9	344.1	-51.9	-13.1	395.9	400.5	-56.4	-14.1
부가가치세	81.6	73.8	-7.9	-9.6	81.6	83.2	-9.4	-11.3
개별소비세	9.3	8.8	-0.5	-5.3	9.3	10.2	-1.4	-13.5
증권거래세	6.3	6.1	-0.2	-3.5	6.3	5.0	1.1	22.2
교통·에너지·환경세	11.1	10.8	-0.3	-2.5	11.1	11.1	-0.3	-2.7
관세	10.3	7.3	-3.0	-29.4	10.3	10.7	-3.4	-32.0
종합부동산세	6.8	4.6	-2.2	-32.4	6.8	5.7	-1.1	-19.5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3년의 세입여건 악화는 지방세 징수실적에도 유사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sup>28)</sup>이 2022년 23.7%에서 2023년 25.3%로 1.6%p 인상됨에 따라 지방소비세의 감소율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에도 전환비율이 전년대비 2.7%p 인상되었으며, 당시 부가가치세액은 전년대비 9.3% 증가한 반면, 지방소비세액은 전년대비 34.3%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

27) 기획재정부,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 2024.1.31.

28)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액의 일정 비율이 지방소비세로 이양됨)



## 제6장 국민총소득

- ▶ 2024년 국민총소득(GNI)은 4.1% 증가할 전망
- ▶ 2024년 국민처분가능소득(NDI)은 3.9% 증가할 전망

(전년대비, %)

	2022	2023 <sup>o</sup>	2024 <sup>f</sup>
국민총소득(GNI)	4.3	3.9	4.1
국민처분가능소득(NDI)	2.9	3.1	3.9

###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해외 투자 배당 수익 증가	○ 외국인임금근로자 유입 확대
○ 국내총생산 증가	○ 중국 경기 부진 및 대외 리스크 확대
○ 고용여건 개선으로 가계소득 증가	○ 국제 자원 가격 상승에 따른 총수입 증가

2024년 국민총소득(GNI)은 4.1%, 국민처분가능소득(NDI)은 3.9% 증가할 전망이다. 2024년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이 큰 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민총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sup>29)</sup> 하지만 지난 5년간 국외순취요소소득이 두 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한 데 비해 2024년에는 전년대비 4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총소득은 국내총소득 대비 성장률이 0.9%p 낮을 전망이다. 국민처분가능소득은 최근 고정자본소모의 증가율 상승으로 국민총소득과 성장률의 괴리가 커졌으나 2024년에는 3.9%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23년에는 해외투자 증가에 따른 배당수익 증가와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 익금 불산입 제도<sup>30)</sup>”를 도입한 영향 등으로 국외수취 자본소득이 큰 폭 증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hurgh@assembly.go.kr, 6788-4749)

천경록 경제분석관(chunker21@assembly.go.kr, 6788-4751, 고정자본소모)

김원혁 경제분석관(whkim@assembly.go.kr, 6788-4657, 경상수지)

29) 2024년 국내총소득 전망은 「2024 경제전망 I」에서 설명한다.

30) 2023년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해외자회사에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도입되어 이중과세가 조정되었다. 국제조세조정에 따라 특정외국법 유보소득의 간주배당금, 혼성금융상품 거래 배당금, 이와 유사한 배당금이 모두 익금처리된다. 따라서 모회사는 해외 자회사의 수익으로 국내 모회사에

가하였다. 하지만 해외현지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인 이익잉여금의 규모는 통계적으로 알 수 없으며, 해외 자회사의 전년도 당기순이익에 따라 유동적이다. 2023년의 주요국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낮아 2024년의 배당소득은 다소 감소할 수 있으며, 전년도의 일시적 증가분 감소 등으로 2022년 실적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sup>31)</sup>

| 그림 II-11 | 국민총소득과 국외순수취요소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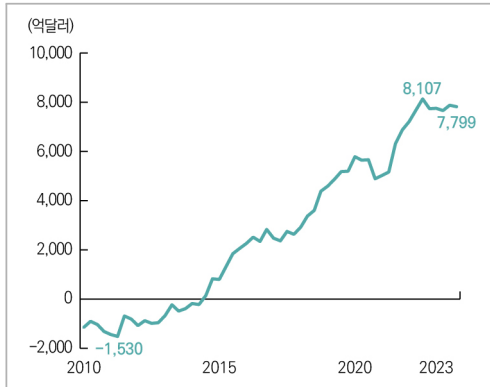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기업 및 재산소득과 피용자보수의 국외순수취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순대외금융자산은 2023년말 기준 7,790억 달러로 2015년 이후 순자산이 축적되고 있으나, 2023년 증가율은 1.1%로 전년도의 증가율이 12.6%로 크게 증가한 것에 비교된다. 대외금융자산과 대외금융부채를 비교하면 대외금융자산은 2009년 이후 빠르게 증가한 반면, 대외금융부채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순대외금융자산을 자산과 부채로 구분해 보면, 2022년에는 부채가 전년대비 9.2% 감소한 반면 2023년에는 7.9% 증가하였다. 따라서 자산 증가보다 빠른 부채 증가로 인해 순대외금융자산 증가율은 1.1%에 그쳤다.

배당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외법인에서 낸 법인세를 인정하므로 국내 법인세는 감소하지만 해외에서 들어오는 배당금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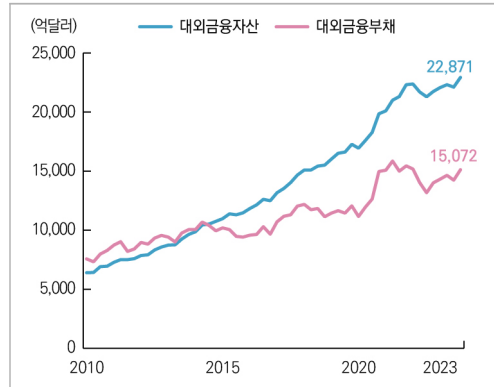
31) 다만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 익금 불산입 제도'를 먼저 실시한 국가의 사례를 보면, 일본은 해외 현지법인의 배당을 통한 본국 환류 비율이 개정전 5개년(2004~2008) 평균 54.8% 수준에서 2009년 81.9%, 2010년 84.3%로 상승했으며, 영국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영국 투자자 앞 배당이 평균 200만 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 세제」, 2018년 봄 통권 제3호, p.29)

| 그림 II-12 | 순대외금융자산



자료: 한국은행

| 그림 II-13 |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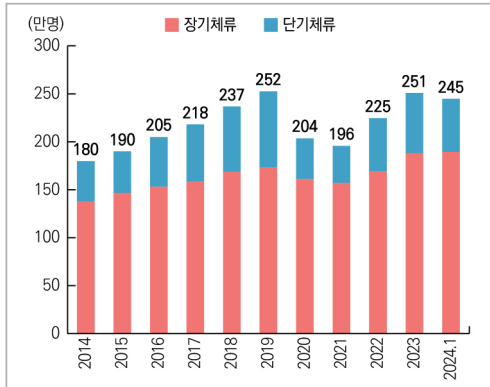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는 추세적으로 음(-)의 값을 갖는다. 국외에서 임금을 받는 내국인이 감소하는 반면, 국내에서 임금을 받는 외국인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2024년 외국인취업비자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발표하여,<sup>32)</sup> 체류외국인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023년 5월을 기준으로 발표된 「2023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서도 외국인 취업자수는 2022년 보다 8만명 늘어나 전체 국내 취업자수의 3.2%를 차지했으며, 국내에 91일 이상 머문 15세 이상 외국인은 12.9만명(전년 대비 9.9%) 증가하였다. 취업자 증가 뿐 아니라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임금도 전년대비 상승하였다. 3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외국인 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35.8%로 전년의 30.1% 보다 5.7%p 높아지는 등 국외지급 피용자보수는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32) 국무총리실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는 2024년 비전문인력 취업비자(E-9) 적용 외국인근로 신규허용 업종을 확대(음식업,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 등)하고 입국허용 외국인 근로자수 상한을 2023년보다 37.5% 증가한 16.5만명으로 확정하였다. 비전문취업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업, 농어업, 단순노무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11월 기준 체류인원은 30.3만 명이다.

그림 II-14 | 체류외국인 현황



자료: 법무부

표 II-5 | 외국인 취업자의 월평균임금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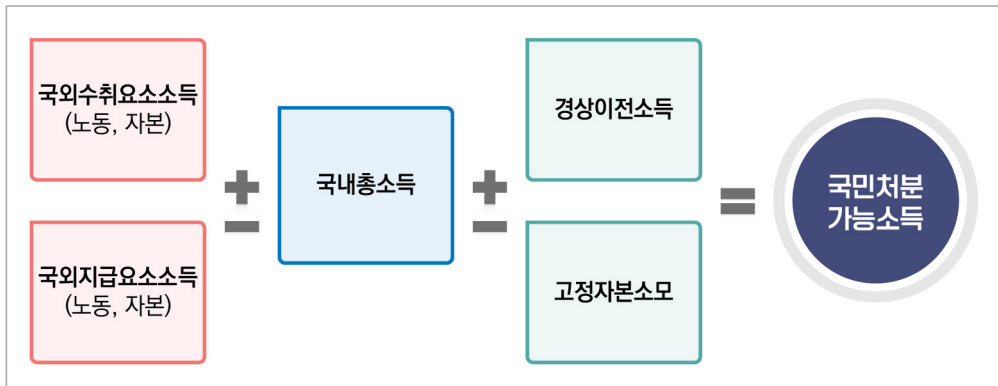
(단위: %, %p)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2022.5	18.8	51.1	30.1
2023.5	14.6	50.6	35.8
차이	-4.2	-0.5	5.7

자료: 통계청

국민처분가능소득은 국민총소득에 국외경상이전<sup>33)</sup>을 더하고 고정자본소모를 제하여 구한다.

그림 II-15 | 국민처분가능소득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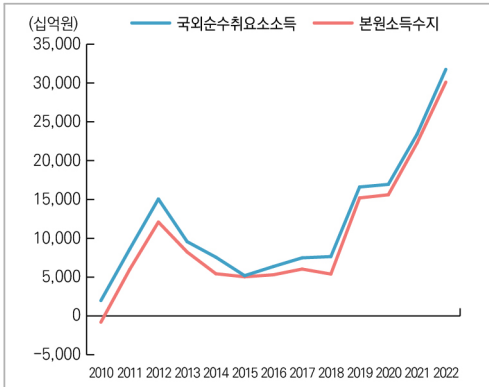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외순수취요소소득과 국외경상이전은 각각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와 수준값을 비교하면 상관계수 1.0으로 동일한 변동성과 추세를 갖는다. 따라서 본 전망에서는 「2024 경제전망 I: 지출 부문」의 경상수지에서 전망한 본원소득수지와 이전소득수지를 이용한다.<sup>34)</sup>

33) 고정자본소모 전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권 II부 4장 고정자본소모에서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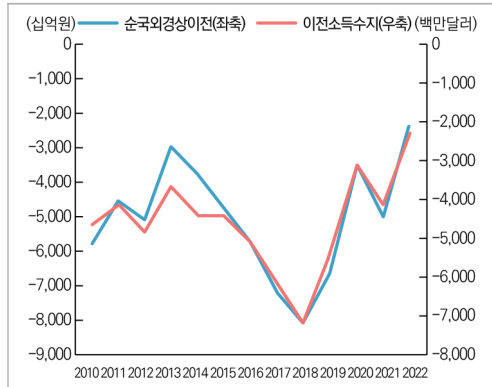
34) 국외경상이전(Net current transfers from the rest of the world)과 국외경상이전소득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경상이전소득수지는 한 국가가 해외로부터 받는 이전소득과 해외로 지급하는 이전소득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전소득에는 원조금, 송금, 보조금, 연금 등이 포함된다.

| 그림 II-16 | 국외순수취요소소득과 본원소득수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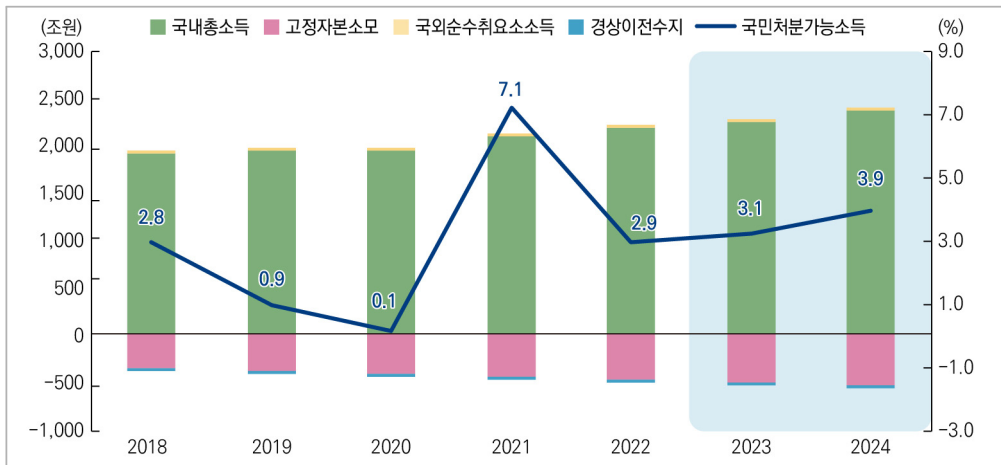
| 그림 II-17 | 국외경상이전과 이전소득수지



자료: 한국은행

국민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2024년 고정자본소모 증가율 4.8%를 반영한 결과 국민총소득 증가율 4.1%보다 낮은 3.9%로 전망된다. 2023년에는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전년대비 31.3% 증가하여 양의 성장기여도가 있었으나 2024년에는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여 증가율 둔화 요인으로 전망하였다.

| 그림 II-18 | 국민처분가능소득 전망



주: 2023년은 추정치, 2024년은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BOX 3]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순저축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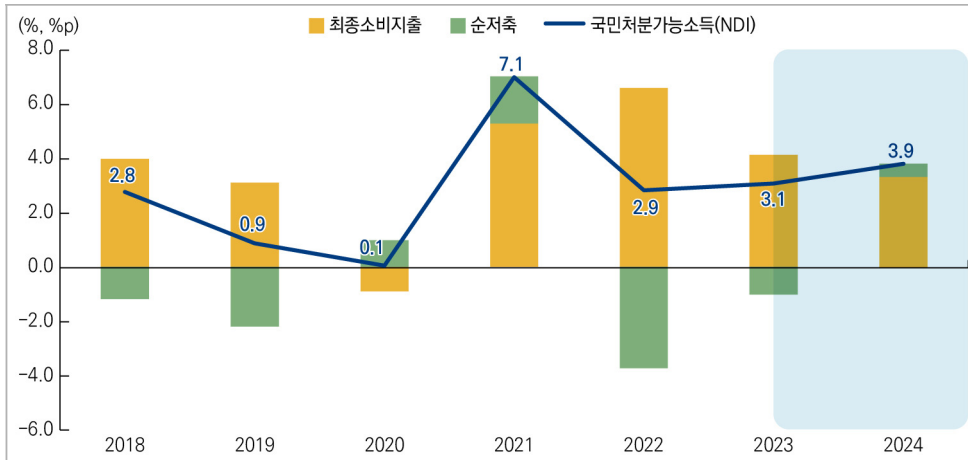
### □ 국민처분가능소득은 최종소비지출과 순저축으로 구성

- 국민처분가능소득은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에서 고정자본소모를 제하여 자유로이 소비와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
  - 2022년 기준 84.3%의 소득이 최종소비되었으며, 15.7%의 소득은 저축으로 이어짐
- 가계부문은 2022년 기준 국민처분가능소득의 66%를 차지하며 정부는 24.4%, 금융기관을 포함한 법인에 8.9% 분배됨

### □ 순저축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마이너스 기여도를 나타내며, 2024년에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최종소비지출은 지난 2년간 국내총소득을 초과하는 증가율을 보였으나, 2024년에는 증가율이 다소 하향할 것으로 예상됨
- 순저축은 2022년에 19.0%의 큰 폭의 하락이 있었으며, 2023년에도 6.6%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반면 2024년의 순저축은 2023년보다는 3.5% 증가하여, 0.5%p의 기여도가 예상됨

| 최종소비지출과 순저축 기여도 전망 |



주: 2023년은 추정치, 2024년은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제1절 고용량

- ▶ **2024년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20.7만명(0.7%) 증가할 전망
  - 고용률은 전년(62.6%) 대비 0.3%p 상승한 62.8%로 전망
- ▶ **2024년 실업률**은 전년(2.7%) 대비 0.4%p 상승한 3.1%로 전망

(전년대비, 만명, %)

	2023			2024 <sup>f</sup>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취업자 수 (증가율)	37.2 (1.3)	28.3 (1.0)	32.7 (1.2)	18.2 (0.6)	23.3 (0.8)	20.7 (0.7)
고용률	62.2	62.9	62.6	62.2	63.3	62.8
실업률	3.0	2.5	2.7	3.2	3.0	3.1

###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 공급의 지속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소비 부진에 따른 서비스업 생산 위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시간 제 일자리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경기 위축</li> </ul>

2024년 취업자 수는 상반기에 전년대비 18.2만명 증가, 하반기에 23.3만명 증가하여 연간으로 20.7만명(0.7%)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2023년의 증가폭인 32.7만명(1.2%) 대비 12.0만명(0.5%p) 낮은 수준이다. 2024년 고용률은 전년대비 0.2%p 증가한 62.8%를 기록하겠으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의 영향으로 실업률은 전년대비 0.4%p 증가한 3.1%를 기록할 전망이다.

2024년의 고용 증가세 둔화는 소비 등 내수의 증가세 둔화에 주로 기인한다. 2023년 1.8% 성장한 실질 민간소비는 2024년에 1.7% 성장이 예상되며,<sup>35)</sup> 이에 따라 고용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생산도 2023년 2.1% 성장에서 2024년 1.8% 성장으로 성장세 둔화가 예상된다.<sup>36)</sup> 2023년 10월에 발표된 NABO 중기

천경록 경제분석관(chunkr21@assembly.go.kr, 6788-4751)

35) 자세한 내용은 「2024 경제전망 I: 지출 부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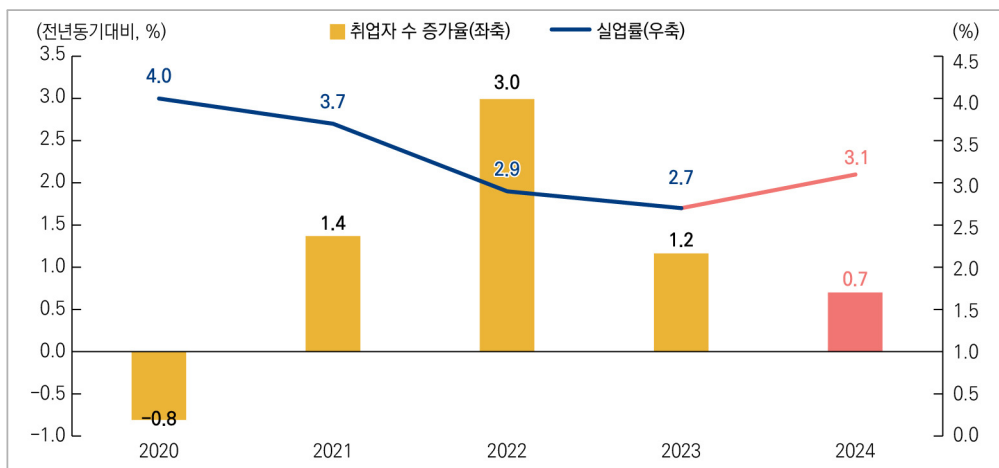
경제전망 대비 민간소비는 0.5%p, 서비스업 생산은 0.2%p 하향 조정된 것인데, 이 점을 고용량 관련 수정 전망의 주된 하방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다만, 민간 소비 증가율은 2024년 상반기에 1.2%를 기록한 뒤 하반기에는 2.2%로 반등할 것이 예상되는 바, 취업자 수 증가율과 고용률 모두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4년에는 또한 건설투자 증가율이 NABO 중기 경제전망(0.2%) 대비 2.7%p 하락한 -2.5%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건설업 생산 증가율도 중기 경제전망(1.5%) 대비 3.8% 하향 조정된 -2.3%로 전망된다. 이처럼 비관적인 건설경기 전망에 비추면 2023년 하반기의 건설업 고용 증가세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24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시행될 예정이다. 동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효과성을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일정 정도 해소해줄 여지가 있어 초등학생 1학년 자녀를 둔 여성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 지속 증가는 취업자 수를 늘리기도 하지만 실업률을 늘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의 사항들을 반영하여 취업자 수(증가율)를 중기 전망 대비 3만명 (0.1%p) 하향 조정하였고 고용률은 0.1%p 하향, 실업률은 0.1%p 상향 조정하였다.

| 그림 II-19 | 2024년 취업자 수 및 실업률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36) 자세한 내용은 「2024 경제전망 II: 생산 부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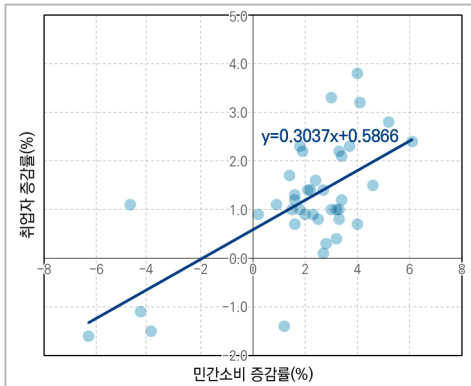


## [BOX 4] 고용과 민간소비 및 수출 간 관계 비교

2024년 GDP 성장률 전망은 예상보다 빠른 수출경기 회복세를 고려하여 지난 10월 전망 대비 상향조정되었으나, 내수경기의 둔화세를 반영하여 민간소비 등 내수 관련 지표들은 하향조정되었다. 이처럼 엇갈리는 내수경기과 수출경기의 흐름이 고용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민간소비 증가율과 고용 증가율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재화 및 서비스 수출의 증가율과 고용 증가율 간의 상관관계와 비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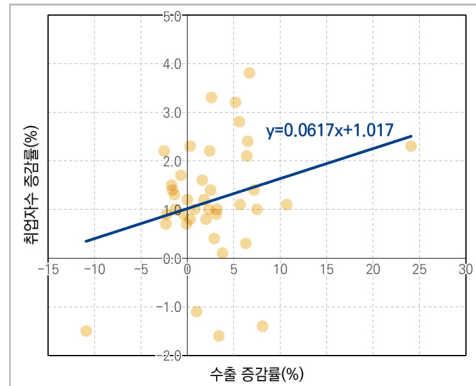
2014~2023년 기간의 분기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소비 증가율이 1.0%p 증가할 때 취업자 수 증가율은 0.3%p 증가하는 관계가 발견되었다(상관계수 0.65). 반면 수출 증가율이 1.0%p 증가할 때 취업자 수 증가율은 0.06%p 증가에 그쳤다(상관계수 0.27). 이는 내수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 서비스 산업의 고용 비중이 높은 데 비해 수출경기에 민감한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Ⅰ 민간소비와 취업자수 증가율 간의 관계 Ⅰ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Ⅱ 재화 수출과 취업자수 증가율 간의 관계 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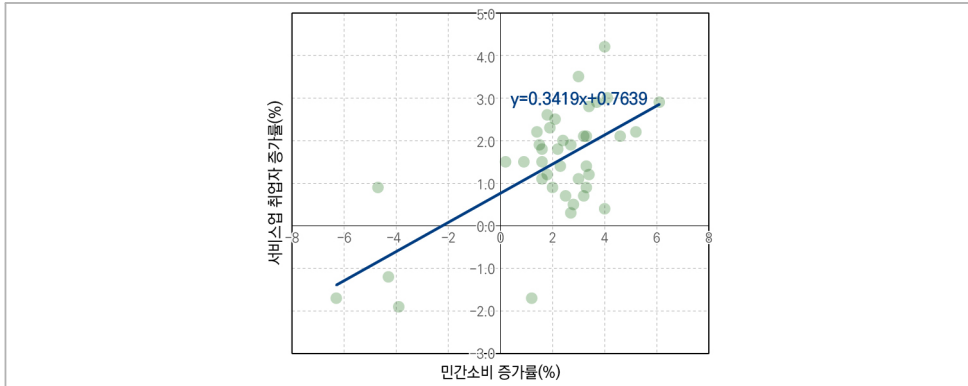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이를 확인하기 위해 취업자 수를 서비스업과 제조업 부문으로 나누는 뒤 각 부문의 증감률을 민간소비 및 재화 수출 증감률과 관련지어 살펴보았다. 2014~2023년 기간의 분기별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 민간소비 증가율이

1.0%p 증가할 때 서비스업 고용 증가율은 0.34%p 증가하는 관계(상관계수 0.66)가 나타난 반면, 재화 수출 증가율과 제조업 고용 증가율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수출 증가율과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율 간의 관계가 이처럼 약하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수출 산업이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전환된 결과 고용의 수출탄력성이 약화된 점<sup>37)</sup>이다. 둘째, 수출기업이 오프쇼어링을 이용하여 국내업무를 해외로 재배치한 경우 수출에 의한 노동수요 증가 효과가 축소<sup>38)</sup>되기 때문이다.

### Ⅰ 민간소비와 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가율 간의 관계 Ⅰ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37) 황운중·이수영·김혁항·강영호, 「수출이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38) 음지현·박진호·최문정, 「수출입과 기업의 노동 수요」, BOK 경제연구 제2018-36호, 2018.

## 제2절 임금

- ▶ **2024년 임금상승률**은 전년(2.5%) 대비 0.4%p 상승한 2.9%를 기록할 전망

(전년대비, 만명, %)

	2023			2024 <sup>f</sup>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임금상승률	2.4	2.6	2.5	2.7	3.1	2.9

- ▶ **주요 변동 요인(임금)**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전년도 실질임금 하락의 기저효과	○ 노동공급 대비 노동수요 증가세 둔화

2024년 임금근로자의 임금<sup>39)</sup>은 2.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3년 임금상승률 대비 0.4%p 증가한 수치이며 2023년 10월 발표된 NABO 중기 경제전망 대비 0.1%p 하향 조정된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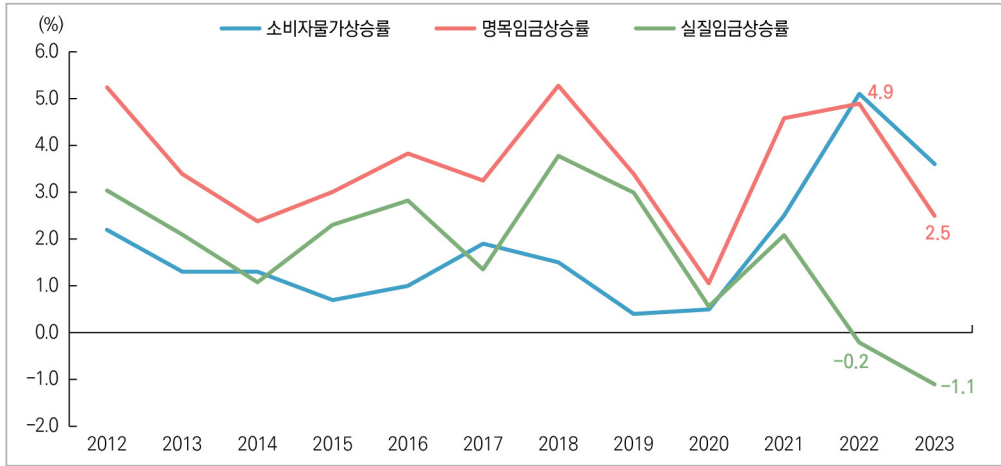
임금상승률은 제도적 요인을 제외하면 노동수요와 노동공급, 그리고 물가인상률에 영향을 받는다. 2024년에는 노동공급의 증가세는 유지되는 가운데 노동수요 증가세는 둔화하여 임금상승률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4년 고용량 전망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한 민간소비 둔화, 건설경기 악화 등의 요인들이 노동수요에도 하방요인으로 고려되었다. 노동수요 둔화의 효과는 실업률 증가로 나타나 임금근로자들의 협상력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2024년 임금상승률이 2023년의 상승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2022년부터 지속된 실질임금 하락의 기저효과 때문이다. 실질임금 상승률은 2022년부터 이어진 고물가(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022년 5.1%, 2023년 3.6%를 기록)의 영향으로 2022년 -0.2%, 2023년 -1.1%를 기록하였는데, 이처럼 실질임금이 2년 연속으로 감소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물가상승률이 약 1년의 시차를 두고 임금상승률에 반영된다는 선행연구 결과<sup>40)</sup>를 고려하면 2022~23년의 높은 물가는 2024년 임금상승률에 뒤늦게나마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39)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로 파악되는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 임금총액 기준이다.

40) 김정성·임웅지·오강현·최열매·김윤경·이재진, 「우리나라의 물가-임금 관계 점검」, BOK 이슈노트 제2022-26호, 2022

Ⅰ 그림 II-20 Ⅰ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명목 및 실질 임금상승률 변화



주: 실질임금상승률은 명목임금상승률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제하여 산출함

자료: 고용노동부, 통계청





## 국제비교

# III

제1장 주요국의 분배국민소득 구조 및 전망 사례

제2장 노동가능인구 전망

제3장 고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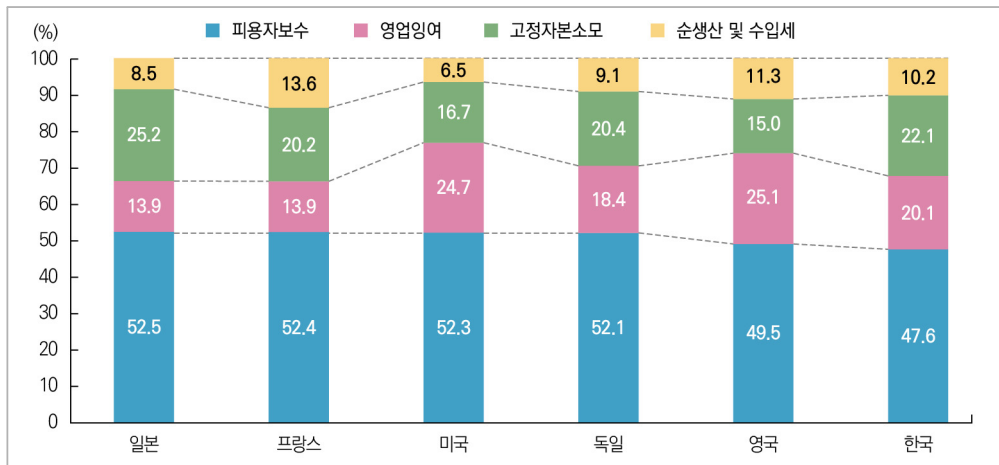
# 제1장 주요국의 분배국민소득 구조 및 전망 사례

## 제1절 주요국의 분배국민소득 구조

OECD는 회원국들의 분배국민소득을 발표하고 있다.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 순생산 및 수입세로 구성되는 생산요소간 소득의 분배를 발표하며, 국민총소득,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순저축 등 소득계정 통계도 공개한다.

주요국의 2022년 기준 분배국민소득 구조를 비교하면, 한국은 피용자보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고 고정자본소모와 순생산 및 수입세 비중이 큰 편이다. 일본, 프랑스, 미국, 독일의 피용자보수는 52%대로 유사하며, 영국과 한국은 소폭 낮은 49.5%와 47.6% 였다. 한편 영업잉여는 국가별 차이가 큰 편이다. 미국은 순생산 및 수입세 비중은 낮지만 영업잉여는 24.7%로 높은 편에 속하는 반면 고정자본소모는 16.7%로 낮은 편이다. 한편 일본은 영업잉여 비중이 낮고 고정자본소모는 가장 높다.

| 그림 III-1 | 주요국의 2022년 분배국민소득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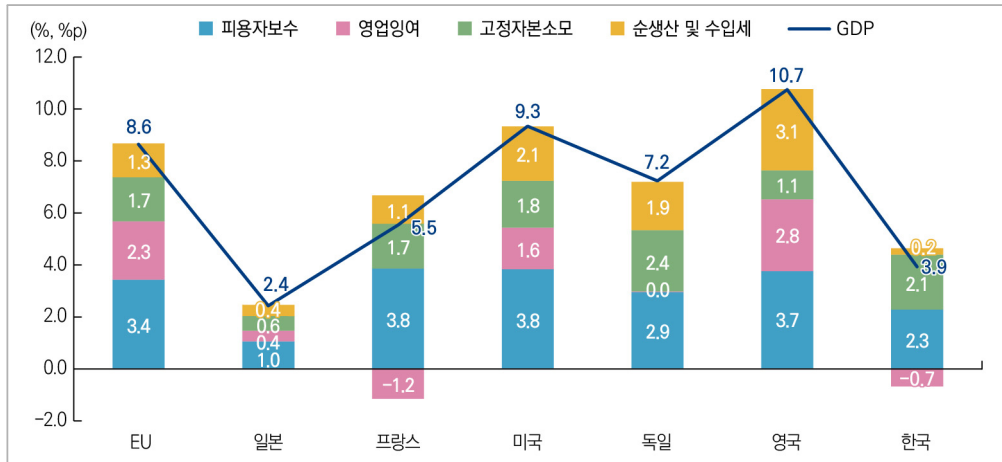
- 주: 1) OECD는 영업잉여와 고정자본소모를 합산하여 총영업잉여(Gross operating surplus and gross mixed income)로 발표하지만, 한국은행 분배국민소득과 동일한 구성의 비교를 위해 자본계정의 고정자본소모(K1MS1)를 적용하여 구분
- 2) 일본은 2021년 기준

자료: OECD statistics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hurgh@assembly.go.kr, 6788-4749)

2022년 주요국의 분배국민소득 항목별 기여도를 비교하면, 한국은 성장률은 일본 다음으로 낮았지만 피용자보수와 고정자본소모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10% 내외 성장한 영국과 미국은 피용자보수와 순생산 및 수입세의 기여가 높았으며, 영업잉여의 기여도 높았다.

그림 III-2 | 주요국의 2022년 분배국민소득 기여도 비교



주: 1) OECD는 영업잉여와 고정자본소모를 합산하여 총영업잉여(Gross operating surplus and gross mixed income)로 발표하지만, 한국은행 분배국민소득과 동일한 구성의 비교를 위해 자본계정의 고정자본소모(K1MS1)를 적용하여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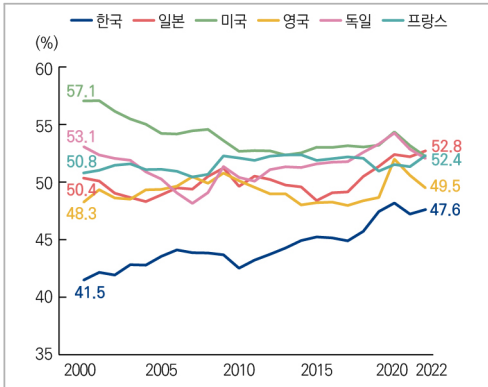
2) 일본은 2021년 기준

자료: OECD statistics

분배구조는 각 년도의 경제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배국민소득 항목을 장기시계열로 비교하면 국가별 생산요소간 분배구조 변화가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2000년 이후 2022년까지 주요국의 피용자보수 비중은 50% 근처에서 등락하였다. 2010년 초반까지 하락추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반등하여 2022년에는 미국을 제외하고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는 피용자보수 비중이 상승하였다. 한국의 피용자보수 비중은 2000년에 41.5%에서 2022년 47.6%로 큰 폭 상승하였고 추세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자본의 몫으로 분배한 총영업잉여<sup>41)</sup>의 비중은 꾸준히 하락하였다. 일본도 총영업잉여의 비중이 43.4%에서 39.3%로 하락했으며 프랑스도 35.7%에서 34.1%로 하락했다. 반면 미국은 2000년 37.4%에서 2022년 41.4%로 자본에 분배된 몫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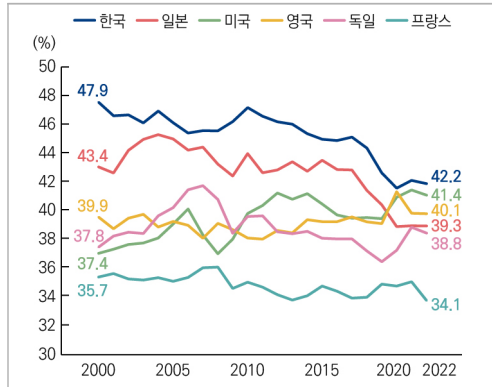
41) 총 영업잉여(Gross operating surplus)는 고정자본소모(consumption of fixed capital)와 영업잉여(operating surplus)의 합이다.

| 그림 III-3 | GDP 대비 피용자보수 비중



자료: OECD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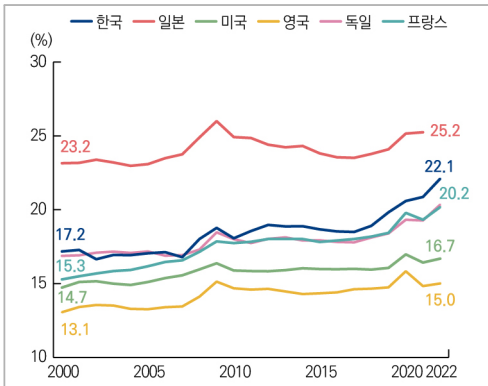
| 그림 III-4 | GDP 대비 총영업잉여 비중



총영업잉여는 고정자본소모와 영업잉여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정자본소모는 추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상승폭이 다소 높아졌다. 그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영업잉여 비중이 최근 빠르게 하락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유일하게 고정자본소모와 영업잉여 비중이 함께 증가한 국가이다. 이는 미국은 자본에 분배된 몫이 늘어나고 있으며, 해당 소득이 고정자본형성 증가와 법인의 소득 증가 등으로 분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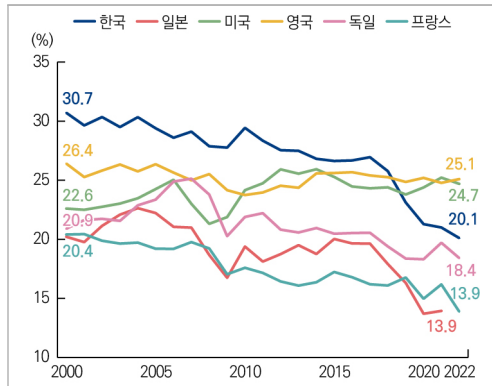
일본은 고정자본소모와 영업잉여가 모두 감소하면서 특히 영업잉여의 연간 감소율도 높았다. 일본을 포함하여 프랑스와 독일, 한국은 2010년대 후반부터 영업잉여가 빠르게 감소한 반면, 미국과 영국은 GDP 대비 영업잉여 비중이 25% 내외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 그림 III-5 | GDP 대비 고정자본소모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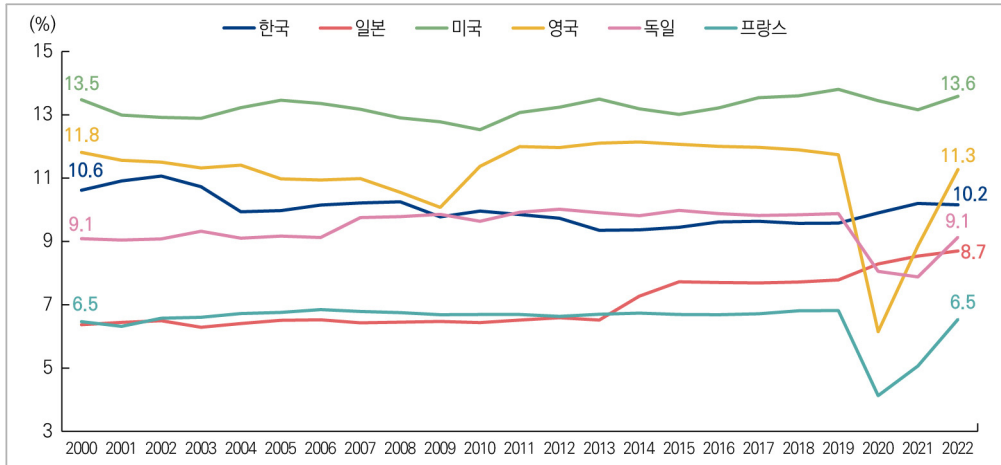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istics

| 그림 III-6 | GDP 대비 영업잉여 비중



간접세인 순생산 및 수입세의 비중은 프랑스가 13.6%로 가장 높고, 영국은 11.3%, 한국은 10.2% 였다. 미국은 직접세 비중이 높고 간접세 비중이 낮은 편으로 2022년에도 가장 낮은 6.5%를 기록했다.

그림 Ⅲ-7 | 주요국의 GDP 대비 순생산 및 수입세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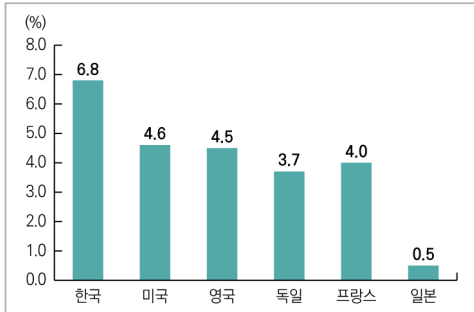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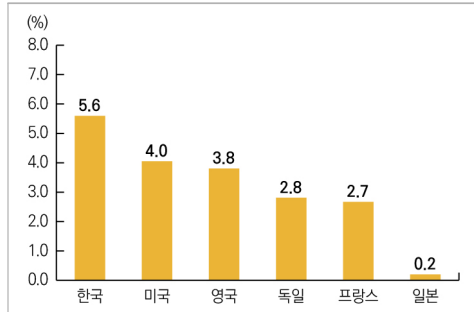
## [BOX 5] 주요국 고정자본소모 증가와 고정자본형성

주요국의 분배국민소득 구조를 비교한 결과 고정자본소모의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웃도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특히 한국은 GDP대비 고정자본소모 비중이 2000년 17.2%에서 2022년 22.1%로 4.9%p 높아졌다. 동 기간 고정자본소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6.8%로 명목 GDP 성장률 5.6%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 뿐 아니라 미국도 고정자본소모 증가율이 4.6%로 명목 GDP 성장률 4.0%보다 높았고,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고정자본소모 증가율도 명목 GDP 성장률을 초과했다.

Ⅰ 고정자본소모 증가율 Ⅰ



Ⅱ 명목 GDP 성장률 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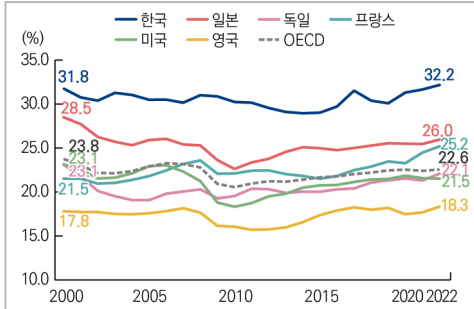
자료: OECD

고정자본소모는 고정자산이 일정기간 동안 생산에 사용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 감소분을 의미하며, 현재의 생산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해야하는 비용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즉 고정자본소모 비중이 높다는 것은 현재의 생산능력이 저하되지 않고 생산이 이루어지는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고정비용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국가별로 고정자본소모를 구성하는 총고정자본형성과 그 구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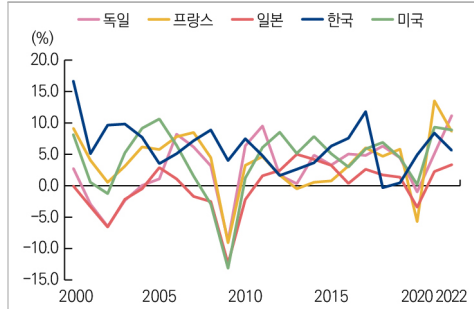
고정자본소모는 고정자본형성과 개별 자산의 연령별 가치감소분에 따라 결정되므로,<sup>42)</sup> 건설자산, 설비자산, 지식재산생산물과 같은 자본재형태별 고정자본형성의 성장률을 함께 검토해볼 수 있다. 한국은 OECD 주요국에 비해 GDP 대비 총고정자본형성의 비중이 높고 성장률이 높았다. 2022년 기준 총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의 비중(GDP대비 %)은 한국 32.2%, 일본 26.0%, 프랑스 25.2%, OECD 평균 22.6%, 미국 21.5%, 영국

18.3%였다. 이는 2000년 이후 지속적인 흐름으로 2000년에도 우리나라의 총고정자본형성 비중이 OECD 평균보다 8.0%p의 차이로 높았다. 2000년 이후 총고정자본형성의 연평균 증가율도 한국은 5.7%로 미국(3.9%), 프랑스(3.4%), 독일(2.6%), 일본(-0.2%)을 상회하였다.

Ⅰ GDP 대비 총고정자본형성의 비중 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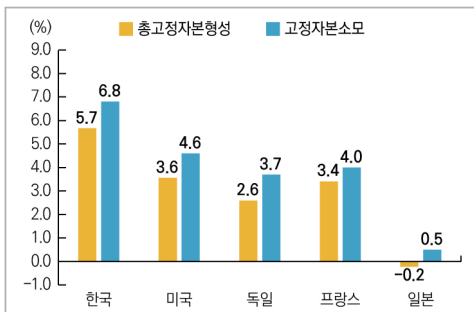
Ⅰ 주요국의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Ⅰ



주: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명목 LCU 기준으로 산정  
자료: 세계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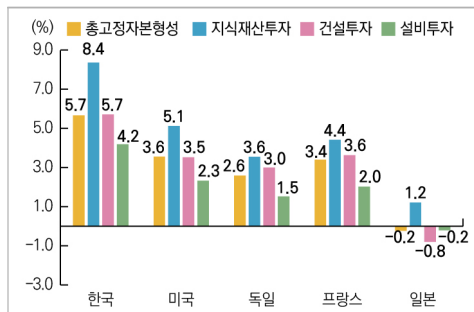
2000년 이후 주요국의 총고정자본형성을 자본재형태별로 구분하면, 대부분 국가에서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증가율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보다 높았다. 특히 한국은 지난 20여년동안 지식재산생산물 증가율이 주요국 대비 꾸준히 높았으며,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감가상각률이 가장 높은 자본재라는 점에서 한국의 최근 고정자본소모 증가율을 설명할 수 있다.

Ⅰ 고정자본소모와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Ⅰ



자료: OECD

Ⅰ 자본재형태별 증가율 Ⅰ



42) 우리나라는 고정자본소모의 산정시 개별자산의 가격이 효율 패턴을 반영하여 하락한다고 가정한 효율평가법을 이용하고 있다. 효율패턴은 개별자산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성 감소 양상을 의미한다. 자산의 내용연수와 할인율은 연령-가격함수의 형태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할인율을 4%로 가정한다.

## 제2절 주요국의 분배국민소득 전망

### 1. 미국

미국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는 소득부문 전망을 소득발생에 맞춰 매년 10년 전망치를 발표하며, 수정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반영하여 수정 전망의 근거를 제시한다.

유럽 국가의 소득전망과 달리, CBO의 경제전망은 재정전망과 함께 발표되며, 재정 수입과 지출에 활용되는 변수를 중심으로 한다. 이 중 분배국민소득 관련 전망치로는 피용자보수와 기업이익(corporate profit)<sup>43</sup>, 그 밖에 임대수입과 투자수익 등이 있다. CBO는 피용자보수의 주요 항목인 ‘임금 및 급여(wages and salaries)’와 ‘국내 기업이익(domestic corporate profits)’이 연방정부의 세수기반으로 세입 전망에 활용되는 점을 밝히고 있다. CBO는 세입으로 4개 항목을 전망하는데, 개별소득세, 급여세, 법인세 그리고 기타이다. 각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기준 8.8%와 5.9%, 2.0%, 0.8%로 예상되어, 임금 및 급여와 기업이익은 미국의 주요한 세입기반에 해당한다.

표 III-1 | 미국 의회예산처의 소득 전망과 세입 전망

(단위: GDP 대비 비중%)

	2023	2024	2025
세입기반(Tax bases)			
임금 및 급여(wages and salaries)	43.2	43.5	43.8
국내 기업이익(Domestic corporate profit)	9.9	9.7	9.6
세입(Revenues)			
급여세(payroll tax)	6.0	5.9	5.9
법인세(corporate tax)	1.6	2.0	1.7

자료: CBO, *Economic and Budget Outlook*, 2024.2. p.2, p.5

43) 기업이익(corporate profit)은 현재 생산에서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세전이익과 배당금, 미분배 이익도 포함한다.

2024년 2월 발표된 의회예산처의 전망보고서는 피용자보수의 2024-2027년 증가율이 노동 참가율 하락과 실업률 상승, 임금 상승률 하락 등으로 다소 낮아지지만, GDP 성장률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2023년 말 기준 GDP 대비 피용자보수 비중은 55.9%에서 2027년 말에는 57%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피용자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금 및 급여는 소득세 전망에 이용된다. 법인세 전망에 활용되는 기업이익은 2024-2033년 GDP 대비 비중을 지난 전망의 8.0%에서 9.3%로 상향하였다. 따라서 동 기간 법인세 수입도 약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림 III-8 | 미국 피용자보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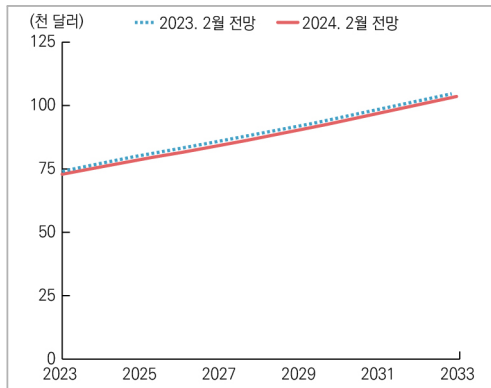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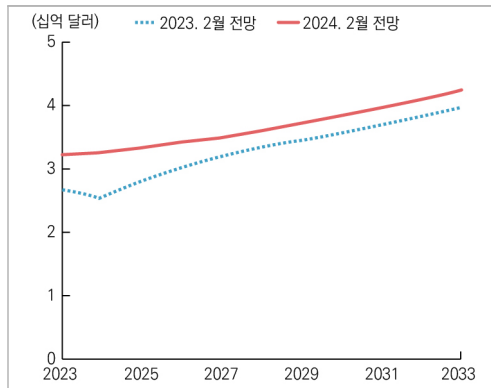


그림 III-9 | 미국 기업이익 전망



자료: CBO, *Economic and Budget Outlook*, 2024.2

미국은 상세한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SNA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독자적인 체계의 국민계정을 작성하고 있으며<sup>44)</sup>, 분배국민소득 항목의 전망이 세입기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확한 활용도를 갖는다.

44) 미국은 SNA가 아닌 NIPAs(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기준에 따라 국민계정을 편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국가와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국 국민계정 편제 기관인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 BEA)은 SNA 기준에 따라 재편한 국민계정을 별도로 발표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SNA상 미국의 임금 및 급여 합계액(2021년 기준 10조 3008억 달러)과 NIPAs상 임금 및 급여 합계액(2021년 기준 10조 3126억 달러)은 동일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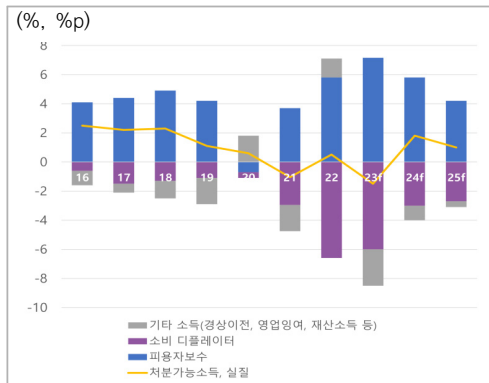


## 2. 유럽국가<sup>4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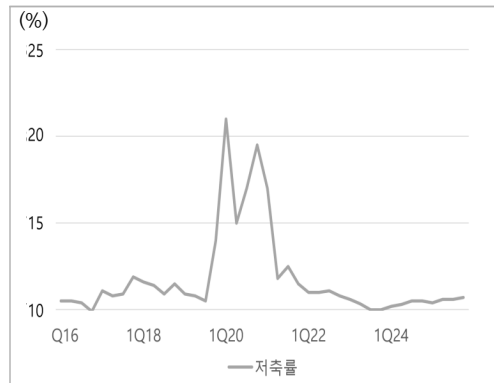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유엔의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를 사용하는 유럽의 경우 피용자보수를 중심으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을 전망한다. 국민계정체계를 작성하는 각 국의 중앙은행이 대체로 전망을 담당하며, 영국만 독립기관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과 피용자보수, 총영업잉여를 전망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독일 중앙은행은 매년 향후 3년에 대한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한다. 분배국민소득과 관련한 전망 항목으로는 피용자보수,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저축률 등이 있다. 특히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을 피용자보수와 그 외 소득으로 구분하여 전망한다. 이때 피용자보수 외 소득은 경상이전, 영업잉여, 재산소득을 의미하지만 항목별 구분을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가계의 소비지출을 별도로 전망하여 저축률 전망치도 발표한다.

|그림 III-10| 독일 처분가능소득 전망



|그림 III-11| 독일 저축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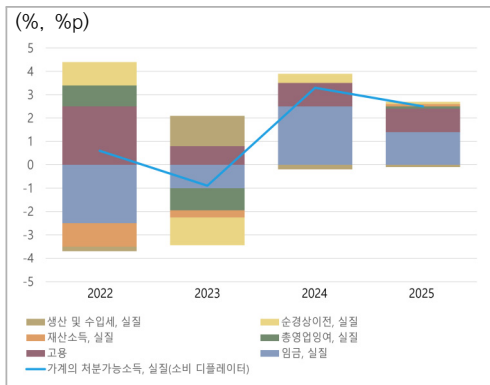
자료: Deutsche Bundesbank. *Arduous recovery amid high and only gradually easing inflation - outlook for the German economy up to 2025*. 2023, p.9.

독일 중앙은행의 처분가능소득 전망은 노동시장 변화에 기반하여 가계의 처분가능소득과 저축성향, 저축률 등을 통해 민간소비를 전망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 점에서 오스트리아도 유사하다.

45) 본 장의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보고서(지인엽 외, 「분배국민소득 통계의 개선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2023)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오스트리아 중앙은행(Oesterreichische NationalBank: OeNB)은 매년 2회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한다. 오스트리아의 경제전망은 분배국민소득 항목인 피용자보수와 총영업잉여(gross operating surplus), 순생산 및 수입세를 전망하며, 고용과 임금, 가계 저축, 가계의 재산소득, 순 경상이전(net transfer)을 별도로 전망한다.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임금 상승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강한 증가세와 정부의 지원으로 가계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이 0.6% 상승했으며, 2023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관련 지원<sup>46)</sup>이 사라지면서 실질 소득 증가율은 마이너스가 되어, 소비가 보다 강하게 감소했어야 하지만, 저축률이 7.4%로 줄어들면서 처분가능소득의 감소 효과가 다소 상쇄되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2024년 이후에는 강한 고용시장의 효과로 가계 소득이 증가하겠지만, 저축률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역사적 저축률 수준인 9.4%에 가까워지면서 소득 증가분이 전부 소비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같이 처분가능소득은 저축률과 함께 전망함으로써 민간소비 전망에 활용될 수 있다.

| 그림 III-12 | 오스트리아 가계 처분가능소득 전망



| 표 III-2 | 오스트리아 저축률 전망

	2022 2023 2024 2025 (%)			
가계의 처분 가능소득	0.6	-0.9	3.3	2.5
가계의 소비 지출	4.9	-0.2	2.3	1.6
저축률	8.4	7.4	8.2	9.0

주: 저축률 = 1 - 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

자료: Oesterreichische NationalBank. (2023). *ECONOMIC OUTLOOK for Austria from 2023 to 2025*. p.8.

46) 오스트리아는 '기후 보너스'와 인플레이션 보상의 일환으로, 연금생활자와 실업자들에게 임시지원금(temporary payment)을 제공하였다.

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은 매 분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한다. 분배국민소득 관련 전망 항목으로는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기업이윤(corporate margin), 저축률, 실업률 등이 있다. 프랑스의 가계 처분가능소득은 1인당 소득을 의미하며 피용자보수를 나타내는 임금과 고용, 정부로부터의 경상이전과 사회보장수혜, 이자 및 배당소득과 임대료를 의미하는 기타소득으로 구성하여 전망한다. 또한 가계 저축률과 비금융기업의 수익률(non-financial corporation margin rate)도 전망하고 있다.

그림 III-13 | 프랑스 처분가능소득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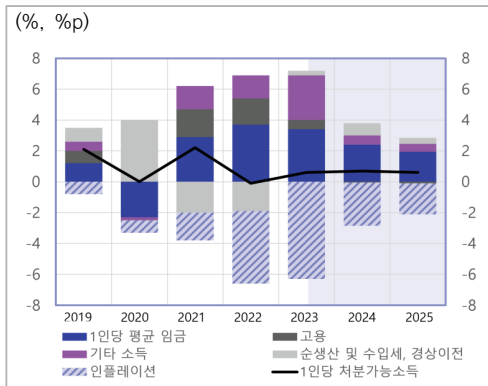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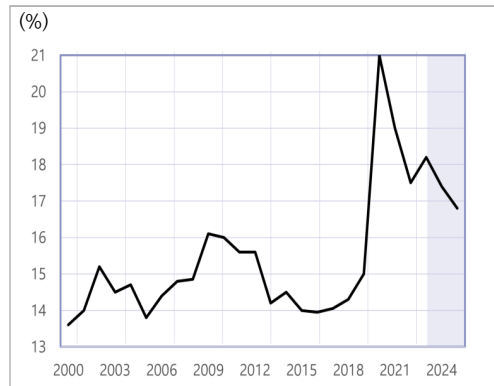


그림 III-14 | 프랑스 가계 저축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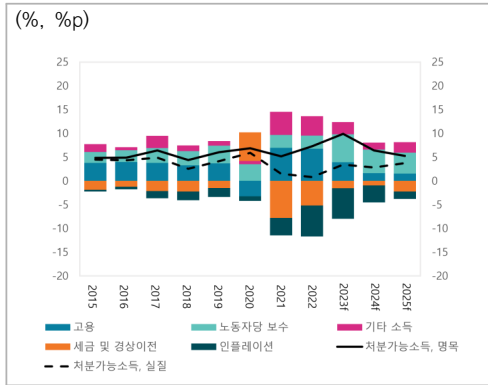


자료: Banque de France. (2023). *Macroeconomic projection - September 2023*. p.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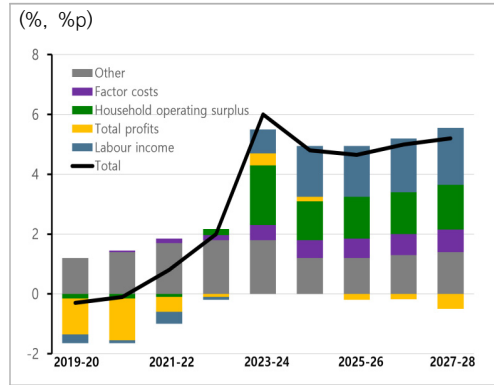
아일랜드는 중앙은행이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분배국민소득 관련 전망 항목은 처분가능소득, 피용자보수(임금 수준 및 고용), 실업률, 고정자본형성 등이 있다. 아일랜드의 처분가능소득 전망은 가계로 한정되지 않고 국가경제 전체를 포함한다. 처분가능소득의 구성은 피용자보수와 기타소득, 경상이전 및 간접세이며, 명목과 실질을 모두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물가상승률이 높았던 2022년의 경우 피용자보수와 기타소득이 상당히 양호했음에도 실질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0에 가까운 값으로 낮아졌다.

영국은 예산책임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OBR)이 매년 경제전망보고서를 발간한다. 저축률 추이는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2023년 보고서에는 처분가능소득 중 가계영업잉여, 노동소득 등 소득의 비중에 대한 전망치가 포함되어 있다.

| 그림 III-15 | 아일랜드 처분가능소득 전망



| 그림 III-16 | 영국 처분가능소득 전망



자료: Central Bank of Ireland. *Quarterly Bulletin Q3 2023*. 2023, p73.  
Office of Budget Responsibility. (2023).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November 2022*. p.49.

주요국의 분배국민소득 전망 사례는 전망의 목적 설정에 따라 전망변수와 전망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분배국민소득 통계는 모든 OECD 국가에서 발표하고 있는 반면, 분배국민소득의 전망은 국가별 활용도에 따라 일부 항목을 중심으로 발표하고 있다. 분배국민소득 전망에 있어서 미국과 유럽의 전망은 다소 차이가 있다. 유럽연합 및 영국의 경우 처분가능소득 전망을 통해 민간소비와 저축으로 이어지는 흐름에 초점을 두고 있다. GDP 전망에 필요한 경제적 근거를 확보하는 일환으로 처분가능소득의 변화를 통한 민간소비와 저축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주요 관심사로 본다. 미국 CBO의 소득전망은 재정전망에 주 목적이 있다. 소득의 종류별 전망을 통해 향후 세수를 보다 구체적으로 예측함으로써 재정정책의 변화를 파악하고 재정전망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을 별도로 전망하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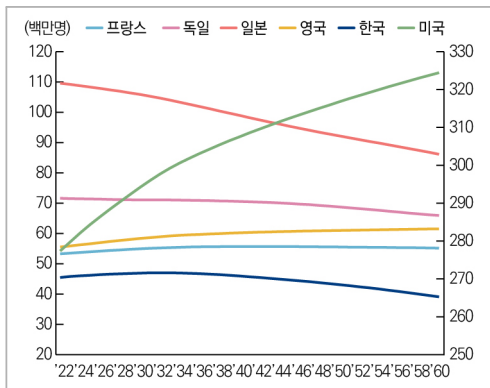
소득부문 전망은 전망변수의 활용을 경제전망과 재정전망 중 어느 쪽을 고려할 것인가에 따라 전망의 방향에 차이가 있으며, 전망을 위한 변수의 기초통계 확보 여부에 따라서도 전망 여건에 차이가 있다. 재정전문기관으로 세입전망의 기반정보를 위해 분배국민소득의 항목을 전망한다면, 미국과 같이 소득원별 상세한 통계의 확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 제2장 노동가능인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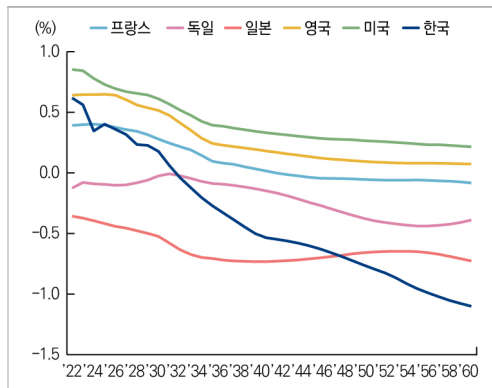
노동가능인구는 전체인구 중에서 15세 이상의 인구를 말하며,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인구이다.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주요국에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동가능인구의 총량과 증가율, 연령별 구조변화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3)와 UN 및 OECD의 자료를 통해 한국 및 주요국의 노동가능인구의 변화 추세를 제시하였다.

UN의 전망에 따르면 독일과 일본의 노동가능인구수는 감소율의 등락은 있으나 지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영국과 미국의 경우 증가율은 점차 둔화할 예정이나 노동가능인구수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영국과 미국 모두 노동가능인구의 상승 전망은 대부분 이민 유입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노동가능인구는 2030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하지만,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으며, 이후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 그림 Ⅲ-17 | 주요국 노동가능인구 수 전망



| 그림 Ⅲ-18 | 주요국 노동가능인구 증가율 전망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한국), UN population projection(주요국)

고령화가 진행 중인 국가의 경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전체 인구 중에서 핵심노동인구<sup>47)</sup>의 비중 또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인다. 주요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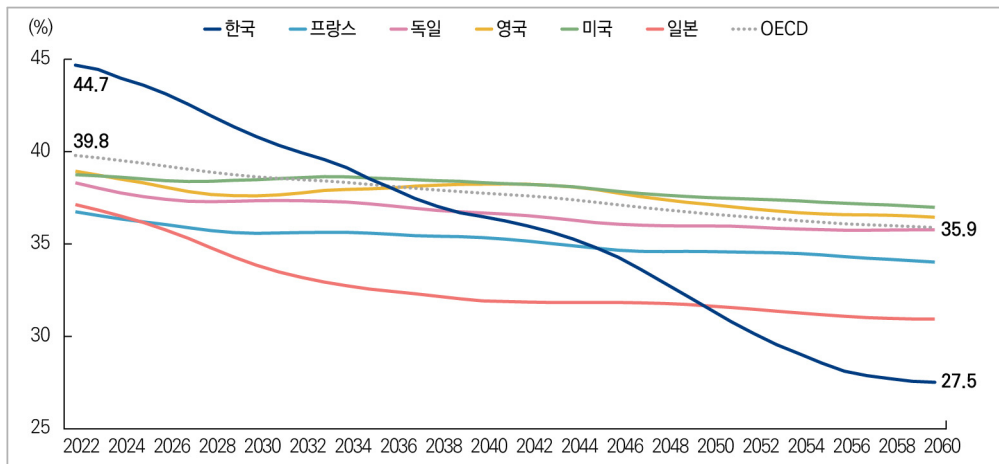
이소연 경제분석관(soynlee@assembly.go.kr, 6788-4752)

47) 핵심노동인구란 노동 공급이 가장 활발하고 생산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의 인구로 25~54세 노동인구를 뜻한다 (세계노동기구 ILO)

국가들을 살펴보면, 핵심 노동인구 비중은 현재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국가별로 변화의 양상에는 차이가 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의 선진국은 2060년까지 2022년 대비 2~4%p 하락, 일본은 약 7%p 정도 하락하나 30%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의 전체인구 중 핵심노동인구 비중은 2022년 현재 44.7%(38개국 중 2위)로 2040년에는 36.5%, 2060년에는 27.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며 2060년에는 OECD 38개국 중 유일하게 20%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sup>48)</sup> 이는 합계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른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의 가속화로 핵심노동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것에 기인한다.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이 채 안 되는 유일한 국가이다.

그림 III-19 | 주요국 핵심노동인구 비중 전망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한국), UN population projection(주요국)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의 5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2년 33.4%로 2040년에는 49.6%, 2060년에는 58.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일본은 2022년 기준 5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42.2%이며, 2060년에는 한국과 함께 5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현재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과 미국도 약 30%의 비중으로 55세 이상 인구가 있으며, 2060년에는 대부분 OECD 국가의 55세 이상 인구 비중이 40%에 이를

48) 한국경제연구원, “핵심노동인구 국제비교”, 2022.03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5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우리나라는 특히 고령자 비중의 증가속도가 높으므로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55세 이상 노동가능인구를 세분하여 전망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기반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 그림 III-20 | 주요국 55세 이상 인구 비중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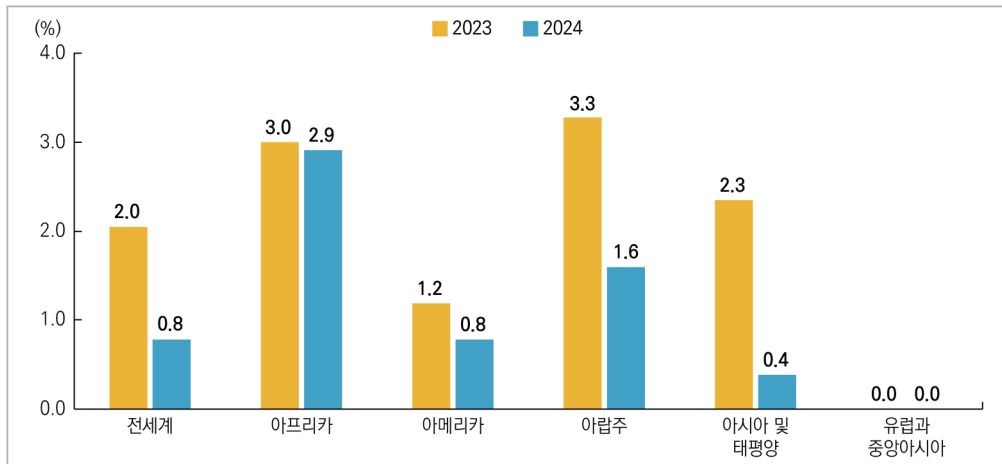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한국), OECD(주요국)

## 제3장 고용 전망

2023년 여러 나라가 인플레이션 증가와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과 같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상황을 겪었다. 경제활동인구는 노동 공급의 규모를 나타낸 지표로써 노동가능인구의 증가세 둔화 및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증가 등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세도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전 세계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2023년 2.0%에 비해 1.2%p 하락한 0.8% 증가를 기록할 것이다.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을 살펴봐도, 모든 지역에서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하락이 전망되며, 특히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은 2023년 2.3% 대비 1.9%p 하락한 0.4%가 전망되어 가장 높은 하락 폭이 예상된다.

그림 III-21 |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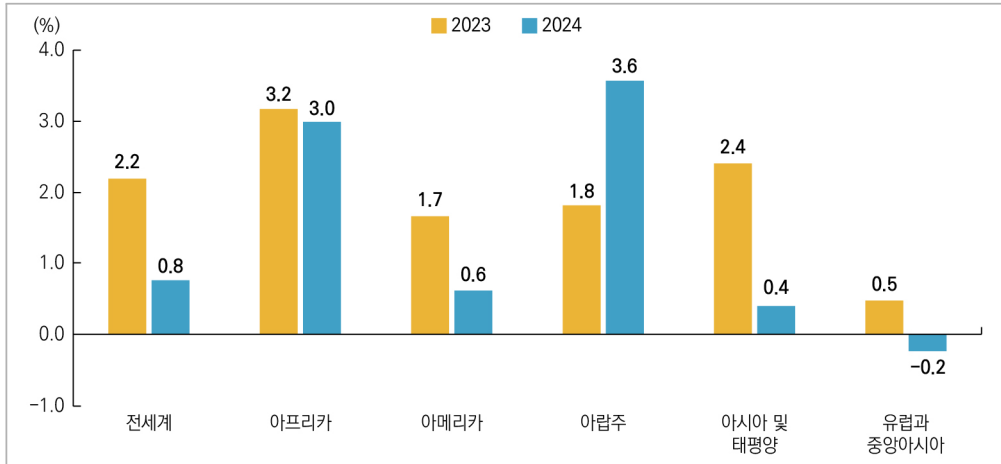
자료: ILO,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Trend 2024*, 2024

2024년 취업자 수 증가율도 전 세계적으로 2023년(2.2%) 대비 1.4%p 하락하여 0.8%로 전망된다. 아랍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2023년 증가율보다 2024년 취업자수 증가율 하락이 예상된다.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은 2023년 2.4% 대비 2.0%p 하락한 0.4%로 전망되며,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은 2023년 0.5% 증가율에서 2024년 감소세(-0.2%)로 전환이 전망된다.

이소연 경제분석관(soynlee@assembly.go.kr, 6788-47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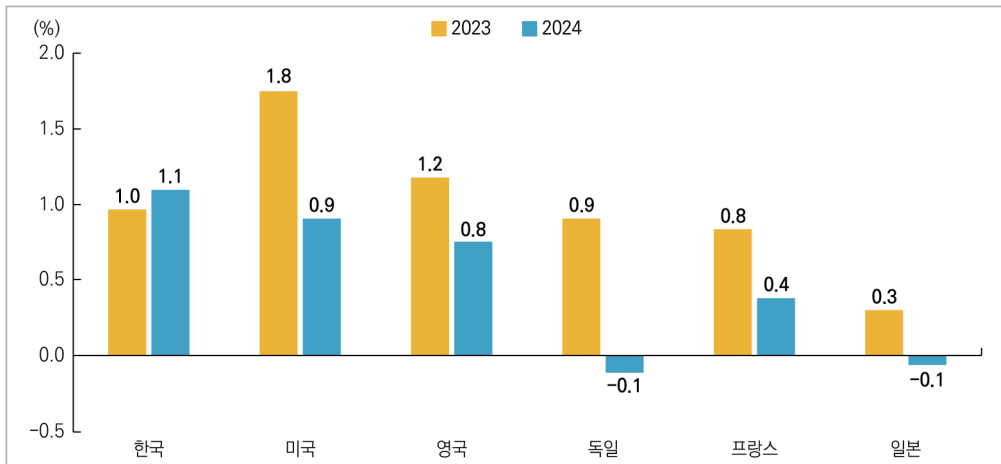
| 그림 III-22 | 지역별 취업자수 증가율 전망



자료: ILO,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Trend 2024*, 2024

OECD 국가 고용 전망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코로나 충격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둔화된 양상을 보인다. OECD 국가 전체 고용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업률은 대부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림 III-23 | 주요국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전망



주: 한국 자료는 2023년 실측치(통계청)와 2024년 전망치(국회예산정책처)를 제시하였고, 그 외 국가들은 OECD의 2023~2024년 전망치를 제시하였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OECD *Employment Outlook 2023*

2024년의 한국의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전년 대비 0.1%p 증가한 1.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구 증가율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미국의 2023년 경제활동인구는 1.8% 증가하여 제시된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4년 증가율은 전년 대비 0.9%p 하락한 0.9%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미국은 노동가능인구 증가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소비 증가세가 둔화하여 고용이 감소하는<sup>49)</sup> 등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인구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2023년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1.2%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임금 인상 압력 영향으로 고용이 감소하면서 2024년 증가율이 축소되어 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대비 0.8% 증가가 예상된다.

일본의 노동시장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인력 부족이 심화하여 2024년에도 인력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sup>50)</sup> 일본의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전년(0.3%) 대비 0.4%p 하락한 -0.1%로 전망된다.

독일은 지난해에 비해 노동수요는 감소하였으나 경제활동 인구감소 등 인구의 감소 현상으로 인해 지속적인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독일의 경제활동인구는 2023년 0.9% 증가하였으나 2024년에는 1.0%p 하락하여 하락세(-0.1%)로 전망된다.

2023년 프랑스의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0.8%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2024년 큰 폭으로 축소되어 일본, 독일 다음으로 낮은 0.4%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기준 6개 국가 중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프랑스는 노동시장의 호조로 임금상승이 가속화되고 있고, 일자리 창출이 둔화하면서 프랑스의 실업률은 2023년 7.2%에서 2024년에도 7.2%로 안정세를 보인다.

한국의 2023년 실업률은 2.7%를 기록하였으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0.4%p 상승한 3.1%로 예상된다. 일본의 실업률은 팬데믹 기간 중 일시적으로 3%를 상회하기도 하였으나 점차 하락하여 2023년 2.5%를 기록하였으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0.1%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의 실업률은 꾸준히 낮아졌으며, 다른 유럽국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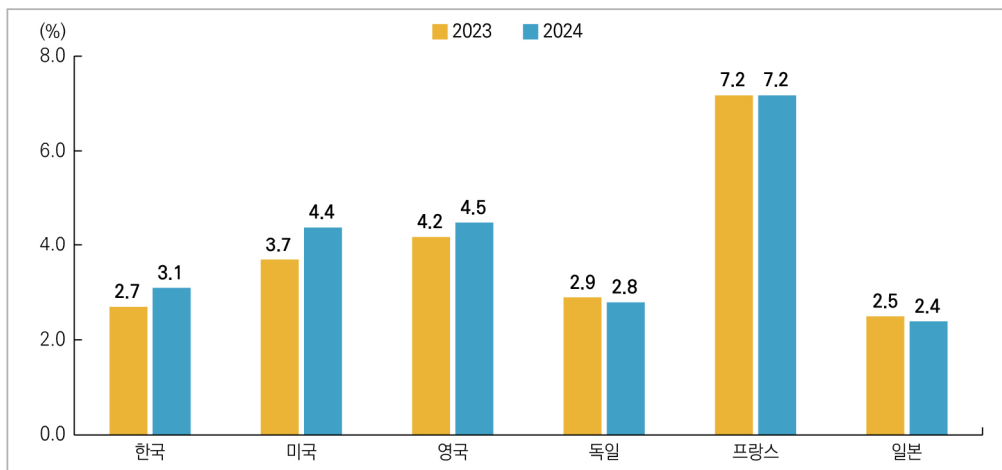
49) KDI, 「2024 세계경제 미리보기」, 2023.12.

50) 한국은행 동경사무소, “일본의 노동시장 동향 및 전망”, 2023

낮은 수치를 보인다. 2023년 취업자 수가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높은 서비스 부분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였다.<sup>51)</sup>

미국은 긴축적인 통화 상황에서 소비 및 투자 둔화로 기업의 고용 유인이 감소하여 2024년 신규 취업자수 증가세 둔화가 이어지고 실업률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sup>52)</sup> 미국과 영국의 실업률은 2023년에 각각 3.7%, 4.2%였으나 2023년에는 4.4%, 4.5%로 전년 대비 상승이 전망된다.

| 그림 III-24 | 주요국 실업률 전망



주: 한국 자료는 2023년 실측치(통계청)와 2024년 전망치(국회예산정책처)를 제시하였고, 그 외 국가들은 OECD의 2023~2024년 전망치를 제시하였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OECD *Economic Outlook 2023*

51) 한국노동연구원, “2024년 독일 노동시장 전망”, 2024

52) 한국은행, 「2024년 미국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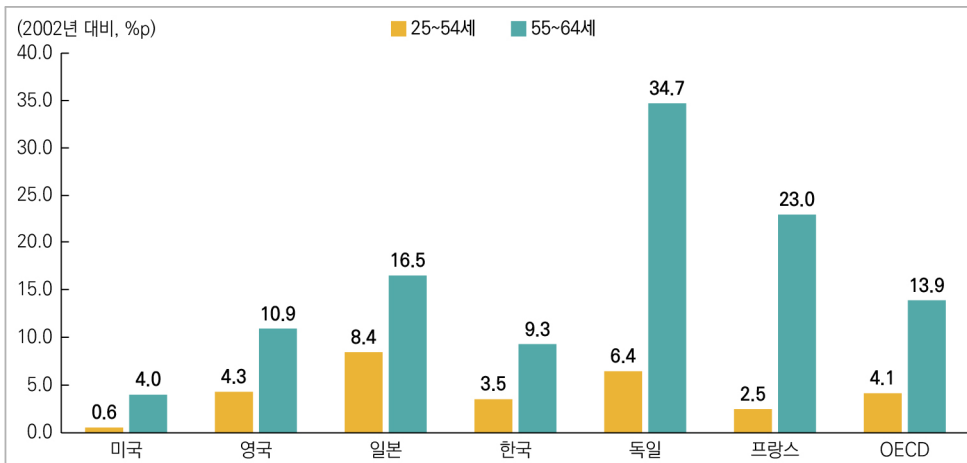
## [BOX 6] 주요국 연령별 고용률 변화

OECD 국가들의 고용시장을 살펴보면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력 활용방안의 중요성이 드러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조기 은퇴하던 경향이 역주행하고 있으며, 55~64세 노동가능인구 비율이 높아짐과 더불어 고용률은 지난 20년 동안 상승추세에 있다.

주요국 노동가능인구 연령별 고용률 변화를 보면, 55~64세 고용률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022년 OECD 국가의 55~59세 고용률은 74.6%, 60~64세 고용률은 53.8%, 65~69세 고용률은 24.5%를 기록하였으며, 2023년 2분기에는 55~64세 고용률은 64.6%, 65~69세 고용률은 24.7%에 이른다.<sup>53)</sup>

2002년과 2022년의 연령별 고용률을 비교하면, OECD 전체의 25세 이상 54세 이하 핵심노동인구의 고용률은 75.2%에서 79.3%로 4.1%p 증가한 반면, 55세 이상 64세 이하의 고용률은 62.9%로 고용률 수준은 다소 낮으나, 2002년 대비 증가폭은 13.9%p으로 높았다. 특히 독일의 55~64세 고용률은 20년동안 34.7%p 증가하여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주요국 노동가능인구 연령별 고용률 변화(2002-2022)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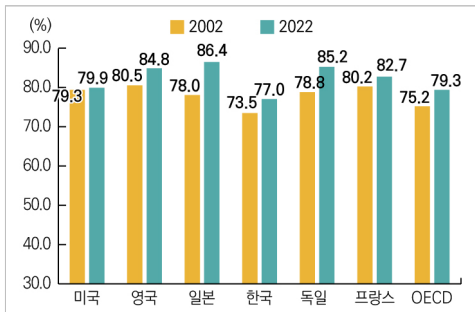


자료: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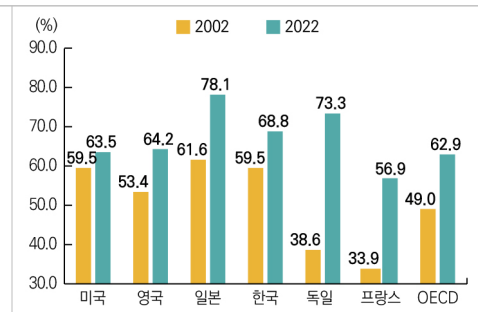
2022년 한국의 핵심노동인구 고용률은 2002년(73.5%) 대비 3.5%p 증가한 77%를 기록했다. 55~64세의 고용률은 2017년 이후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2022년 68.8%로 2002년(59.5%) 대비 9.3%p 증가하였다.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고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핵심노동인구 고용률은 2002년(78.0%) 대비 8.4%p 증가한 86.4%이며, 55~64세의 고용률은 78.1%로 2002년(61.6%) 대비 16.5%p 증가한 높은 고용률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독일의 핵심노동인구 고용률은 85.2%로 2002년(78.8%) 대비 6.4%p 증가하였으나, 55~64세 고용률은 73.3%로 2002년(38.6%)에 비하여 34.7%p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다. 프랑스 핵심노동인구 고용률은 2002년(80.2%) 대비 2022년 기준 82.7%로 2.5%p 소폭 증가했지만, 55~64세 고용률은 56.9%로 2002년(33.9%)에 비하여 23.0%p 증가하였다.<sup>54)</sup> 영국의 2022년 핵심노동인구 고용률은 84.8%로 2002년(80.5%) 대비 4.3%p 증가하였으나 55~64세 고용률은 2002년 53.4%에서 2022년 64.2%로 10.9%p 증가하였다.

| 주요국 25~54세 고용률 |



| 주요국 55~64세 고용률 |



자료: OECD

전체적으로 주요국에서는 핵심노동인구 고용률보다 55~64세의 고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55~64세를 핵심 인적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sup>55)</sup>이 주목받고 있다.

53) OECD, *Pensions at a glance 2023 OECD and G20 indicators*, 2023

54) FRED economic data

55) KDI, 「경제정책해설」, 2023



2024 경제전망 Ⅲ  
- 소득 부문 -  
(2024 Economic Outlook Ⅲ)

---

발간일 2024년 3월 29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디자인·인쇄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

---

ISSN 3022-7739

© 국회예산정책처, 2024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http://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0496-001627-10

ISSN 3022-7739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